

제 5 차 한 - 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

~ 「미래 지향」 과 「살아 있는 과거」 사이에서 미디어는
국교정상화 50 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무엇을 남겼는가 ~

2016 년 3 월

공동 주최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 : 일본외무성 / 대한민국 외교부

협찬 : 주식회사 롯데

차례

차례.....	i
프로그램.....	1
참가자 명단.....	3
발표 및 토론 요지.....	7
▶ 개회사.....	8
▶ 세션 1: “국교정상화 50 주년 · 70 년 보도에 대한 평가”	8
▶ 기조연설.....	17
▶ 세션 2: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일 관계”	18
▶ 세션 3: “경제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한일관계”	27
▶ 세션 4: “앞으로의 양국 정치관계”	35
▶ 기조연설.....	40
▶ 세션 5: “총괄 토론 – 재차 미디어의 역할을 생각한다.”	40
▶ 폐회사.....	47
▶ 세션 6: “학생들과의 대화” (특별세션).....	48
발표 자료.....	55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발언은 발언자의 개인적 견해에 의거한다. 또한, 본 보고서의 모든 보고자료는 원본/번역판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회의당일에 배포된 것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단, 보고서의 취지에 따라 발표자명을 삭제했으며 단순한 번역상 오류등에 관해서는 수정을 가하였다. >

제 5 차 한 - 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

— 「미래 지향」 과 「살아 있는 과거」 사이에서 미디어는
국교정상화 50 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무엇을 남겼는가—

2015 년 10 월 18-20 일 힐튼 도쿄베이
주최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 한국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

2015 년 10 월 19 일 (일)

09:30 - 09:45 개회사

NOGAMI Yoshiji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유 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09:45 - 12:00

제 1 세션 :

「국교정상화 50 주년 · 전후 70 년 보도에 대한 평가」

일본측 발표 「일한 신문 사설은 국교정상화 50 년을 어떻게 평가했나」
한국측 발표 「한일 국교정상화 50 주년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한 단상」
토론

12:15 - 13:45 오찬회

<기조연설 : SHIGEIE Toshinori (전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

14:00 - 16:00

제 2 세션 :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 - 일 관계」

일본측 발표 「안전보장 문제와 한일관계」
한국측 발표 「격동의 동북아와 新 한일관계의 모색」
토론

16:30 – 18:30 제 3 세션 : 「경제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한 - 일 관계」
 일본측 발표 「새로운 일한 협력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측 발표 「경제 시각에서 생각하는 한 • 일 관계」
 토론

2015 년 10 월 20 일 (화)

09:30 – 11:45 제 4 세션 : 「양국 정치관계의 미래」
 일본측 발표 「앞으로의 양국 정치관계」
 한국측 발표 「한일 정치관계의 미래」
 토론

12:00 – 13:30 오찬회
 <기조연설 : 유 홍수 (주일본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

13:45 – 15:45 제 5 세션 : 「총괄토론 : 미디어의 역할」

15:45 – 16:00 폐회사 :
 유 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NOGAMI Yoshiji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16:30 – 18:30 제 6 세션 : 「학생들과의 대화」 (특별세션)
 일본측 발표 「‘역사란 무엇인가’ - 저널리즘의 현장에서 역사문제를 생각한다」
 한국측 발표 「한일관계의 미래」

19:00 – 20:30 만찬회

※ 전 세션 비공개 (非公開) 형식이며, 채텀하우스룰 (Chatham House Rule) 이 적용되었음.

참가자 명단

※경칭 생략

일본

NOGAMI Yoshiji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AKITA Hiroyuki	니혼케이자이신문 논설위원
IDEISHI Tadashi	일본방송협회 (NHK) 해설주간
OTA Masakatsu	교도통신사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
OKONOGI Masao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KAZAMA Shin	후지 TV 외신부 편집위원
KIKUCHI Tsutomu	아오야мага쿠인대학 교수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KUBOTA Ruriko	산케이신문 편집위원
SAWADA Katsumi	마이니치신문 기자 / 전 서울지국장
SUZUKI Yoshikatsu	시사통신사 해설위원
TAKAGI Tetsuo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전무이사
HAKODA Tetsuya	아사히신문 논설위원
FUKAGAWA Yukiko	와세다대학 교수
MORI Chiharu	요미우리신문 도쿄본사 논설위원
YAKUSHIJI Katsuyuki	토요대학 교수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YAMAGAMI Shingo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소장대행

<기조연설자>

SHIGEIE Toshinori	전 주대한민국 일본국특명전권대사
-------------------	-------------------

<옵서버>

ONO Keiichi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장
KITA Ritsuo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 일한교류실장 / 지역조정관

NISHI Yusuke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 사무관

<담당자>

IIMURA Tomoki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NAKAYAMA Reiko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조수

한국

강 인선

조선일보 논설위원

강 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 승일

연합뉴스 TV 보도국 부국장

김 기정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 교수

김 대홍

KBS 탐사보도팀장

김 지윤

아산정책연구원여론·계량분석센터 연구위원

박 진원

SBS 문화과학부장

박 철희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 교수

심 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오 태규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이 미숙

문화일보 국제부장

이 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

이 호철

인천대학교정치외교학과 교수

임 영서

MBC 기획취재부장

조 홍민

경향신문 국제부장

진 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황 영식

한국일보 논설실장

<기조연설자>

유 홍수

주일본국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 >

유 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최 현수	한국국제교류재단 동경사무소장
문 재승	한국국제교류재단 비서관
이 중민	한국국제교류재단글로벌네트워크팀 대리

< 옵서버 >

김 민철	주일한국대사관 참사관
박 시은	주일한국대사관 통역관
배 종인	주일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오 경찬	주일한국대사관 2 등서기관
윤 주경	주일한국대사관 비서관
이 원경	주일한국대사관 선임연구원

발표 및 토론 요지

개회사

Yoshiji NOGAMI(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70년이라는 큰 고비의 해를 한일 양국이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2011년부터 5년간의 프로젝트로 추진해 온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도 드디어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 이 5년 사이에도 한일 양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고, 더욱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정세도 크게 변모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미디어는 국교 정상화 50년을 어떻게 맞이하여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부제에도 있듯이 과거의 총괄도 겸한 것이다.

회의에 참여한 멤버 각각이 과거의 회의를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에는 그런 지식 축적에 새롭게 전개 중인 상황도 가미된 유익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유 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국교 정상화 후, 한일 간에는 다양한 교류가 있었지만 이 다이얼로그처럼 양국의 언론인이 주체가 되어 대화를 하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회의는 유례가 없으며 그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양국의 정상회담 개최도 공개적으로 거론되게 되었으며, 양국 관계의 미래에 희망의 빛이 드리워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양국 국민의 관계이다. 그리고 국민 차원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특히 미디어가 담당하는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미디어가 국민 간에 오해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은 순식간에 확산되어 버리며, 이 다이얼로그는 그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양국 언론인의 인적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션 1: “국교정상화 50주년 · 70년 보도에 대한 평가”

일본측 발표 “한일 신문사설은 국교정상화 50년을 어떻게 평가했나”

일본의 경우, 한일기본조약 체결 50주년인 6월 22일 전후의 사설에서는 많은 신문이 평소의 2배 가까운 지면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거론했다. 그 논조로 특징적이었던 것은 어떤 신문도 한국을 비판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10년 전의 국교 정상화 40주년 경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니치 신문의 경우,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계유산 조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박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대립을 초래한다”라고 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는 아사히 신문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외교 책임자이면서 일본을 제3국에서 비판하는 고자질 외교를 계속해 왔다”고 이름을 거론하여 비판했다.

한국 비판을 서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본에서 이른바 “한국 피로”라고 하는 현상이 일반인도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냉전종식의 결과 또는 한국이 민주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라는 것이 일본 신문의 공통 인식일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신문에도 그 구조적 변화에 관한 설명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50년 전의 한국은 일본에서 보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듯한 작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으로 봐도 일본은 한국의 1.3배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매우 수평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국일보에도 비슷한 지적이 보인다. 더욱이 한국의 신문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보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일의 차이가 지적되고 있지만, 확실히 중국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한일의 논조에 상당히 차이가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한국의 신문 사설을 보면 50년 전의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불만이 눈에 띄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만 하는가? 양국 미디어의 현황 인식과 주장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 아베 정권 및 박 정권이 된 후, 한 번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현상이 좋다는 의견은 볼 수 없다고 단언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관계 악화도 중앙일보의 사설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경중은 있다고 해도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아일보에도 “한국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쓰고 있다. 한편 일본의 신문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비정규직 고용문제, 또는 경제문제 등으로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음을 강조하고, 그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감으로써 신뢰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조가 많은 것 같다. 즉 양국에 신뢰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서는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를 편입한 것이 1905년 2월 22일로 한창 러일전쟁 중에 있었고, 거기서 3차에 걸쳐 한일협약이 있었으며 더욱이 1910년의 한일보호조약이 이어진다. 따라서 다케시마는 일본에 빼앗긴 최초의 영토이며 러일전쟁은 그 계기가 되었다는 식으로 언급되는 일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이런 견해가 나온 것은 한국에서도 최근의 일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러전쟁’을 ‘러일전쟁’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데이터베이스로 그 단어를 검색해보니 2010년부터 2014년의 5년간 34편이 나온다. 또 ‘다케시마’, ‘식민지 지배’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사는 105편이나 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인 2000년부터 2004년의 5년간을 들여다 보면 ‘다케시마’와 ‘러일전쟁’이 포함된 기사는 불과 3편으로, ‘다케시마’와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기사는 4편 밖에 없으며, 90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2005년에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그에 반발한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전쟁도 불사’ 등을 말한 것의 영향을 분명히 엿볼 수 있다. 한국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론을 개발한 결과로 나온 말이라는 것이 될 것이다.

한국측 발표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한 단상”

최근 일본의 사이타마 현에 취재하러 갔을 때의 일인데 한국에서 온 취재진이라는 것을 안 현지의 어떤 남성으로부터 “그럼 당신도 반일 기자인가요?”라는 말이 던져졌다. 일본 사회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한국인이자라면 무조건 일본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반일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끼게 되어 슬펐다. 특히 아베 정권이 된 후에는 이런 종류의 불행한 오해를 초래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골치 아프게도 그것이 한일 양국 국민에 상호작용하여 한국에서도 일본인 전체를 “무반성 주의자”라고 보는 현상을 볼 수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도식이 강화되는 것 자체가 한일관계에 있어서 염려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디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일관계가 최악이라고 하는 가운데, 기념할 만한 국교 정상화 50 주년을 맞이하는 2015 년 초의 한국 미디어의 심경은 “불안한 기대감”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1 월 1 일 한국일보의 사설에서는 “신년을 맞이하는 국가적 결의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일 정치관계의 전면적인 회복이다” 라고 하는 논조 아래,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출구로서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해결 과정의 입구로서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고 하는 긍정적인 제언이 나왔다. 즉,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의식이 한국사회에 충만해 있었다는 것이며, 미디어는 그것을 선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토대를 흔드는 일본 발 “격랑” 이 세 번 왔다. 아베 담화의 발표,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대한 반응, 그리고 안보 법안의 통과이다. 이 때문에 한일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복잡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우선 아베 담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는 거부하면서 제 2 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사죄를 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미국을 따로 분리 대응하는 것 같은 어조가 사용된 것에 한국 미디어가 주목하여 “이것이야말로 아베 정권의 진정한 의도가 아닌가” 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이유이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아베 정권이 초래한 화근의 씨앗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러일전쟁에 관해서 담화 속에 특히 상징적으로 언급된 “식민지 지배를 받은 많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줬다” 라는 문언에 관해서도 한국 미디어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두 번째 “격랑” 이 된 것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관한 움직임이었다. 한국 미디어에서는 “한국 정부가 능동적인 외교를 보였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한미일의 협조에 균열을 초래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두 가지 의견을 동시에 볼 수 있었지만, 그 중에는 “한국과 중국에 의한 대일 압박효과가 있다” 는 뉘앙스로 보도한 곳도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 일본측이 반발하고, 그에 대해 한국측도 더욱 비판하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이 한일의 대립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보 법안의 통과에 관해서는 “이 상황을 잘 활용해야만 한다” 고 하는 미묘하게 차분한 논조로 반응한 한국 미디어도 있었지만, 그런 의견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 일본”, “급선회하는 일본” 이라는 주장이 먹혀들게 되고 말았다. 조금 강한 어조지만, 안보 법안이라는 이슈는 “반성 없이 질주하는 일본” 이라는 전통적인 프레임을 강화하는 작용을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 그것들을 전제로 하여 미디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실을 생각하면 미디어가 기능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좁고 얽아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 상태에서 다시 출발을 할 필요가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한일 상호간의 “긍정적인 움직임” 을 미디어가 민감하게 파악하여 확장하는 노력을 하는 것, 결국은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토론

일본측 발표자: 한국측 발표에서 지적한 “세 번의 격랑” 에 대해서 저도 매우 큰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베 담화에 있어서 러일전쟁의 평가가 한국의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사였던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의 군국주의에 관심이 모아졌다고 하는 점에서 양국의 문맥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 하에 있었던 많은 아시아·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줬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본 국내의 일반적인 인식과 그렇게 엇갈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물론 그것이 무조건 훌륭했다라는 것은 아니다. 인도의 네루 전 총리가 소년시절에 러일전쟁의 일본 승리 뉴스를 접하고 매우 감격했다고 하는 일화는 유명하지만, 나중에 와서 그 때는 감격했었지만 결국은 새로운 제국주의의 난폭한 나라가 출현한 것뿐이었다는 듯한 말을 남긴 사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아, 일본 사람들도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한국측의 인식방식에 대하여 위화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측 참가자: 앞으로의 마스크 보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양 발표자의 생각을 묻고 싶다.

일본측 참가자: 아베 담화라는 것은 총리측의 발상으로서, 일의적으로는 국민을 향한 메시지이며, 국민이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는 전제로 이른바 시바 료타로 사관에 따라 발표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메이지의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 성공하여 영광을 쌓아 간다. 하지만 점점 잘 진척되지 않게 되어버리고, 특히 만주사변은 그런 영광을 부수는 계기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전제가 있었고, 게다가 외국에서도 주목되는 4개의 키워드,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과” 를 담아서 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측 참가자: 우선은 일본측 발표에 있었던 러일전쟁과 독도문제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싶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연관시켜 생각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틀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한일 간의 독도 논쟁을 돌아 보면, 제 1기의 논쟁은 50년대에, 그리고 제 2기의 논쟁은 70년대에 있었고, 러일전쟁과 독도의 관련성은 이때부터 많이 지적되었다.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책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학자 가지무라 히데키 교수의 논문 및 저서를 통하여 이 문제를 접한 기억이 있다.

두 번째 점은 한국측 발표자의 분석에 있었던 올해의 한국 미디어의 대일 보도 자세에 대한 것이다. 연초에는 순진한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아베 담화, 중국 전승절, 안보관련법의 성립이라는 세 가지 큰 장애에 의하여 그 기대감이 좌절되었다고 하는 취지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며칠 전의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선은 한중일의 정상회담을 열고, 그런 다음 한일관계에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세 가지의 “격랑” 이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은 시각 및 관점의 차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일본측 참가자: 작년 회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의 대중(對中) 자세의 문제이다. 그때까지 한국은 역시 대중 편향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으나, 작년의 논의 결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선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커졌고, 또 분단국가이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중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중국 쪽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 편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측으로서는 참을 수 없을 거라는 식으로 이해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방금 전에 “중국과 한국이 접근하는 것이 일본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진다” 는 보도도 있었다고 하는 보고를 들으면 약간 걸리는 것을 느낀다. 중국을 이용하여 일본에 압력을 가한다고 하는 발상은 역사문제에서의 협력이 그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한국 외교의 일관성이 흔들려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일본측 참가자: 일본측 발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 국교 정상화 50 주년을 맞이하는데 있어서 일본측 논설의 특징 중에 하나로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주목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 미디어에서는 자주 중국에 대한 한일의 자세가 한일관계의 악화에 큰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치를 모르겠다.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왜 한일 관계의 악화와 연결되는지 조금 보충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국측 참가자: 미디어 관계자가 아니므로 이른바 “매스컴의 이웃” 으로서 제 3 자적인 관점에서 발언한다. 우선 일본측에 대해서지만 여론 악화의 배경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자주 언급된다. 일본측 발표에서는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 더욱이 파워 밸런스가 변화하여 한국에 자신과 여유가 생긴 점, 이 세 가지가 일본의 미디어 및 여론의 악화 원인이라 여겨지고 있었지만, 그럼 실제로 세 가지 요인이 일본 정부 내부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미디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결과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리더십에 어떤 제약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고 단순화하여 구조적인 변화가 여론 악화로 연결되었다라고 해버리면 너무 단순화되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다음은 한국측에 대한 것인데, 일본 내부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한국에 대한 시선이 엄격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한국의 미디어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면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의 세계유산등록 문제는 일본 국내에서는 매우 큰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되어 “한국과의 관계를 이 이상 유지해봐야 어쩔 도리가 없다” 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일본의 여론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전달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한일 정상회담만 해도 일본 국내에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보도를 보는 한, 한국 미디어는 그 분위기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마저 느끼게 된다.

일본측 참가자: 안보법제가 세 개의 “격랑” 중의 하나로서 한국의 대일자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온당한 내용으로 그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일본측의 관점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 요점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정적인 행사에 그친다는 것이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공격당한 것 만으로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요건을 만족시킨 상태에서 더욱이 추가적 요건으로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위협당하거나, 또는 일본 국민의 일정 권리가 근본적으로 뒤집어질 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한국의 미디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하나 예로 들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유엔 헌장의 51 조에 따라 모든 유엔 가맹국에 어떤 추가적 요건도 부과하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은 한국전쟁 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였고, 한국은 베트남 전쟁 때 집단적 자위권을

완전히 행사했다는 점을 추가해 두고 싶다.

한국측 참가자: 한일관계를 다루는 회의에서는 대부분 어느 쪽도 자신의 모자라는 부분보다는 상대의 오류를 지적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측이든 일본측이든 상대방에도 문제가 있지만 자신들에게도 고쳐야만 할 부분이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대표 선수” 로서가 아니라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공통인식 아래,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이라는 의식을 전면에 내세우는 편이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안보법제에 관해서는 일본 국내에도 젊은이나 주부 사이에 비판이 있으므로 일본 미디어도 뉴스로 크게 다루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비판과 일본에서의 비판은 성격과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한국 미디어는 그 점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비판이 있다,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반대파가 내외에 퍼지고 있다” 고 인식해 버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 주년을 둘러싼 보도에서도 일본을 잘 아는 기자와 그렇지 않은 기자와의 차이가 큰 것이 현황이다. 양국의 신문을 전체로 보면 서로에게 있어서 이해 못할 표현이라든가 위화감이 있을 것 같은 표현이 산발적으로 보인다. “전쟁 가능한 나라, 일본” 등, 너무 단순화된 제목 및 사물의 관점은 서로 수정해야만 한다.

일본측 참가자: 안보법제에 관한 사설을 예로 들자면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도구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국 방위에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전쟁법안이며 전쟁으로 이어지는 터무니없는 법안이라는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폭주,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일본을 보는 불안감” 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이 정치적 폭주라는 관점을 피력한 것은 조선일보의 사설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함께 풍부한 시민사회에 옹호된 민주주의 국가지만, 그런 가운데 권력의 폭주라는 관점에서 안보법제에 불안감이 있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수년간은 정기적으로 수상관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데모 모습을 보러 가는데, 한국측의 발표를 듣고 특히 감명을 받은 것은 “최악의 한일 관계인 지금 미디어의 역할은 보통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는 지적이다. 일본에서 반 아베를 주장하는 데모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가하는 “보통 사람들” 은 굳건히 단결하는 조직이 아니다. “전쟁법안이다” 라고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원전 정책 및 기밀보호법을 보면서 참가하는 사람도 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에서 참가하는 사람도 있다.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보통 사람들” 의 목소리는 가지 각색이며, 한국 미디어에는 그런 것을 알고 난 후에 한국에 피드백 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한국측 참가자: 6 월 22 일의 국교 정상화 50 주년으로부터 아베 담화가 나오기까지의 시기는 다양한 갈등은 있었지만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체 국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상황 아래서 발표된 아베 담화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체념, 포기와 같은 반응이 보였다. 더 이상 아베 총리에 기대해봐야 어쩔 도리가 없다는 분위기에 휩싸였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측은 그냥 짜증을 내면서 일본을 일축한 것은 아니다. 8 월 15 일 광복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아베 담화를 일부 수용한다고 하는 뉘앙스가 나왔다. 다시 말해 한국은 매우 억제적인 태도로 대응한 것이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대한 참가에

대해서도 한국으로서는 대통령이 참가할 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일본에서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중국으로 갔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해, “아베 담화 발표를 끝낸 아베 총리가 중국에 가서 전승절에 참가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한국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고 생각하여 행사 참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배경이 있었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남북 관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중국이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지만 한중일의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실마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의 산물이었다고 생각된다. 일전의 한미 정상회담장에서도 박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개최에 노력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8월 15일 이후의 한국 움직임의 근본에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감정적인 대립과 같등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일회담을 실현시켜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식이며, 미디어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 안보관련법의 취급 방법이 상징적인 예가 되겠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은 한국 미디어의 보도 방식의 일관성 문제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이른바 스트레이트 뉴스와 논설에서 뉘앙스가 다른 경우가 있다. 스트레이트 뉴스를 쓰는 기자 중에는 일본의 내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련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쓰지 않으면 안 되겠지” 라는 느낌으로 내용 가감을 많이 하는 기자도 있을 것이며, 혹은 정말로 일본을 모르는 채 쓰는 기자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솔직한 인상이다. 또한 스트레이트 뉴스와 논설의 정합성은 물론이거니와 논설에서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이전의 논설에서는 이렇게 썼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것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신문사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으며, 원래 사태의 변화에 따라 주장도 변화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신문사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한일관계는 리더, 관료, 미디어, 국민 간에 악순환이 일어나서 그대로 올해를 맞이해 버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지금, 미디어가 “이런 것을 쓰고 싶다” 는 의향에 따라 데이터만 수집해 와서 그것을 조각 맞추듯이 조합해서 기사를 작성해 버리는 것은 일반적인 의식과는 괴리되어 버릴 위험성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동아일보와 아사히 신문이 국교 정상화 50년에 맞춰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를 보면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을 안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 한국에 친근함을 느끼는 비율은 30% 정도, 한편 한국에 지인이 있거나 자신이 직접 여행 가서 그 정보를 토대로 한국을 안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는 50% 이상이 한국에 친근함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와, 미디어가 과장이나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현황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나쁜 사슬에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지를 생각해 보면, 가장 간단한 것은 미디어가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닐까?

일본측 발표자: 발표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 단적으로 답변한다. 우선 다케시마 문제와 러일전쟁을 연관 짓는 경향에 대한 것으로, 이것이 50년대부터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 이후에 다케시마 문제가 계속 언급되지 않고, 따라서 한일 간의 큰 현안사항이 아니었던 시대가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미디어가 자주 다룬다는 지적인 “구조적 변화” 라는 견해인데, 최근에는 한국 미디어에서도 논설 등에서 다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반드시 일본적인 관점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

또한, 중국에 관한 한일의 인식 차이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차이가 어느 쪽인가 하면

일본측에 더 불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고 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센카쿠 열도 등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있으므로 더욱 더 그런 관점이 된다. 일본측에서 보면 한국이 중국에 접근하는 상황은 표현은 좋지 않지만 일종의 건방진 모양으로 보일 것이다.

다음은 파워 밸런스의 변화에 따른 영향인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파워 밸런스 변화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버블 붕괴 후의 국제 경제 속에서 일본의 상대적인 퇴조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는 중국의 존재가 너무 커져 있으므로 그런 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인식하고 있으며, 거기서 오는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원인, 예를 들어 한국의 민주화에 따른 변화와도 관련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주화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입을 열 수 없었던 것,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의 영향과 민주화 운동을 담당했던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람들이 사회의 다양한 곳에 흩어져 간 것의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중(對中) 인식의 차이가 원인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친선 및 파워 밸런스의 변화가 일본측의 리더십과 여론에 대해서 매우 큰 제약을 주어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한국이 민주화와 파워 밸런스의 변화로 자신을 얻은 것, 그것이 한일관계 변화의 원인일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방금 전에 “아베 총리에 대한 체념 감각”이라는 한국측의 발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이 점에 관해서는 서로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측의 입장에서 한국측이 보여주는 행동 중에는 일본적인 감각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가끔 나오는데, “한국의 문맥에서는 그렇게 되겠지”라고 어느 정도 딱 잘라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관점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측 발표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어떨지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이 상대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양국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창구로서 한일 양국의 미디어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미디어가 충분히 그 역할을 달성하는 것을 저해하는 조건 및 환경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저해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일본 정치의 힘으로, 특히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관련될 것이다. 그것도 위안부 문제와 같은 개별 이슈가 아닌, 과거의 역사 전체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일본측에서는 시바 료타로 사관에 대한 말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메이지 유신부터 만주사변에 이르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영광의 역사”라고 인식하는 통념 속에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역시 저항을 느끼게 된다. 만일 일본이 이러한 역사관을 강조한다면 한일 간의 갈등은 풀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물론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 미디어측에도 과제와 문제점이 있지만, 문제점의 하나인 “일본 사회를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의 한가지 원인으로 실은 이 역사 인식 문제의 심각화라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그 문맥에서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출석과 안보법제에 대한 이해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일어난 것은 그것을 전달하는 한국 미디어에 책임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그 이외의 원인도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미디어측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 자세를

규정하는 힘에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세션 1 사회자: 한국측의 발표에 있었던 문제 제기 중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조금 언급하고 싶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인은 제 2 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사죄해야만 하지만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사죄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지적이다. 그것이 마치 전략적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찌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만주사변 이후의 침략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이전의 식민지 주의에 대해서는 구미에서도 식민지 주의 그 자체를 사죄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라는 식으로 구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측 참가자: 방금 전의 발언 중에 나온 “보통 사람들” 이라는 점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시부야 거리에서 하고 있는 SEALDs 회합 등을 보고 있으면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원래 신문을 읽는 사람은 아마 데모에는 가지 않지 않은가? 데모 참가자에는 젊은 사람, 고령자, 젊은 주부층이 많으며, 일하는 연령대의 사람들은 거의 볼 수 없다. 이것은 일본 데모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18 세의 아이들이나 그 이하 연령의 아이들이 나와서 “징병제는 절대 싫다” 등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자면 왜 안보법제가 징병제인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아마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말해서 그것을 또 여러 형태로 미디어가 흘러, 그 결과 젊은 아이들이 단상에서 “자신을 징병제의 대상으로 하기를 원치 않는다” 고 외치고, 그런 흐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정치의 책임인 한편 미디어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SEALDs 가 그런 식의 논조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미디어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 미디어 관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한국측 참가자: 요령 있는 발표에 감명을 받았으며, 특히 아베 시대·박근혜 시대라고 하는 시대 구분을 함으로써 그 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의 정권이 하나의 시대를 구성한다고 하면 하나의 정권이 끝나고 지도자가 바뀌면 한 시대가 종식되었다는 사실도 되지만,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당연히 그 후에도 계속되어 간다. 아베 총리에 대한 분노가 체념으로 바뀌고 방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으나, 아베 시대, 또는 박근혜 시대가 지난 후, 양국이 극단으로 치닫던 그 시대는 뭐였을까 하고 되돌아 보고, 그것을 이후의 한일 관계의 발전에 활용해 가는 것도 지식인 및 언론인, 연구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일본측에서 한국의 스트레이트 뉴스와 사설의 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만, 경험 상, 대외관계에 관한 뉴스는 일반적으로 국제부에서 다루고, 한일관계나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정치부에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뉴스는 국내적으로 각색된다고 할까, 국내적인 이해관계나 청와대의 기대 등이 투영되기 쉬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본의 헌법 해석의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 일본에서는 헌법의 해석이 이미 변경된 것과 같은 것으로, 헌법이 개정된 것과 같은 상태이며, 그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법을 중시하고 분석적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일본에서 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이 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국측 참가자: 한국이 중국에 점차 편향된다고 하는 관점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하고 싶다. 예를 들면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 중의 하나는 한국이 미국의 리벨런스 전략의 중심축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TPP 얘기도 나왔다. TPP가 전략적인 계획이며, 미국 자신이 그것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서 “한국도 반드시 참여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한미관계, 나아가 한미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을 강조한 다음에 소위 중국 편향론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중국 정도의 경제규모를 갖는 나라가 바로 이웃에 위치할 때 반목하는 정책을 취하고자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중일관계를 봐도 표면적으로는 많은 마찰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양국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그것을 위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친중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보다도 차라리 일본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국가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국 편향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지 않은가?

기조연설

시게이에 토시노리 (전 주한대사·재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한일관계는 최근 5년 매우 악화되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올해 6월경부터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 다음 달 초에는 3년만에 한중일 정상 회의가 개최되는 것 같고, 그때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된다고 들은 바, 꼭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길 크게 기대하고 있다.

지금의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 번째는 리더의 역할이다. 지금까지의 양국에 있어서 새로운 정권의 탄생은 양국 관계를 재설정하는 기회가 되어 왔다. 또 한국의 정권에 대해서는 전반은 한일관계가 비교적 좋다고 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들어왔다. 그러나 최근 5년간에 대해서는 2가지 패턴은 작용하고 있지 않다. 배경에는 2012년 8월의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이 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2012년 12월의 일본 신 정권 발족도 언급하고 싶다. 미디어에서는 아베 총리는 극우 정치가라는 꼬리표를 붙여 강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나카소네화”라는 것이 아베 총리의 노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현실의 한일 관계는 극우 정치가라는 꼬리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인식에 묶여 버려서 양국 관계가 악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말았다.

두 번째는 과거 5년간 일본의 대한(對韓) 여론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것은 쉽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다. 여론 형성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여론과는 상호 증폭하는 관계이기도 하므로 꼭 의식하여 “좋은 뉴스”를 보도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정치부 기자분들에게는 꼭 경제 뉴스에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경제면에서는 많은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외교당국의 역할이다. 외교당국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에 따라서는 내셔널리즘과 싸우고, 국민이 흥분할 때는 반대로 냉정해지는 것이 요구된다. 외교는 항상 국민에게 인기가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을 받는 일도 있지만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네 번째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한일관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5년 전의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요소가 아니었지만, 상황은 크게 변했다. 솔직히 지금 한일 양국의 사이에서는 중국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중국의 평화적 대두는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에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 인민 해방군의 직선적인 근대화, 또는 국제 규정을 포함한 국제 시스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올해 9월 3일의 전승절 기념식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지만 큰 위화감을 품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는 화해 정신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 국제협조 정신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의 아시아 태평양은 좋은 나쁜 중국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행동 및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좋은 일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면에서는 한일 양국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의 한일 경제협력, 자원 및 프로젝트의 공동 실시 등 협력은 계속해서 진척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양국은 솔직한 토론으로 되돌아가 양국 관계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세션 2: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일 관계”

한국측 발표 “격동의 동북아와 신 한일관계의 모색”

동북아시아의 2015년은 단적으로 “격동의 동북아시아”라고 표현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단지 “격동의”라고는 해도 경제를 비롯하여 한 다른 분야에서는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점점 복잡화·다원화하고 있다고 인식해야만 하지만, 그렇다면 그 상황 아래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일본에 대해서 보도록 한다. 일본의 최근 안전보장 면의 변화를 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미국과의 외교정책이다. 오바마의 리벨런스 전략이라는 것은 만일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거기서도 이어져 한층 더 가속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으로서는 보다 거시적으로 미국의 태평양·동북아시아 전략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안전보장 전략도 변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일 간의 엇갈리는 일, 갈등도 변화해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미국에는 시큐스터(세출 자동 삭감 장치)가 있어서 국방예산도 압박되고 있으므로 카운터파트너로서 일본을 끌어 당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황이다. 그래서 패권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리벨런스 전략을 통해서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이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전략의 문제의식으로, 일본 쪽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군대를 가진 “보통 국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지금, 특히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미국에 올인 하는 외교정책은 과연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라는 점이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 고립되어 따돌림을 당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외교정책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과연 좋은 일인 것인가라는 것이다.

다음은 한국에 대해서인데, 한국의 경우는 일본보다도 더욱 복잡하다. 과감하게 요약한다면 한국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해야 할지 기로에

서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과는 경제적인 측면, 미국과는 안전보장의 측면, 이 두 가지의 축을 정교하게 왕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중 간의 갈등이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더욱 복잡한 방정식에 직면하는 것을 각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안전보장 문제 전문가 중에는 한국과 일본의 알력이 한미일의 안전보장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인식하여 한중의 밀착이 한국의 대일 강경 자세를 부추겨 세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을 근거로 결론을 내고 싶지만,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편향되어 있다는 의식이 있으며, 그것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미국·일본의 트라이앵글에도 지장을 주고, 리벨런스 전략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미국과의 동맹 강화라는 것은 상반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외부의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이 두 가지는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돌발적인 도발을 방지하고, 더욱이 북한에 직접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는 중국뿐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이 보는 것과 같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대한 관심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맥에서는 안전보장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 한국의 안전보장은 한미 동맹이 기반이지만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로써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측 발표 “안전보장 문제와 한일관계”

아베 정권의 안보외교 전략을 간단히 정리하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적극적 평화주의·가치외교라는 것이다. 구체론으로서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기반이 된다는 것, 그리고 안보법제의 정비에 따라 역지력을 향상시켜 일본의 안전보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유사 시도 평시도 아닌 그레이존 사태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태세를 갖춰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토대로 우선 미일 방위 협력의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이 표명되고, 또한 9 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을 포함한 안보 관련 법안이 성립되었다. 이것이 안보외교 전략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세 가지 정도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있다. 우선은 미일관계를 기축으로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호주·인도와 안보대화 연계협력을 진척시켜 나간다는 것. 두 번째가 동남아시아 각국 등에 대한 캐패시티 빌딩(능력 향상)의 지원. 이것으로 일본의 눈에는 매우 난폭하게 비치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나 인도 부흥지원 등에서 국제 공헌의 확대이다. 10 월 5 일에 대략 합의된 TPP 도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외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안보 면에서 보강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포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에도 접근하는 균형 외교를 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미중 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국가로서 통일전략이 여기에 관련된다. 이 점을 간과하면 한국의 대중 접근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최대의 우려 대상이므로 이것을 억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의 존재를

중시한다. 그리고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접근하는 것이 대북 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기에 들어간 이후 한중 FTA 정식 서명이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가맹, 중국의 항일전승 70년 군사 퍼레이드와 기념식전에 박 대통령의 출석 등이 이루어져 왔다.

단, 일본으로서는 그런 균형 외교에 대해서 언젠가는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한미동맹 속에서도 전시 작전 통제권의 이관 문제라든가 한국의 미사일 방위 참가문제, 그리고 주한미군에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문제 등이 있다. 특히 THAAD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동인 통일전략에 대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미중 균형 외교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 아마도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미국의 압력이 상당히 컸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중 접근 외교의 보다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지적했었던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은 당연히 큰 존재일 것이다. 단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계관에 있어서의 인식, 전략론 수립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례가 G2론이다. 한때 워싱턴에서도 대유행이었는데 미국에서 유행이 사라진 후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전략론을 세울 때 발상의 근저에 이것이 위치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 근본이 되는 인식은 장기적인 전망으로 언젠가는 쇠퇴하는 미국, 그리고 대두하는 중국이라는 구도일 것이다. 또 중국 쪽에서도 이것에 부합하는 듯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6월의 방미 시에 제기한 “신형 대국 관계”가 그것이다. 이것은 사실상은 중국판의 G2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한일 양국이 협력해 가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이라든가 한일합병으로부터 100년 남짓과 같은, 보다 시간축을 크게 한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만 중국이나 미국측의 문맥, 즉 이 2대국이 어떠한 전략,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 또는 발상의 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도 보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시진핑 체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편전쟁에서 맞본 굴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며, 그 전의 청나라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중국의 꿈”을 실제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구미를 중심으로, 나폴레옹 전쟁 이래의 200년에 걸쳐 형성되어온 가치관과 그것을 반영한 국제법을 토대로 한 질서·국제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나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그런 몸싸움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나갈 것인가 하는 현실인 것이다.

토론

일본측 참가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생각할 때, 도발행위를 자제시키는데 있어서 중국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에 관한 발언을 들어보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에 관한 중국의 이해를 얻었다”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 그것이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며, 원래 통일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현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통일은 남북 간에 하는 것인데 왜 중국의 이해·지지가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서독이 동독과 통일했을 때는 국제법상, 조약상의 전승국인 소련·미국·영국·프랑스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에 관해서는 그런 국제법 상의 구속이 없을 것이다. 기본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

한국측 참가자: 한국의 중국 편향론이 종종 거론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한일관계, 외교안보 분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미국 편향론이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한국이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자주 고자질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고자질 외교”가 자주 지적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이 최근 일본에서는 뭐든지 미국에 붙어서 맴돌고, 한국이 이러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식의, 소위 일본이 “고자질 외교”를 하고 있다는 불신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역사문제에 중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에서는 일본이 한일 간의 문제에 미국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구도가 표면화되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두 개의 “편향론”이 교차하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 가기 위해서는 역시 양국의 전문가들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 일본의 헌법학자는 “호헌파”가 전체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의 사람들은 개별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선은 헌법이라는 타입이 매우 많으며, 따라서 자위대에 관해서도 “엄밀히 말하면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이 많다. 따라서 이번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비판은 호헌파의 입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지만, 그렇다면 여당인 자민당측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비판한 근거는 무엇이었나?

1950년대에 스나가와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가 위헌인지의 여부를 두고 재판에서 다툰 경우이며, 이때도 헌법학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주일미군은 외국의 군대이므로 전력 보유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본이 자위권을 가질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헌법과 모순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어 판결에서는 양자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 판결에서는 자위권이 집단적 자위권인지, 개별적 자위권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자위권 = 헌법위반이라고 되지는 않았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자민당은 헌법 해석을 반복해서 쌓아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을, 권리는 있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종래의 해석에서 한 보 더 나아가 변경했다는 것이다. 헌법학자의 90%가 반대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반대파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헌법의 성립 과정, 정치적 배경, 헌법의 과거 판례, 그런 것들을 파악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측 참가자: 참가자 전원이 다시 한번 의식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 플러스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할 때, 다시 한번 부연하는 형태로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의 공통 이익”이라는 관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좋은 교재가 되는 것이 유럽 통합의 프로세스일 것이다. 유럽은 국가 간의 협력으로 시작해서 점차 그것을 넘는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정치적인 통합으로 향했다. 그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내다보는 동북아시아의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 이 두 명의 정치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또 한국의 대중 편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갖고 봐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전쟁 종결 후에 평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라는 두 개의

대국에 끼인 벨기에가 어떤 식으로 외교 전략을 추구하려고 했고, 또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한국 정치를 판단·평가해 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러한 관점이 어느 정도 퍼져있으며,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2012 년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박근혜 진영과 문재인 진영 쌍방이 “한국 외교의 미래는 균형외교에 있다” 고 말했다.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이용하자면 한국은 “돌고래와 같이 기동성이 있는 외교” 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도자 개인의 신조나 눈앞의 단기적 이익과는 조금 거리를 둔 관점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일본측 참가자: 일본이 한국을 볼 때에 한국에 있어서의 통일문제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이 등한시되기 쉽다는 의견은 말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여 한국의 중국 편향론을 생각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한국이 기대는 바대로 중국이 움직이지 않고, 언젠가는 한국도 기대가 깨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의 한중관계·북중관계의 동향, 특히 9 월 3 일 천안문에서의 항일전쟁 승리기념의 열병식과 10 월 10 일의 김일성 광장의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의 열병식은 매우 흥미로운 지표가 되지 않을까? 즉 9 월 3 일을 계기로 하여 중국과 북한 간에 관계 개선을 향한 교섭이 시작되어, 그 결과로서 10 월 10 일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서열 5 위인 류원산이 평양을 방문한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출석하여 극진히 대접받은 9 월 3 일의 식전은 실은 한중관계의 피크였다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왜 그런 짓국은 관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것은 1982 년의 제 12 차 당대회에서 독립 자주의 방침이 나온 이후, 남북균형이라는 방침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초에는 북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던 것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의 흐름이 시작되어 깊어짐에 따라 비중이 역전되었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버릴 수는 없으며, 중국 나름대로 밸런스를 갖고 남북의 균형을 맞춰간다는 것으로, 큰 틀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중국에 있어서의 한국은 다양한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북한과의 사이에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중국측의 인식일 것이다. 거기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의견의 엇갈림, 대립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매우 근본적인 곳에서의 대립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박 대통령 방중에 관한 한국의 신문 보도에서는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조속한 평화통일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실제로 그런 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단지 중국에서 봤을 때, 평화적 통일에는 원래부터 이의가 없겠지만 “조속한”이라는 부분은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평화통일이며, 조속한 통일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자주적인 통일이라는 것도 중국의 입장 중 하나이며 “통일은 남북이 잘 대화해서 해야만 하는 것으로 과도하게 개입하여 한 쪽을 짓누를 생각은 없다” 는 것이 지금의 태도이다. 이 입장의 차이는 간단히 좁힐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측 참가자: 한국의 아산정책 연구원이 2010 년부터 여론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연례 조사 중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일본과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 항목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즉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응하는 중국의 태도에 불신감이 높아진 시기에는 “일본과의 안전보장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라는 대답이 50%를 넘었다. 그 후,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여 한중관계가 좋아진 이후에는 그 비율이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중국 편향론에 대해서인데, 한국측 발표자의 얘기로는 여론 조사 결과 “한중 정상회담과 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의 출석을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나라의 정상과 회담하고, 그 사진이 미디어에 게재되면 대체로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과도하게 중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중국 편향론이라고 할 때에 한국 국민이 떠올리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쪽으로 진로를 정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이며, 그에 대해서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일반 레벨에서의 인식은 미국이 떠들면 몰라도 왜 일본이 떠드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이 아닐까? 그 점에 입각하면 잘 이해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안보 협력, 한미일의 안보 협력, 그리고 한중의 안보 협력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회답일 것이다. 거기에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미일 및 한일의 안보 협력이 한중의 안보 협력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 편향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정작 한국 국민에서 보면 안전보장 파트너를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꾸는 등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문제와 중국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주변국 중에 통일문제에 대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나라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관해서는 중국이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국은 통일을 위해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인은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불신감 사이에 긴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일본측 참가자: 한국측 발표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이 미국의 리밸런스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인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닐까? 이번의 안보법제와 그 전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도 원래 일본이 시작한 얘기이다. 거기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중국일 것이다. 중국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앞으로도 군사력 증강을 진행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일본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불가결하고, 이것이 일본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길일 것이다. 물론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일본에서 유사시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할까라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으며, 양국의 군 사이에는 그것을 위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동맹이 기능할지의 여부는 그때의 미국의 정치 결정이나 미국의 여론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일본이 안보법제를 새롭게 제정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정부와 국민에 대하여 “일본은 한 보 앞에 나와있다,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린다고 하는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 얘기로, 지금의 안보법제라는 것은 전후 처음으로 일본이 일본의 전쟁에 미국을 말려들게 한다는 얘기이다.

한국측 참가자: 한국의 중국 편향론에 높은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의 힘을 과장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2050년까지는 국제관계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세력 경쟁을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힘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은 수년 안에 GDP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라 얘기하고 있지만, 만일 2020년에 그렇게 됐다고 해도 그것은 3억 명이 만들어 내는 GDP와 16억 명이 만들어 내는 GDP가 동일한 액수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당으로 말하면 중국의 GDP는 미국의 5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중국의 위협이나 미중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힘을 과대평가한 견해라는 것이 되는 게 아닐까?

두 번째로서는 지금까지의 발언에서는 선택의 논리를 전제로 한 외교가 언급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미국·일본·중국이라는 불가결한 외교의 기둥이 있다. 그 셋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원래 그러한 논리는 한국 외교에 있어서 난센스이다. 세 개의 축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섬 게임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이다. 또 같은 이유에서 “균형외교”라는 호칭에도 의문을 느낀다. 균형이라는 표현 자체가 2개나 3개의 선택지 중에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측 참가자: 한국 국민은 한중관계의 현황을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개인적으로는 안심하고 있다. 중국의 현황을 보면 볼수록 내부 모순과 권력의 집중·불안정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반동으로서 여러 가지 모순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명백할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도 그렇지만 경제적 모순도 분출되고 있으며, 또 대외 ODA의 본연의 모습을 포함하여 외국·피원조국의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나라가 단선적으로 점점 상승되는 힘을 증가시켜 간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으며, 이 나라와 외교를 할 정도로 리스크가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측 참가자: 중국 편향론에 관한 네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우선 첫 번째는 한국은 역사문제에서 중국과 코얼리션(제휴) 할 일은 없다는 것. 그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는 경제, 미국과는 안전보장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 방법에 관해서도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의 한미 정상회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경제면에서도 중요한 나라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TPP 참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말해야 할 것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THAAD의 한국 배치 문제 등으로 한국이 중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전략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인내·침묵이 아니라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미국의 리벨런스 정책에 대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이 명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편향론에 기인하는 우려를 한국이 명확히 부정하여 보였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측의 의견인 것 같지만, 실은 한국은 중국을 매우 냉정하게 보고 있으며, 그것은 일반 국민 레벨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것. 덧붙여 또 하나 추가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외교는 균형외교라고 하는 견해도 틀렸을 것이다. 한국 정부도 한 번도 그런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일본측 참가자: 미국을 추종함으로써 일본이 아시아의 왕따가 된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과연 그럴까 의문이 든다. 강고한 미일동맹이 있음으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아시아에 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전의 애벗 호주 총리의 “일본은 세계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쪽 있어 왔다” 라고 하는 공동 기자회견의 발언이 그렇고, 필리핀의 아키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일본의 공헌을 평가하는 발언도 그러하며, 그러한 예는 일일이 셀 수 없이 많다. 또 일본은 이번 가을부터 전후 11 회째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는데, 방글라데시는 선행하는 비상임 이사국이면서 일본에 자리를 양보했다. 이 11 번째 비상임 이사국은 기네스 기록이며, 매회 국제사회, 아시아 각국의 신임을 얻어 선택되어 왔다는 사실을 가지고도 아시아의 왕따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의 안전보장은 한미동맹이 담보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단지 일본이 완수해야 할 큰 역할도 있다. 주한미군이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일미군, 미일동맹이 불가결하다. 이것은 한국전쟁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주한미군은 일본의 미사와 기지의 미 공군, 또는 후텐마 기지의 미 해병, 사세보 기지의 미 해군, 이들의 협력이 있어야 비로소 기능한다. 일본에서 이들 주일미군이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한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측 참가자: 일본을 알고 있는 미디어 관계자로서 한일관계는 왜 이렇게 나빠졌는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동북아시아 정세라든가 그것과 관련한 안보법제라든가 하는 영향보다는 아베 정권의 출범 이후, 국가 이익보다도 정무적인 판단이 먼저였던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베 정권의 발족 이후, 헌법 해석의 변경이나 안보법제를 위한 준비작업 과정에서 21 세기 구상 간담회 등의 사적인 자문기관의 활동이 눈이 띄었다. 이것은 법률의 규정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 아베 총리와 매우 가까운 입장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기관이며, 아베 총리의 생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국가이익이나 전체적인 안보 보장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틀보다는 정치전략의 관점, 그런 판단에 따라 안전보장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인상을 받는 것이다. 단지, 물론 아베 총리 개인에게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한국의 정치가들, 일본의 정치가들에게도 널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측 참가자: 일본에서는 한국 보도가 한결같지 못하고, 박근혜 정권의 통일 정책에 대한 보도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권의 기본 방침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지만, 이 구상에 대해서는 지적과 같이 일본 미디어에서는 별로 커버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 내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이라면 물론 공부해서 보도하지만 잘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취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한국측 참가자: 양국 간에 난무하는 단정적인 사물의 관점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해 두고 싶다. 예를 들면 일본이 아시아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견해라든가 한국의 중국 편향론이 그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들은 일반적인 사물의 관점이 아니라, 사물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워딩·레토릭(수사학)이 아닐까?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적어도 여기 있는 참가자에게는 중국 편향론과 같은 단어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동일하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외교를 하고 있다는 말투도 용어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워딩은 한미동맹의 기본 위에 한중 간의 동반자적

협력도 진척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즉, 토대는 어디까지나 한미의 동맹관계이며,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한중관계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입각한다면 중국 편향론이라는 것은 미디어를 경유하여 확산된 잘못된 용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측 참가자: 한국측도 조금 이해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이미 꽤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THAAD 미사일을 보더라도 이것을 움직이는 X 밴드 레이더는 실은 모두 일본에 있다. 아오모리 현의 샤키 분둔기지와 교토의 교탄고에 있는 교가미사키 분둔기지에 레이더가 있으며 미사일을 관제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알고 나서 미일 안전보장 관계가 한국에 대한 미군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초계함이 폭발했을 때, 그리고 연평도에 포격이 있었을 때 미국은 F22를 대량으로 가데나 기지로 이동시켰지만 이것은 일본의 방위를 위한 것과 동시에 한반도의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기도 하다. 미일동맹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물류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한국의 미디어가 더욱 보도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측 참가자: 일본이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관계를 해결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스테이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조언을 한국측의 입장에서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한일관계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인 이상, 일본은 “북한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훌륭한 실적을 올려왔다고 보고 있다. 한국에서 주로 아베 비판을 하고 있는 진보계 사람들과 야당 진영도 아베 총리의 대북 교섭 노력에 관해서는 전혀 비판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일본은 이만큼이나 대북 교섭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이라는 논조로 박근혜 정권 비판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뒤집어보면 일본은 이 “북한 카드”를 한국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해 북한을 변화로 유도하는 것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서로 연관되는 여러 문제를 일관해서 테이블에 올리는 교섭 방법도 훌륭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입각한 제재는 남겨둔 채, 일본 독자의 대북제재는 해제한다는 방법론도 국제적인 틀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아이디어이다. 또 교섭이 진행되면 북한 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현되면 북한 내부로 직접 통하는 채널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이나 한국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북한 카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미일의 협력관계도 보다 깊어질 것이다. 또 교섭이 진행되면 북한이 새로운 핵 실험을 하는데 있어서 브레이크로서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6자 회담 재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처럼 일본의 행동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공헌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한국측 발표자: 리벨런스 전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코멘트가 있었다. 우선 미국이 안보법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먼저 제의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이다. 단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도 중요하지만 미일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에 추진되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리벨런스 전략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전략이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과 평화 유지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을 담고 있는 반면,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면 중국을 봉쇄하는 도구로 전략해 버린다는 점이며, 그런 양날의 칼이라는 것도 인식해 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

다음으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고립해서는 안 된다” 라는 표현인데, 일본측 참가자의 민감한 반응에 놀랐다. 원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발표를 수정하고 싶다.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 발표자의 본의이다.

박근혜 정권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은 크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즉 한반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는 통일로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것이 있다. 더욱더 아시아에 대한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여 협력하는 것, 예를 들면 한반도에 있어서 비핵화를 실현하고 그것을 타 지역에서의 상황 개선에 연결한다는 아이디어도 있다.

일본측 발표자: 통일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에는 다른 분이 이미 대답했기 때문에 약간의 보충을 한다면, 우선 통일 대박론이 나온 배경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돌아 보면 기본적으로는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변화, 불안정화를 느꼈다는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을 보고 통일 대박론이 나온 것인데, 특히 정치적 리더의 발언이므로 거기에는 슬로건적인 의미도 있고, 레토릭(수사학) 적인 부분도 많은 것이다. 이 점은 아베 정권의 헌법개정과 동일한 것일 것이다. 또 그 아베 총리는 정권을 장기간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자신의 컬러를 나타내는 깃발로서 “헌법개정” 을 내걸었으며 그것은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였지만, 이 3년간의 과정을 보면 명백하듯이 실제로는 헌법개정이 아니라 헌법 해석의 변경으로 극복했다. 다시 말해 헌법개정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편향론” 이라는 단어의 사용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에 동감하는 반면,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다. 네이밍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고 듣는 외부인이 어떻게 파악하는지도 중요하다. 원래 언론인은 표면적인 설명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그 실태가 이렇다는 분석을 해서 기사로 쓰는 것인 이상, 어떤 용어나 표현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미디어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해버리면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가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세션 3: “경제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한일관계”

일본측 발표 “새로운 한일 협력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미디어의 보도 태도에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20 세기적 발상의 영향이 산발적으로 보인다. 경계선을 긋고 사물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그런 전형이다. 또 한국의 미디어에서 자주 보이는 글이 “수출은 승리, 수입은 패배, 수입초과는 자국의 패배를 의미한다” 와 같은 것인데, 그것에 입각해서 오랫동안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시 해왔다. 하지만 그간 한국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오히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어 왔다는 것이 경제관계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인 이해이다. 또 외자를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뿐이다.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외자에 침략당했다” 와 같은 보도가 아직도 보인다.

다음으로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눈을 돌려보자. 한일 사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시소게임이 전개되어 왔다. 2008 년의 리먼 쇼크·세계 금융위기에서 2012 년경까지의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엔저로 바뀌기 전까지의 시기에는 한국의 폭발적인 글로벌리즘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이 있었다. 한편 일본은 계속 엔고에 시달렸으며 에너지 가격도 특히 동일본 대지진 후에 폭등하여 시달렸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의 분배에 편중된 정책으로 법인세도 높게 설정되어 세계와 경쟁하기에는 매우 어려웠던 시대가 되었다. 더욱이 노동법규는 노동보호뿐이었고, 환경규제는 실현 곤란한 목표를 공언한 것이 높은 장애물이 되어 재계로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한일 2 개국 간의 FTA 가 농업 보호 문제로 실현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관세가 들지 않는데 일본에서 수출하면 관세가 드는, 즉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한국과 비교하여 모든 것이 비싸진다고 하는 악조건까지 추가되었다. 소위 “6 고” 라고 말하던 시대였다. 그런 일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국은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랬던 것이 2013 년 이후에는 마치 오셀로 게임같이 백과 흑이 뒤집혀, 한국이 옛날 일본과 같은 현상으로 시달리고 있다. 경상수지는 흑자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원저는 바랄 수 없고, 에너지는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도 있어서 지금까지와 같이 싼 에너지를 제공할 수 없다. 한국의 2015 년 재정예산을 보면 커지고 있는 것이 복지예산인데 그것은 어딘가에 재원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세금을 걷기 쉬운 것이 기업이므로 법인세도 이젠 이 이상은 낮출 수 없다. 노동개혁도 순조롭게 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환경규제도 엄격해졌으며, 여기에 또 TPP 를 미국이 비준하게 되면 미일 간 및 일본-호주 간, 일본-캐나다 간의 무역자유화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호주, 한국과 캐나다보다도 개방도가 높은 것이 되어 지금은 한국이 “6 고” 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 “6 고” 의 시소게임을 반복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되어 왔다는 것일 것이다.

더욱더 한일의 차이라는 각도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성장전략에 관한 생각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은 제조업의 모습인데, 일본의 경우 제조업이 GDP 에 차지하는 점유율이 지금은 10 몇 퍼센트밖에 없으며, 더이상 제조로 살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은 제조업에 자신이 있어 미디어에서는 “한국이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제조업으로 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자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중국의 캐치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어디까지나 자국의 사법에 의거하여 억지로 승리를 거둔다. 일본에서 보면 한국은 이런 상대와 언제까지 힘든 제조업 경쟁을 해나갈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감상일 것이다. 일본은 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제조업의 소프트화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의료에 관해서도 이노베이션의 힘과 사이버 시큐리티로 백업이 가능한 미국의 협력을 얻어 의료의 스마트화, 인터넷화를 진행해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무리하면서 TPP 에 참여했다.

낡은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한일 모두 미래가 어둡다. 역으로 발상만 바꾸면 매우 잠재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야말로 한일이라는 국경을 허물고 생각하면 세계에서 매우 높은 레벨의 산업 집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된다. 또 하나는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개혁의 경쟁” 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한일은 경쟁의식이 강하고, 산업구조도 비슷하므로 어느 한쪽이 성공한다면 다른 한쪽도 질세라 같은 것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경쟁을 활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원 공유도 중요하다. 이미 일본도 대국이 아니며,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것은 할 수 없다. 특히 인재가 압도적으로 부족하여 한국의 유학생이 일본의 일류기업에 취직하는 예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 한중일 사이에서 강점을 갖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해도 인재이며, 그것을 더욱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차기 전략적 관계로서는 리스크의 분산과 공공재의 제공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난카이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도카이 지방의 산업 집적이 큰 손상을 입기 때문에 어딘가에 백업을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지진도 쓰나미도 없고 태풍도 거의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백업용의 빅데이터를 한국에 가지고 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 한국에 있어서도 잠재적으로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있는 이상 돌발적인 전염병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과 같이 가까운 나라에 백업이 있는 것은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교류도 중요하다. 특히 작은 기업 및 지방, 시민단체, 개인, 이들은 이미 자유로이 교류하고 있지만 여기에 정부가 묘한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일이 없다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싹이 나올 잠재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측 발표 “경제 시각에서 생각하는 한·일 관계”

한국과 일본의 무역액은 2011년에 최고액을 기록한 후, 감소로 돌아섰다. 2011년 이후, 그때까지의 엔고가 엔저로 바뀌고 엔은 40%에서 50%나 평가 절하되었으므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하면 엔저로 인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 감소했다. 그 사이에 한국이 진행해 온 부품의 국산화, 장치의 국산화, 또는 수입처의 다변화의 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국에서 대일 무역적자가 그렇게 큰 화제가 안 되게 되었지만, 이것은 그런 움직임의 결과, 대일 무역적자가 40%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경제관계라고 하면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라는 요소도 중요해진다.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는 2012년에 크게 늘어난 후에 감소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일본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는 별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상을 토대로 하여 최근 한일경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세 가지를 들고 싶다. 우선은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이에 따라 정부든 정책당국이든 기업이든 각자의 레벨에서 다른 행동양식이 요구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와의 경쟁의식만 먼저 앞서고 협력하려고 하는 의식이 낮은 상태이다. 그것이 두 번째이다. 예를 들면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로 인해 좋아지면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협이라고 받아들여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일본에서도 개인적으로 “혐한(嫌韓) 경제론자”라고 부르는 입장의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 한국경제는 바로 붕괴한다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풍조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역시 혐한(嫌韓)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식으로, FTA 체결이나 동남아시아에 인프라를 수출할 때에는 경제산업성의 보고서에서도 반드시 한국의 동향이 언급되어 있다. 한국 무역의 FTA 커버율은 몇 %이며, 일본이 TPP에 가입함으로써 몇 % 상회할 수 있는가와 같은 식이다. 즉 자국의 경제의 객관적인 조건과 장래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와의 눈앞의 경쟁을 중요시하고 있어 한국은 일본을, 일본은 한국을 필요 이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진정한 시장논리를 토대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경제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제구조가 변화했다고 하면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만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세 번째이다.

다음으로 발표자 나름대로의 의제 설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우선은 고령화에 대한 대응전략이다. 한국에서도 일본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국에서 보고 있으면 의문이 드는 것은 일본이 고령화 문제의 선진국으로서 그 경험을 살려 동아시아에 기여한다고 하는 슬로건이 들리는 한편, 실태로서의 대응책인 경제산업성의 보고서 등을 봐도 구체론이 매우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개호 노동력을 해외로부터 받아들인다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욱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고령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정책, 그리고 산업의 형태, 또는 NGO 끼리의 협력 등, 일본 이상의 페이스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게는 일본에 협력하는 것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포함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공헌이 자기 자신의 이익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의 경우, 시장의 확대나 표준규격의 책정과 비용 삭감이나 오픈 이노베이션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상태는 양국의 정책당국자나 정치가는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이미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레이나 스미토모화학 등의 소재 관련 기업은 삼성이나 현대 등, 거래처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일찍부터 한국에 진출하여 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치와 비즈니스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도레이의 닛카구 사장이 “도레이에는 반일도 혐한도 관계없다. 단지 도레이의 전략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인터뷰에서 발언했는데, 이런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인재나 기술력, 그것들의 총체인 “제조력” 에 있어서 일본에 한국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협력 가능한 분야의 니즈를 파악하여 실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한일 FTA 라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태의연한 관세율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아닌, 다른 시점에서 FTA 라는 것을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일 양국 모두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재산권의 보호, 또는 투자 관련 비즈니스 룰 등, 공통의 룰을 책정해 두는 것이 쌍방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비스 관련 공통 룰을 구축할 수 있는 나라는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다시 말해 여기서도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는 시각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도식이 보인다는 것이다.

토론

한국측 참가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우선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이다. 이것은 한일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도 포함하여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도 일본도 “순혈주의” 와 같은 것에 집착하여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인 이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다. 미국이 생산을 유지하고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민이라는 요소가 있으며, 독일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 배경에도 인도적인 배려도

있겠지만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일본과 한국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를 생각할 때, 이런 이민이 그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다,

또 최근 타결된 TPP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한일의 FTA 와 TPP 의 관련성에 대해서인데, TPP 에는 현재 12 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그중에 한국이 양국 간의 FTA 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TPP 에 참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또는 이들 나라와 양국간의 FTA 를 체결하면 동일한 것인가?

한국측 참가자: 한국에서는 TPP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코멘트가 나왔으며, 이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과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거의 참여 방침을 확정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와 관련하여 TPP 교섭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으로서는 그에 따른 단점, 마이너스 부분이 맘에 걸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바란다. 또 한국이 TPP 에 추가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일본측의 경제계나 사회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떤 것인가?

일본측 참가자: 이민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민에 따른 저렴한 노동력의 수입 없이는 더 이상 고도성장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을까” 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한편, “유럽 국가의 경험을 보고 나서 거기서 뭔가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논의가 있다. 유럽 각국은 안이하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한 끝에 어떤 사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치안유지는 어떻게 될까? 사회의 일체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아닐까? 특히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라면 몰라도 한국어나 일본어 등 외국인이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가 외국인 노동력에 안이하게 의존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측 참가자: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양국의 발표자가 모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서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 새로운 협력 의제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말할 때 “일본은 이렇지만, 한국은 이렇다” 라고 국경을 기준으로 양국을 대비하는 습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 관계를 주요 산업·분야별 산업·주요 기업의 협력이라는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기업이라는 것은 만일 국가끼리 전쟁상태에 있더라도 살아남기 위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산업구조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복지정책이나 세금·조세 대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와 같은 거시적인 부분은 국가를 단위로 보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즉 기업 레벨과 국가 레벨이라는 두 가지 레벨이 아무래도 혼동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세션 3 사회자: 얼마 전에 중국이 7~9 월기, 즉 제 34 분기의 성장률이 6.9% 라고 발표했다. 이 7~9 월기의 숫자가 나온 것은 10 월 16 일이었다. 일본에서는 7~9 월기의 숫자는 보통 11 월 초순에 나오므로 약 1 개월 반의 시간차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놀랍게도 1~2 주만에 수치가 확정되어 통계가 발표되고 있다. 그전의 4~6 월기의 수치에 대해서는 무려 7 월 6 일에

발표되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신속함으로, 더욱이 계산된 듯이 목표에 가까운 7% 라는 수치가 나왔다. 이 부분을 한국의 미디어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흥미가 있다. 구미의 신문 중에는 실은 3.5% 라든가 4% 라든가 하는 매우 엄하게 시산한 곳도 있었다.

한국측 참가자: 제 34 분기 수치가 발표되었을 때 편집회의에서도 “이상하다” 는 의견이 나왔지만 느낀 것을 그대로 기사화할 수 없기 때문에 발표한 대로 수치를 보도하게 되었다. 하지만 직후의 타이밍으로 영국의 Financial Times 가 “그 거대한 중국이 이렇게 빨리 통계를 집계할 리가 없다” 라는 조사 보도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당초의 방침을 변경하여 그 Financial times 의 관점도 전달하는 형태로 기사를 구성한 적이 있었다. 많은 한국 미디어가 같은 수법을 썼다고 생각한다.

이것과는 별개로 질문이 있다. 올해의 큰 이슈 중의 하나인 AIB 에 대해서 한국은 심사숙고 끝에 가입을 결정하였지만 한편 AIB 에 회의적이었던 일본은 결과적으로 미국측에서 가입을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일본이 회의적이었던 배경에는 방금 전에 나온 20 세기형의, 진영 경쟁의 관점이 존재했는지 어떤지를 묻고 싶다.

일본측 참가자: 미일의 TPP 큰 틀의 합의 후에 그때까지는 TPP 에 대한 반응이 냉담했던 인상을 가진 한국이 바로 반응을 바꾼 것에 대해 관심이 끌렸다. 한국의 부총리가 “한국도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코멘트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TPP 의 큰 틀의 합의에서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을 묻고 싶다.

한국측 참가자: TPP 에 관해서는 교섭에 들어간 시점에서 한국도 참가 의사를 전달했지만 미국측으로부터 “타결 후의 가입도 가능하다” 라고 전달받았다고 들었다. 미디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고 있었다. 적어도 미일이 큰 틀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국이 부랴부랴 반응했다고 하는 관점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한국측 참가자: 한국 미디어의 TPP 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인데, 진보적으로 여겨지는 신문이나 경향신문에서는 TPP 참가를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신중해야만 한다는 논조를 펴고 있었다. 반면에 보수적으로 여겨지는 문화일보와 같은 신문은 다자간 협정에도 참가해야만 한다고 하는 TPP 실리론을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되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외교 안보팀과 산업 통상팀, 이 둘 사이에서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 과거의 정권,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시기에는 대통령의 주도권이 강하여 이른바 유력자의 한마디에 의사결정이 되었으나, 지금의 박근혜 정권은 그렇지 않고 내부의 의견 대립을 수습 못하면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국측 참가자: TPP 에 대해서 한국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 일본 미디어는 그런 견해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일본경제신문 등도 그런 문체로 보도했고, 그런 식으로 생각,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손을 잡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TPP 교섭을 관측·분석하고 있었지만 그 의사결정이 늦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본측 발표자: 한국 정부 내의 내정이나 논의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미디어 사이에서 그런 보도 경향이 있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단, 전에 한미 FTA 가 타결되었을 때 한국 신문의 제목이 “일본이 떨고 있다” 라고 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도 다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TPP 참가에 대한 일본의 분위기를 알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본은 한국의 TPP 참가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단, 민주당 정권 시대를 포함하여 일본이 정치와는 분리한 형태로 제안해 온 양국 간의 FTA 교섭을 한국측이 거절해온 경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특별히 느슨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일 FTA 를 해달라” 고 해도 일본이 응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 FTA 에도 TPP 의 기준이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 즉 10 년간 공업제품의 99.9% 가 관세 제로가 되는데 한국이 그것을 수용해야만 하는 조건이 붙게 된다. 양국 간의 FTA 가 주류였던 시대에 교섭을 했었다면 여러 가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지만, TPP 가 기준이 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측 발표자: 고령화에 따른 이민 문제에 관해서 유럽을 염두에 두고 “이민에 따라 사회의 일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민을 받아들여서 성공한 미국 같은 경우도 있다. 역시 신 산업을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이민이라는 정책은 경시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성장률 문제 이외에도 금융 문제가 있으며, 건설 버블 문제 등도 안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 라든지 7% 의 성장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면 10 년 후에는 시장규모가 2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를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그만큼 커지는데 언제까지 리스크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분명히 한국의 대중 투자에는 조금 과한 경향이 있지만 한편으로 일본은 너무 신중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발표자: TPP 는 교섭은 국가가 하지만 플레이어는 민간이다. 한편으로 AIIB 는 원래 국제기관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플레이어가 된다. 단 일본은 AIIB 출자자가 되지 않더라도 ADB(아시아 개발은행) 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또 중국이 계속해서 “일본도 빨리 가맹하라” 고 재촉하고 있으므로 때가 오면 상황에 따라 가입할지도 모른다. 요점은 AIIB 와 TPP 의 창립 멤버라는 우선순위에 관해서 일본에서는 TPP 가 우선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측 발표자: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그룹은 주로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논의 대상이 많이 되는 것은 다문화가정, 즉 결혼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다. 이 그룹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해서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관여하는 일이 많지만 실제로는 관할이 각 부처 간에 분리되어 있어 효율적인 케어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다양한 문화가 제도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요리를 가르치고 한국 사회에서의 생활 방법을 가르치는 동화정책으로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도 있었다. 이 다문화가정은 일시적인 체류자를 포함하여 3% 정도지만, 그 수는 매년 증가해 갈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자란 아이들 중에 군대에 들어가는 연령에 이른 젊은이도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 시간이 흘러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한국의 청년들도 취업 문에서 경쟁하는 시대가 찾아온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취업 사정도 있어서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정도 괜찮겠지”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 비판적이 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있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생각은 한국 사회에는 아직 퍼져있지 않다.

한국측 참가자: 다문화가정과 군대 문제가 나왔지만 현실 문제로서 한국은 북한과 대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젊은 세대가 군대에 들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이 점도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포인트 중의 하나이다. 특히 한국의 지방에는 다문화가정의 젊은이가 많이 살고 있다. 그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인터뷰했던 어떤 도지사가 “멀지 않아 다문화가정 출신의 아이들에게 충을 주게 된다. 그 충을 갖고 다문화 아이들이 전선에 서서 우리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침번 임무를 다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불만을 갖고 그 충을 우리 사회 쪽으로 겨눌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얘기했던 것이 생각난다. 이것이 한국의 현황이다.

세션 3 사회자: 한국측 발표자의 중국 경제에 관한 코멘트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다. “성장률 6% 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숫자가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확실히 높은 숫자라고 생각한다. 단 이것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고정자본형성을 연율 5% 정도 늘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GDP 의 50% 정도를 고정자본형성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도 5%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가계의 개인소비도 5% 이상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6% 라는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정자본형성 비율을 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구조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 고성장 시대에서 뉴 노멀 (신상태) 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주장이지만, 이런 요인들로 인해 6~7% 의 성장 자체가 이 상태로는 위태로우며, 고정자본형성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된다는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국측 발표자: 중국 경제가 그 발전 단계에서 직면하는 과제와 장기적으로 봐서 어떻게 되어 갈까라는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은 예전의 오일쇼크나 엔고와 같은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여 때로는 불황에 빠지면서도 경제성장을 계속하여 80년대 말에는 세계의 톱, 또는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물론 중국을 같은 수준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 또는 한국보다 빠른 스피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리 비합리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세션 3 사회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말에 “The economy, stupid” 라는 것이 있다. 여러 가지 일의 근본은 경제이며, 정치의 근본도 경제라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션에서는 어째서인지 경제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이 회의에서 별로 경제에 대한 논의를 해오지 않았지만, 한일관계, 아시아의 상황을 고려함에 있어서 경제의 동향은 매우 정치적인 쟁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의제에 넣었는데 좀처럼 반응이 없었다. 이것은 이것으로 한일관계에 관심을 갖는 관계자들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에피소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션 4: “앞으로의 양국 정치관계”

한국측 발표: “한일 정치관계의 미래”

현재의 한국 정계는 약 반년 후로 다가온 제 20 회 국회의원 총 선거대책으로 여야당 모두 각각의 내부에서 주도권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엔 2017년 12월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각 진영 및 각 파벌의 당내에서의 헤게모니 경쟁의 측면도 있다.

단기적 전망으로서는 총선거의 약 1 개월 전에는 “3.1 절” 이 있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4년, 그 간 대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이 깊은 기념일인 이 날, 강한 어조의 대일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조가 강하면 강할수록 보수진영의 선거운동에는 플러스가 될 것이다.

과거를 돌아 보면 문민정부 (김영삼 정권) 때는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겠다” 고 하는 발언이 나와, 대일 강경책이 취해졌고, 이명박 정권 때는 정권 말기가 되어서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정권은 계속적으로 종군위안부 문제와 “올바른 역사인식” 문제를 일본측에 제기·요구하고 있으며, 그 부작용이 지적되어도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동의 특징 중의 하나인 “원칙론” 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요구를 철회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양국의 교착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다시 말해 박근혜 정권의 말기까지를 염두에 둔 중기적 전망은 어떤가?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이 없는 한, 한일의 교착상태는 계속 될 것이다. 특히 임기 종반이 될수록 지도자의 캐릭터가 질게 드러난다고 하는 징크스가 재현된다면 교착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초기 정권에서는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는 진보정권보다도 보수정권 쪽이 대일정책이 강경해지는 부분이 있다. 만일 진보정권이 정권을 차지하는 일이 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과의 차별화라는 점에서도 대일정책의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구동태나 연도별 지지정당과 같은 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보수정권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원칙론” 이 그대로 계승되는 것은 아니고 차기 보수정권에 있어서는 한일관계가 한 번에 진전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측 발표: “앞으로의 양국 정치관계”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측의 상황을 단적으로 정리하자면 우선 일본의 자민당은 매과와 비둘기파의 결합정당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결코 매과의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민당은 출범 시에는 요시다 독트린과 기시 노부스케를 중심으로 하는 전후 회귀파가 결합한 조직이었다. 80년대, 즉 일본의 고도성장 시대에 있어서는 자민당의 대외 자세, 특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자세는 “관용” 의 시대였다. 교과서 문제에서 일본이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비둘기파뿐만 아니라 매과까지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주한 시기가 있었을 정도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권 중추를 비둘기파가 차지하던 시대가 있었다. 정권은 역사문제 등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지만 일부 각료의 망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발언이 과도하게 보도되어, 그 결과,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관계 확립이 제도화되는

때까지 이르지 못 했다. 2000 년대에 들어서자 그때까지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담당해 온 매과, 예를 들어 구 다나카파가 힘을 잃었고, 또는 비둘기파의 파벌인 고치카이(핑지회)가 힘을 잃어 세와카이(청화회)의 시대가 왔다. 이것은 현재의 아베 내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매과 시대에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 문제가 주류의 문제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 즈음부터 대중민주주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내셔널리즘, 그리고 텔레폴리틱스, 그리고 여론조사가 정치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정치가 외교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출현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요소가 고전적 외교, 다시 말해 일부의 엘리트나 관료, 유력한 정치가에 의한 제어가 아니게 되었고, 한편으로 정상외교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 하지만 가장 큰 요소는 외교의 대중화이다. 즉, 정치의 힘과 여론의 힘이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당국자가 합리적·논리적으로 외교를 규정하는 것이 불가해졌고, 인터넷 공간이나 여론조사, 그리고 매스컴의 영향 쪽이 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험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각 개조를 끝내고 2~3 시간 후에는 바로 “내각 개조를 평가하고 있는가?” 라고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여론조사가 아니라 포퓰러 센티먼트, 감정적·감상적인 반응의 조사이다. 그런 것이 정치나 외교를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반대로 정치가가 그런 여론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즉 위정자가 내셔널리즘에 영합함으로써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을 파기해 버릴 가능성이 높아진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토론

한국측 참가자: 한국 사회에는 1987 년의 이른바 민주화 항쟁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다. 대학생의 데모로 시작하여 민주화 선언,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국 민주화 시대의 시작이라고 해야 할 사건이다. 그런 기억도 있어서인지 이번의 일본 안보법제에 대한 항의 데모 등을 보면 미디어를 포함하여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 일본의 미디어의 반응은 냉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그 데모는 일과성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으로서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또 아베 정권은 한국에서는 2018 년 9 월의 자민당 총재의 임기 만료까지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2020 년 도쿄 올림픽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대망론도 있다고 들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일본의 정치에 남긴 족적, 유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측 참가자: 여기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여론조사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다. 여론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형성되어 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다양한 의견 중에서 정치가나 미디어가 “이건 이슈로 쓸 수 있다” 고 하는 것을 픽업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여론조사를 매년 살펴보니 2012 년은 독도 문제였다. 그 해 여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여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1 위로 올라간 것은 교과서 문제나 중군위안부 문제다. 즉 어떤 이슈를 미디어가 다루는지, 또 지도자가 제기하는지에 따라 여론은 어떻게든 바뀌는 것이다.

일본측 참가자: 일본측 발표자에게 질문인데, 안보법제 성립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걸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에 와서 아베 정권과 자민당의 지지율이 회복하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다시 회복된 것일까? 또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는 기시 내각이 안보 문제에 대처하고, 이케다 내각이 경제문제에 대처하는 식으로 일종의 역할 분담이 되었는데, 지금의 아베 내각은 혼자서 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래라면 안보법제가 통과한 시점에 통상 국회를 끝내고, 임시국회에서 TPP 등의 경제문제를 심의하는 흐름이었을 것인데, TPP 교섭이 늦어져 임시국회에서 심의되는 논의가 없어지고, 임시국회가 열릴지의 여부도 불투명해져버렸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 가능한지를 묻고 싶다.

한국측 참가자: 일본측 발표를 듣고 장기적으로도 한일관계 개선의 주도권이 일본측에서 나오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추정했다. 또 한국의 전망도 별로 밝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는 없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수정권이 탄생할 것이라는 견해는 조금 너무 앞서 갔다고 생각한다. 소문대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입후보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유력한 후보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한국 대통령 선거는 때때로 직전에 드라마가 벌어지기도 한다.

한국의 보수정권이 대일 자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것은 오히려 진보정권 쪽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한국의 진보정권이라고 하면 보통은 김대중 정권·노무현 정권이 되는데, 김대중 정권은 반보수 내지 중도보수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므로, 노무현 정권이 지금까지의 유일한 진보정권이었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때의 대일관계는 결코 양호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 그 시대에는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대사의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이 있었다. 일본의 공인이 공공의 장소에서 말한 이상, 그런 식의 발언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어찌 됐건 그 발언을 계기로 반일 분위기가 한층 높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 것을 토대로 만일 다음에 진보정권이 되면 한일관계는 오히려 악화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측 참가자: 일본측 발표자로부터는 “외교의 대중화에 의해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은 손상된다” 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과연 그럴까? 물론 대중화 이전의 정책결정과정은 단순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거기서 내려진 결정 자체가 타당한 것이었는지 어떤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즉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대중화에 의해 좌우되어버린다고 하는 제안은 어떨까? 라는 것이다.

일본측 발표자: 우선 아베 정권의 임기인데, 내년 참의원 선거 결과에 달린 것도 있지만 총리 자신의 컨디션 문제도 있고, 2018년 총재 임기를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가 남긴 유산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분권적인 통치 시스템을 집권적인 통치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점이 큰 것이 아닐까?

다음은 SEALDs 를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의 데모에 대해서인데, 1960년 안보 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조직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모였고, 젊은이 이외에도 주부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도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다. 아마도 그들 중 많은 수는 그냥 취직해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국회 앞에 모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조지 캐넌이 이미 50 년이나 전의 책 속에서 “세상 일부의 선동가가 여론을 이용하여 외교 및 사회를 왜곡한다. 이것은 범죄에 필적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적으로 동감하며, 오늘날 이 범죄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보수정권이 이어질까라는 한국측의 발언에 대해서인데, 자민당 정권이 계속돼도 자민당 속의 다양성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강고한 사상 신조를 갖고 있는 정치가는 아주 일부이며, 대다수는 그때의 분위기에 맞춰 어떤 때는 매파로 행동하고 또 어떤 때는 비둘기파로 행동하는 의원이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는 단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향후 정치적인 진자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며, 비둘기파적인 것이 주류로 나올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와 대중화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외교 안전보장정책이라는 것은 비 일상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여러 가지 정보 도구가 일상화된 레벨로 떨어뜨리는 부분이 애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측 참가자: 정치학의 세계에서는 흔히 “국경의 밖에 적이 있으면 국내 정치의 갈등은 수습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두 지도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외교적인 발언을 할 때 사실 눈을 돌리는 곳은 국내 청중이라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 정치와 외교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이것도 정치학의 상식인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할 때 외교적인 배타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도 한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지역 정치를 생각할 때 외교 문제를 국내적인 배타성, 국내적인 정치 지지도의 확보에 이용한다는 것이 과연 지역의 미래에 있어서 타당한지 아닌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비판적으로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일본측 참가자: 여론조사에 관해서 미디어의 역할로서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유권자, 시민의 책임감을 어떻게 키워 나갈까라는 것, 이에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시 말해, 남의 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과제라는 의식을 양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과성의 정책 비판으로 일관 할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며, 거기에서는 설문 방법도 중요할 것이다. 또 보도를 재료로 해서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정책을 평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적으로 철저히 밝혀 내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작업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책임감을 어떻게 국민이 다할 수 있게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디어에 있어서 큰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한국측 참가자: 자민당의 장기정권에 관한 말이 나왔는데, 한편 일본의 야당의 상황은 어떤가? 다시 정권 교대를 일으킬 가능성은 있는가? 또 앞으로 일본의 야당은 어떤 추이를 따라가는 것일까?

일본측 참가자: 2009 년부터 민주당 정권이 드러낸 외교안보에 대한 식견 결여, 이상, 환상에 너무 지나친 점, 이에 국민은 환멸을 느꼈다. 민주당이라고 듣는 것만으로도 “절대로 투표 안 한다” 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아마도 민주당에게 앞으로도 붙어 다닐 것으로 생각된다. 단 지금의 야당 진영은 사분오열로, 리더십을 취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공산당 정도지만, 그것도 역효과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측면도 있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아베 정권이 안보에서 경제로 이슈의 장면전환 전술을 취하려고 할 때 계속 안보법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점이다. 그런 사람들은 안보법제에 대해서 헌법소송을 거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거기에 야당이 어떻게 관여하고 복돋우는가가 야당 진영의 동향을 판단하는 재료가 될 것이다.

일본측 참가자: 장기적으로는 자민당은 반드시 분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자민당이 강했던 시대의 일본은 고도성장을 하고 있어서 “벌어들인 돈을 분배한다” 라고 하는 전제 위에 일당 지배가 계속되었다. 더구나 냉전 하에 있었고 소련이라는 공통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막히면서 1998년 이후의 자민당은 자신들만으로는 정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도 공명당 없이는 과반수를 유지할 수 없다. 이른바 우연히 민주당이 자멸했기 때문에 큰 정당이 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분배할 부도 없고 예전의 소련과 같은 공통의 적도 없다. 게다가 앞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을 계속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권의 일이 “부”가 아니라 “고통”의 분배가 되어 간다.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의 순간풍속같은 파워는 계속되지 않고, 앞으로의 자민당은 거대 정당을 유지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실히 이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지로서는 외부에서의 위협이 닥쳐와서 분열이 일어난 예도 막부 말기에 가까운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측 참가자: 한국이 지금 시대에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국정화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보면 42% 대 42% 였다는 보도를 봤다. 42%나 되는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에 이 문제가 깊다는 것을 느꼈다. 또 새로운 국정화 교과서의 약칭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들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진지하게 대처하고 있겠지만 자칫하면 독선이라고 할까 “이거야말로 올바르다”라고 하는 자세를 밀어부쳐,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과거에도 그런 자세가 빌미가 되어 그때까지 한국이 싫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혐오감을 갖게 되어버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측 참가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측에서 보면 나쁜 인상이 앞설 것이고, 한국 내에서도 비판적인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면 한일관계가 바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가 통일될 때까지는 대일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좌파든 우파든 일본에 대해서 민족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집권이 곤란하다. 민주화 이후에도 경제적 성과 이상으로 정치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 되는 경향이 연면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친일인지 반일인지라는 점에서 이것이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 다른 구조적인 프레임으로서 남북 간에도 친일·반일의 정당성 경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한국의 진보세력이 북한의 인권탄압과 같은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를 버릴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이 북한을 “그럭저럭 친일과를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벌인 세력이 수립한 나라”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것이 한국의 보수세력에 대한 반대 캠페인에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기조연설

유홍수 (주일본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대사로 부임한지 1년 2개월 정도가 지났다. 지금 한일관계가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최악의 상태는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올해를 포함하여 4회의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으며, 그 외에도 경제·문화·교육·통상·방위 등 다양한 분야의 장관급 회담이 수년 만에 잇따라 개최되고 있다. 경제단체 레벨에서도 과거 7년간 개최되지 않고 있었던 재계회의가 작년 12월에 개최되었고, 국회 레벨에서는 의원끼리 축구나 바둑 대회 등도 행해지고 있다.

양국 관계의 모멘텀 중의 하나로서 주목되는 것은 역시 올해 6월 22일의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양국 정상이 출석하고,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미래지향의 관계를 구축하자”라는 메시지가 교환되었다는 것일 것이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등록 등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양국이 협력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문제를 철저히 회피하는 자세를 쌍방이 고치고, 성실히 마주 보는 것이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한 열쇠가 될 거라 생각한다. 전후 70년의 아베 총리의 담화도 담화의 세부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나무 하나하나가 아닌 숲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로 담화 다음 날인 8월 15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담화는 매우 억제되었다. 그야말로 숲 전체를 본 내용이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양국 정부가 최대한 살리기를 기대한다.

올해 5월에 아베 총리가 방미하고,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안인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해결의 진전이 보이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측이 위안부 문제라면 소극적인 자세가 되는 것을 느낀다. 총리의 리더십 하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현안사항이 해결을 향해서 움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의 중국 편향론에 대해서는 절대로 중국에 편향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한국 국민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은 잘 알고 있다. 단 중국은 한국의 제일의 무역 상대국이며,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또 통일을 위해서도 그 영향력은 필요 불가결함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DNA가 매우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가까움을 바탕으로 오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일면으로는 갈등이 생기기 쉽다는 것도 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 단 이런 관계는 지구가 소멸하지 않는 한 수천 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것이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고, 관리하고 제어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 이것은 양국에 있어서의 의무이다.

세션 5: “총괄 토론 – 재차 미디어의 역할을 생각한다.”

일본측 사회자: 이 세션은 발표자가 없는 자유토론이다. 이 기회에 말하고 싶었던, 앞으로를 위해서 말해두고 싶은 것은 모두 말한다는 자세로 자유롭게 토론해 주셨으면 한다. 우선은 한국측 사회자가 문제 제기를 한 후에 자유롭게 논의를 해달라.

한국측 사회자: 특별히 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픽업하고 싶다. 우선 첫 번째는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야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점. 아베 정권이 장기화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보수정권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의 정치적 갈등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었으므로, 그런 가운데 지식인, 미디어, 또는 시민사회와 같은 액터는 새로운 모멘텀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 두 번째는 전체적인 방침에 관련된 것인데, “tough love” 의 제안. 이것은 미국 워싱턴주산 적포도주 브랜드 명인데, 해석을 하면 “사랑이 있는 조언”, “사랑이 있는 훈계” 라는 것이 된다. 이것을 서로 과감하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인 대외관계에 대해서이다. 한국의 중국 편향론, 일본은 미국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견해, 일본은 아시아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견해, 또는 G2 론 등이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측 참가자: 앞 세션에서 일본측으로부터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겠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라는 이슈가 정치적으로 거론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의 자리에서 언급해 왔다고 알고 있다. 이 이슈가 표면화된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역사 모임” 이라는 국회의원 그룹을 만든 후이며, 이른바 우익 교과서라고 불리는 교학사의 교과서 등장과 시기적으로 겹친다. 그에 대해 진보 진영이 “이 교과서를 채용하지 않도록” 이라는 캠페인을 폈고, 그로 인해 이 교과서 채용이 거의 제로가 된 사건이 있어서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새누리당 안에 강하게 남았다. 여기서부터 지금에 이르는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 국민 간에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일반 레벨에서는 국정화와 검정의 차이가 올바르게 인식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한국측 참가자: 한국의 교과서 제도는 처음에는 검정에서 시작되어, 그 후 박정희 정권 (유신정권) 때 국정화되고, 민주화 후에 김대중 정권 말기부터 노무현 정권기가 되어 겨우 검정 제도가 된 경위가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정 제도가 된 것을 다시 국정화한다는 것은 소위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며, 학문의 자유와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대부분의 한국 미디어도 검정제에서 국정으로의 변경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사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흐름이 역행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 대한 소감도 말하고자 한다. 얼마 전에 한일관계를 보고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건 중의 하나는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의 사건이었다. 가토 지국장의 기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언론인을 기소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나 방침, 그 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은 유감이다. 또 과거의 회의도 포함해서 말인데, 일본측의 발신이나 자세 중에는 한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비공식 장소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압적인 큰 소리로 강압한다면 참을 수 없다. 태도와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 저항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의 언론인으로서도 그런 것으로 경청할 용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한국으로 가지고 돌아가 그대로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긍정적인 반응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측 참가자: 지금 우리는 냉전 시스템도 아니고 탈냉전 시스템도 아닌 “제3 시스템” 과 같은 것에 직면해 있으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 갈지에 대해서 한일 간에 큰 갭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 갭은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시기부터 시작되어 오늘까지 커져 왔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차원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일관계는 개선되지 않은 채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거기서부터 한일 간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양국 간에는 공통분모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첫째로 일본도 한국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 그리고 안전보장 면에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미중 간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까 하는 것은 한일 간에 협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미중 간에 다리를 놓는 그런 일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대립의 완화나 조정은 할 수 있다. 그 때, 가능한 한 공통의 포지셔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한일은 모두 선진적인 공업국가이며, 또 동시에 무역국으로 있지 않으면 안 되고, 기술입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우리는 군사대국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는 우리는 민주주의이며, 시장경제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 사이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한국을 비민주국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민주라든가 비민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 전통의 차이라든가 역사적인 기억의 차이, 내셔널리즘과 관련된 것과 같은 다양한 점에서 대립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큰 것이지,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니다. 서로 학습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그것들을 논의하면서 공통의 토대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경우에 일본측이 중시하고 있는 것은 역시 국제협조의 외교이며, 국제 룰이나 규범의 존중이다. 이 점은 원리적으로 한국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므로,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 등에도 국제 논리에 따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여 제대로 대응해 가면 어떨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

일본측 참가자: 몇몇 한국측 참가자로부터 지적된 말에 일본의 대미 추종론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일부 일본 미디어에 비슷한 모습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봐도 스테레오타입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구나 하고 느낀다.

실제로는 최근의 일본 외교는 몇 가지 면에서 큰 의사결정을 해왔다. 예를 들면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방문이나 현정권의 러시아와의 영토 교섭의 진행 방법도 그렇고, 오바마 정권에 대하여 센카쿠 열도에 관해 미일 안보조약 5 조가 적용된다고 하는 언질을 잡아서 대통령 레벨로 못 박은 적도 있다. 더욱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의 해제, 그리고 TPP 를 비롯한 수많은 무역 교섭에서의 격렬한 논의를 돌아봐도 대미 추종은 커녕 오히려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인식하여 앞으로 추종론이라는 문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한국측 참가자: 한국의 국제 정치관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동북아시아의 대립적인 진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감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950 년대와 같은 북방 삼각관계 (소련·중국·북한) 대 남방 삼각관계 (한국·미국·일본) 와 같은 대립적 진영 구도가 만들어지면, 다시 19 세기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감각이

한국인의 국제정치관 속에 투영되어 있다. 이것은 게이오 대학의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가 제창한 “재팬 이즈 미들 파워” 와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끼리의 연합, 또는 지역적 평화의 촉진자끼리의 연합, 지역의 중재자 연합과 같은 관점에서 한일의 공통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양국이 고민하면서 생각해내야 하는 것은 보다 기동성·창의력·유연성이 있는 외교 전력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어딘가에 편향되어 있다거나 올인하고 있다고 하며 떨시하는 프레임으로부터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일본측 참가자: 한일관계는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목표로 해야만 할 것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얘기이든 미디어의 활동이든 “현장”에서의 교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올해 초봄, 신주쿠의 작은 극장에서 한일 연극인이 교류하는 모임을 취재했다. 한국에서 문학상을 수상한 젊은 극작가의 극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으로, 일본인도 한국인도 정말 즐겁게 교류를 하고 있어 감명을 받았는데, 그들은 한일교류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미있는 극을 만들고 싶다는 이유로 협력, 교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활동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정치가 “현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느꼈다.

또 하나의 “현장”이 한국군과 자위대가 PKO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남수단에서 한국군 부대의 총탄이 부족했을 때 같은 종류의 탄약을 사용하고 있는 자위대가 탄약을 빌려준 일이 있었다. 그 행동은 일본 헌법에서 위법인지 어떤지 매우 미묘한 것이었지만 본국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 신속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에게도 좋은 경험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이 건을 질문받은 한국의 외교부 보도관은 감사의 말도 평가의 말도 없어 실망했다. 이것도 “현장”의 교류를 정치가 방해한 일례일 것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한일 간에 여러 가지 교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고 발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측 참가자: 이전에 역사문제에서 동북아시아가 시끄러웠던 시기에 미국의 어느 싱크 탱크가 한중일의 역사문제를 테마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미국측 참가자로부터 나온 “한국과 일본은 매우 가까운 관계로 보인다. 더욱 빈번히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코멘트에 대해서 한국측이나 일본측이 냉소적으로 “당신들 같이 200년, 300년의 역사밖에 없는 입장의 사람은 정말로 긴 역사의 얽힘 속에서 만들어진 갈등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응한 것이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있다. 한편, 해외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인과 일본인 기자는 매우 사이가 좋고, 개인적으로도 해외근무기간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것은 일본인 기자이며, 그것이 연이 되어 휴가 때마다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에 친근감을 갖고 있다. 이런 친한 관계이기에 과거의 역사문제에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앞으로는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거기에 미일관계, 한미관계, 중일관계까지 생각하도록 해보면 지금보다 넓고 긴 시점으로 사물이 보이지 않을까? 또 보다 긍정적인 시점에 서려고 하면 언젠가는 문제 해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 동남 아시아나 남아시아에 가면 “재팬 무브스 사우스 워드”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즉 일본은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뱅골 만 국가들, 그리고 인도양 등 “인도 태평양” 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확대 속에서 외교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취임 후 1년도 안 걸려 동남아시아 국가를 모두 방문했으며, 호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 등 지금까지의 총리가 방문하지 않았던 나라까지 방문했다.

종종 “인도 태평양의 장래는 미중관계로 결정된다” 고 하는데, 이들 국가들을 방문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확신한 것은,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금 기존과는 다른 국제관계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 나라들은 결코 대국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의 이해관계 및 목적의식에 강하게 규정되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것을 볼 때, 이 지역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마도 미중 이외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단 거기에는 물론 일본도 들어가 있으며 한국도 들어가 있지만, 한국에 가서 얘기를 하면 한국은 G2, 즉 미국과 중국에 눈을 빼앗겨,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움직임에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국측 참가자: 예전에 일본 근무를 경험하였고 일본 국내 미디어에도 일상적으로 접해 왔지만, 그 당시 가장 부럽다고 느낀 것은 일본 미디어의 다양성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생각한다. 한국 미디어는 일본에 대한 관용도가 증가했다고 할까,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일본 미디어 쪽에서는 옛날의 다양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 이대로는 입장이 역전되어 5년, 10년이 지난 지점에서는 일본의 미디어가 한국의 미디어를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마저 생각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 정도로 나빠진 이유는 역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처해진 위치 상, 일본을 이해하고 용서할 입장을 취하기가 어려웠고, 더욱이 그러한 상태가 너무 길어진 결과, 한국 미디어는 어떤 의미에서 단편적으로 일방적인 주장 속에 매몰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일본 미디어가 “우리들은 가해자이지만 한국의 입장도 이해하자” 라는 식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매우 세련된 태도로 주위에는 비친다는 것에 주목해 주었으면 한다. 즉 한국의 입장이나 한국이 입은 피해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본측으로부터 나오면, 그것은 신사적인 행위라고 받아들여지지만, 한국측 미디어가 “일본에도 훌륭한 점이 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좀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받은 자금 덕분에 우리들은 풍요로워졌다”, “일본은 해할 일은 하지 않았나?” 정도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옛날 한국에서는 입사한지 얼마 안 된 기자들은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리 나쁘게 써도 괜찮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신입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은 많은 상황이 바뀌었고 당시를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미디어도 변했다고 실감하고 있지만, 이런 구조에는 유의해 주었으면 한다. 미디어도 시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사물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측 참가자: 지금까지의 회의를 돌아보면 그때그때의 기억이 되살아 나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 세션의 테마인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느낀다. 특히 한일 간의 주요 쟁점이기도 한 역사문제 및 위안부 문제 등에서 한일 미디어 쌍방이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다. 과거에는 일본측이 오보하고, 한국측도 오보하여 그 결과로서 미디어가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된 것은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사히 신문은 이른바 요시다 증언을 바탕으로 오보를 해왔고, 동아일보는 정신대를 강제 연행과 관련짓는 오보를 해버렸는데, 그런 보도 자체가 현실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말았다. 미디어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생각할 때, 정확하게,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결코 오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한국측 참가자: 맹자의 “인의예지” 에 비유하면 한국의 미디어는 인의예지 중에 인·의·예까지는 매우 다양성을 중요시하지만, 지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편, 일본의 미디어는 인의예지 중에 지 측면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 즉 팩트. 일본은 이것을 중심으로 한 다양성이 발달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과 의 부분에서 포용성의 폭이 최근에는 한국에 비하여 특히 좁아져 있다고 느껴진다.

한국의 중국 편향론에 대해서는 많은 한국측 참가자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노무현 정권기의 대미 증오의 분위기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감안하면 한국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국에 편향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보수정권은 전통적으로 강한 쪽에 기대려고 하며, 좌파는 좌파대로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한 저항감을 갖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가 기묘한 형태로 결합하게 된다면 중국으로 기울어지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일본측 참가자: 지금 각 미디어는 살아남기 위한 가혹한 경쟁에 내몰려 있다. 그 결과로 유감스럽게도 포퓰리즘, 팔리면 된다고 하는 위험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의 예가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사고에 대한 일본 미디어의 보도이다. 그때는 이상하다 할 만큼의 보도량을 보였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심한 나라다”, “이렇게 어설픈 사회구나” 라는 식으로 상대를 비난해야 가슴이 후련해지는 발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일본의 시청자나 독자는 상대적으로 좋은 기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시청률은 올라가고 신문의 부수도 늘어난다. 그만큼 미디어는 수익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그런 종류의 보도가 흘러넘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역사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종종 “역사전” 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그 나라에는 위안부가 몇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든가, 강제성이 있었다느니 없었다느니, 마치 전투나 전쟁처럼 논쟁을 한다는 것인데, 미디어는 야구나 축구와는 다르다. 승패를 따지는 사고방식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측에서 외교는 원래 비일상적인 공간이더라도 그것을 너무 일상화시켜 버렸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 즉 외교라는 것을 단순화하여 승이나 패냐, 흑이나 백이냐라는 식으로 바꿔버렸다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미디어의 책임이라는 것은 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나는 미디어를 거대 조직에서 작은 조직으로 바꾸고, 규모보다도 질을 중시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뼈를 깎는 각오가 필요하며 고통이 동반되는 개혁이다. 또 하나는 국경 없이 가는 방향성일 것이다. 유리콘이 유로뉴스가 되었고, 지금은 유럽에 의한 유럽 전체의 방송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동아시아에서도 시행해

가는 것이다. 지금 바로는 할 수 없지만 모색해 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참가자: 국교 정상화 50 주년이라서 다양한 움직임을 취재해 오고 있는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의 하나로 한국과 일본, 중국 학생들이 교류하는 “캠퍼스 아시아” 라고 하는 교류 사업이 있었다. 취재한 것은 프로그램이 한국 부산의 동서대학에서 실시되었을 때인데, 대학 근처 아파트의 한 방에 각국의 대학생 한 사람씩 모여, 3 명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공동생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역사와 영토 문제 등 다툼 거리가 많기 때문에 다툼 때는 매우 격하게 언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한다. 모두 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고 학점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나라를 오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 한국어가 가능한 일본과 중국 학생들이라도 모르는 것이 나와서 한국인 학생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가운데 크게 다투거나 서로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생활이 성립해 가고 있었다. “사이 좋게 해나갈 수 있는 비결, 큰 다툼을 벌여도 결렬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더니 “계속 사이가 나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 편히 있으려면 절교할 수는 없다” 라고 말했던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이것이 한일관계 전체와도 일맥상통한다. 서로 이사 갈 수 없는 관계인 양국은 실익 실리의 관점은 물론이고, “편안함” 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서 배웠다.

한국측 참가자: 미중 G2 론에 관해서 중국에 가서 전문가와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느낀 것은, 실은 중국인도 이 G2 라는 말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화사 통신 등은 가끔 사용하지 않지만 진정한 중국의 지식인은 G2 라는 말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원래 미국이 만든 개념이고, “중국도 세계의 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 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신문기사의 영향력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 그만큼 기사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통감했다. 예를 들면 한일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사도 그 인식에 의거하여 그런 방향성 하에서 작성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제대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언론인의 역할은 크다.

일본측 참가자: “가치” 라는 말에 대해 한 마디 언급하고 싶다. 아베 정권은 특히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가치의 외교” 를 테마로 외교가 전개된다. 또 동료임을 어필할 때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고 하는 문구를 쓰기도 한다. 특히 민주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인 가치” 라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등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다. 하지만 이 말을 안이하게 사용해버리면 가치 외교의 덫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에 빠져들게 된다.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인권문제로서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일 간에 인권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기묘한 일이 되며, 한국에 있어서의 인권, 일본에 있어서의 인권 개념의 차이가 부상하게 된다. 구미에서 발전해 온 인권 개념을 한일이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흡수해 왔는지도 포함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따라서 “가치” 라는 말을 안이하게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측 사회자: 한국측 참가자들에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한국에 가장 바람직한 국제 시스템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다. 일본에게는 중국으로부터 절박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국제질서라는 것은 비교적 명백하다. 즉 미일 안보에 의해 지탱되는 체제이며 브레턴 우즈 체제이다. 그리고 그런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한 AIIB 에의 자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으로서는 조금 망설임을 느낀다. 더욱이 전후의 일본을 지탱해 온 시스템이 동요되고 있을 때, 원래의 리더인 미국이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도 힘을 빌려주고자 하게 된다. 그리고 주위를 바라봤을 때 그런 리버럴 데모크래틱 오더를 지원하기 위해 도와줄 만한 나라로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역시 한국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식으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부분이 일본에는 있기 때문에 꼭 이 질문에 대답해 주었으면 한다. 원래 리버럴 데모크래틱 오더의 이익을 받아 온 것은 한일 양국의 미디어가 아닐까? “가치의 외교” 라는 말이 나왔는데, 보편적 가치의 근거에는 자유로운 보도, 언론의 자유, 각종 자유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 있을 수 있게 된 시스템을 어떻게 볼지, 그리고 앞으로의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국제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꼭 생각해 가고 싶다.

폐회사

유 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들간의 매우 힘든 회의가 성공리에 끝난 것을 참가자와 함께 기뻐하고 싶다. 자신이 관여하게 된 것은 제 3 회 회의부터인데, 회를 거듭할수록 회의 분위기가 차분해진 것을 느낀다. 격한 의견 대립은 있어도 참가자끼리의 신뢰감이 배양되었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방금 전 일본측 참가자로부터 “한국이 과연 리버럴 데모크래틱 오더를 공유하고 있을까?” 라는 불안한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중국에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 일본이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일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이 리버럴 데모크래틱 오더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는 지나친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또 리버럴한 가치관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일본의 정치가, 그리고 언론인 및 지식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과 한국은 마지막까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떠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Yoshiji NOGAMI(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5년 전에 본 사업을 시작했던 목적은 한일 국교정상화 50년, 그리고 전후 70년인 2015년에 예상되는 “폭풍” 에 대비하여 그전에 땅고르기를 해두자고 하는 부분에 있었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그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버렸지만, 그 결과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대화의 깊이도 생겼다. 물론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 낙관시 하기만 해서는 안되지만 본 사업은 단순한 “준비”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한국측 대표로부터는 리버럴 데모크래틱 오더 건에 대해서 일본측의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매우 기쁜 일이다. 전후 70년간 한국은 매우 고초를 많이 겪었고, 일본도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 왔다. 그 결과, 서로 아시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 배경으로서의 국제질서 유지에 힘쓰고,

자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시스템을 지켜간다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그것을 한일 공동으로 해간다는 것은 양국 간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세션 6: “학생들과의 대화” (특별세션)

한국측 발표: “한일관계의 미래”

한일관계의 다양한 사건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최근에는 특히 여론조사를 소재로 중시하고 있다. 여론의 동향을 아는 것은 한일관계의 현황을 아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예를 들면 한국인의 일본·중국·미국·북한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보면 미국이 가장 높고, 일본은 북한과 최하위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20 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높으며,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일본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연령대별로 보면, 20 대, 30 대 답변자의 반수 이상이 “원전·지진” 을 들고 있고, 특히 20 대에서는 “아베 총리와 정치가” 를 든 것은 10% 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연령이 올라가면 60 세 이상뿐만 아니라 50 대, 40 대도 “식민지 지배·군국주의” 를 드는 사람이 늘어난다. 젊은 세대에는 프라이밍 효과, 즉 인간은 최근의 일을 가장 잘 기억한다는 작용이 움직인 것일 것이다. 더욱이 인간은 이념과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자신의 성인기 초기(얼리 어덜트후드)의 경험에서 강한 영향을 받는데, 이 점에 입각하면 20 대에 있어서 최근의 원전사고나 지진이 더욱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60 세 이상에서 식민지 지배·군국주의의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이 시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수많은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그렇지만, 현황을 보는 눈도,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일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단 부정적인 견해가 강하게 나오는 한편,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도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중에서도 “대일 외교를 투 트랙으로 해야 한다” 고 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며, 역사문제는 역사문제로서, 협력해야 할 점은 협력해서 진행해야만 하고,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협력 없이는 안 된다는 견해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것은 밝은 조짐이라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측 발표: “‘역사란 무엇인가’ - 저널리즘의 현장에서 역사문제를 생각한다”

언론인은 역사문제에 어떻게 마주하면 좋은가? 즉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한 후,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그것을 뒷받침해 가기 위해서는 역사가인 E.H. 카가 지적했듯이 철학과 신념, 윤리가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언론인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와 함께 늘 곁에 두고 보는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 에 “인민의 복지는 최고의 법이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언론인의 철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보다 좋은 정부를 실현하여 많은 사람이 보다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언론인의 본의라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언론인에게 국경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본과 한국의

언론인이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해도 참가자는 국기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언론인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일본인을 대상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면 일본의 독자를 생각하며 일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하여 사회에 보다 좋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적은 있지만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국익”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것도 옛날 사고방식이 아닐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국의 이익에는 다른 많은 나라의 이익과 관련된다. 한일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지역적인 이익이 되거나 더 넓은 지역의 이익이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 국가를 넘어선 이익을 상정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익의 핵심이 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로 “시세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즉 거리의, 세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세간 사람들의 시세관을 파악하여, 거기서 가장 좋은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공통 이익의 뿌리가 아닐까?

토론

한국인 학생 1: 한국측 발표에 있었던 호감도 조사에 대한 것인데, 우리와 같은 20 대는 일본에 대하여 호감도가 높지만 연령이 올라가면 낮아진다는 것이었는데, 20 대든 60 대든 일본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어떤 미디어에 의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만일 의거하는 미디어에 따라 호감도가 바뀐다고 하면, 60 대가 20 대들이 선호하는 미디어에 접하면, 또는 그 반대의 행위를 취한다면 호감도가 바뀌는 일도 있을 수 있을까?

한국측 발표자: 각 세대가 어떤 미디어를 접하고 있는지는 설문 항목에 없지만, 인터넷이나 SNS 에 대해 언급하자면,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SNS 와 같은 미디어가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나 SNS, 블로그에서 전개되는 말은 지나치고 매우 자극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에 비하면 신문을 비롯한 전통적인 종이 매체는 편집 과정을 거치는 만큼 그런 색채는 약해진다. 만일 젊은 세대가 인터넷이나 SNS 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한 견해는 강경, 과격하게 될 텐데, 현실에서는 젊은 세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정보나 SNS 가 젊은 세대의 일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원래 인터넷이나 SNS 가 여론의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정설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인 학생 2: 여론조사가 한국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커버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실시 방법이나 각 연령대의 답변자 수 등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바란다.

한국측 발표자: 실시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 연례 조사의 경우 1500 명에서 2000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또 월례 조사나 특정 사건에 대한 반응을 알기 위해서 임시로 실시하는 조사에서는 1000 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의 추출 법은 컴퓨터가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랜덤 디지털 다이얼링(RDD) 방식을 이용하고 있지만,

휴대전화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RDD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추출하면 대체로 센서스(인구조사)와 비슷한 연령분포가 되는데, 거기에 사후층화, 즉 전체의 결과에 가중치를 가미하여 센서스와 같은 비율로 평균화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인 학생 1: 자기 자신에 대해 돌아보면 고등학생 때쯤부터 한일 학생 미래 회의라는 학생단체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곳에서의 경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TV에서 뉴스를 보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이미지를 가진 부분도 있었지만, 교류활동을 계속하여 친구들과 접하는 동안, 뉴스를 의심하게 되는 마음이 조금씩 짝트게 되었다. 즉 그런 친구를 알게 됨으로써 정보를 얻는 루트도 복잡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의 젊은 사람 중에도 한일관계를 밝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적지 않다.

SNS의 영향에 대해서는 대사관의 기획으로 SNS 리포터라는 일을 한 적이 있어, 그 경험을 통해서 SNS나 트위터에 의한 정보 발신이 보급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함과 동시에 젊은 세대가 꼭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쨌든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최대의 정보 소스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본인 학생 2: 발표를 통해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전에 다른 회의에서 한국의 전문가로부터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의식과 비교하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의식 쪽이 온건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분은 아마 2010년 이후의 일본에서 인터넷 우익을 비롯하여 극우적인 움직임이 눈이 띄기 시작했다는 것을 가리켜 그런 식으로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일본에 대한 과격한 움직임이 있는 걸까?

한국측 발표자: 한국에서 극우적인 움직임이 있어 그에 따라 대일 감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견해를 하기는 어렵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교육의 영향이 클 것이다. 역사교육을 받아 온 결과로서 일본에 대한 불만이 마음속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극우라든가 극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본에 대한 반감이, 특히 역사문제와 관련하여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인 학생 3: 특히 젊은 세대는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그것도 매우 짧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보기 싫어도 보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종류의 정보에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언론인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줬으면 한다.

한국측 참가자: 독자는 개개인 모두가 판단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독자들에게 요구되는 최저한의 가이드라인은 정보의 구별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SNS를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분별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감정적, 자극적인 표현으로 쓰인 문장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측 발표자: SNS라는 것은 어쨌든 짧다. 짧은 만큼 그 범위에서 임팩트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알기 쉽고 자극적인 내용이 된다. 기억하기 쉬워 관심이 끌리는 것으로,

달려들어버리는 사람도 나온다. 단,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의 긴 기사도 읽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뉴스를 의심하는 다양한 채널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일본측 사회자: 학생 참가자의 “뉴스를 의심해 본다” 라고 하는 발언을 듣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조속함에 다소 충격을 받은 기분도 든다. 여기서 언론인 참가자에게 질문이 있는데, 이런 학생을 상대로 어떤 형태로 기사를 어필해 나갈 것인가? 또는 각종 매체가 있는 가운데 신문과 TV의 우위성을 어떻게 호소해 갈 것인가?

일본측 참가자: 신문기자의 일은, 잘 생각해보면 역사의 전선에 서있는 사람과 만나 얘기를 듣고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학습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때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게 되지만,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 공백을 메우는 것과는 연결된다.

트위터 등에서 잘못된 정보가 계속 퍼져가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저널리즘의 기본에 비추어 생각하면 그 정보를 접했을 때 과연 최초에 이 얘기를 들은, 또는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의식을 갖고 보면 좋지 않을까? 정보가 다양한 사람들을 경유하여 퍼져가는 동안, 개중에는 자신의 억측이나 근거 없는 것을 맘대로 덧붙여, 그것이 오리지널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신문사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기사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품질보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우위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측 참가자: 페이스북이나 SNS와 같은 짧고 자극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게 정말일까?” 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모바일화가 계속 진행되어 TV라는 상자 앞에 있지 않아도 각자가 휴대 정보 툴을 갖게 되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정보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 “정말?” 이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더 말하자면 모바일화의 혜택으로 정보 접근이 용이해진 것을 활용하여 의문을 가졌다면 스스로 조사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조사처는 신문사나 방송국도 좋으므로, 스스로 조사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일본인 학생 3: 앞으로 한일관계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하여 어떤 보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또 그 보도를 일반인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은가?

일본측 참가자: 미디어가 한일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를 무의미하게 부채질하거나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은 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단체는 반일단체라든지 이 정치가는 극우라든지 하는 꼬리표를 붙여버리면 그 순간에 사고가 정지해버려서 그 정치가가 뭘 얘기했는지 뭘 했는지는 관계없게 되어 버린다. 아무리 싫은 녀석이라도 가끔 좋은 얘기를 하는 일도 있지만, 처음부터 싫은 녀석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버리면, 그 인물의 언동이 눈에도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디어의 대응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인 학생 4: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서로 진의가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다. 현장의 언론인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특히 역사 문제와 같이 실제로 그런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어떤 궁리를 하고 있는가?

일본측 발표자: 역사문제 증언자의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다. 또 증언을 뒷받침할 자료의 대부분은 종전시의 혼란을 틈타大本營의 명령을 받은 육군이 폐기 처분한 상황이므로 문서로 증언을 뒷받침하는 것은 곤란하다. 아직 증언자가 생존해 있으므로 그 사람들의 육성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해 갈 필요가 있지만, 육성 중에는 말이 다소 과장되거나, 또 기억이 혼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쪽도 제대로 공부하여 그 증언이 옳다든가 모순된다든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인에게는 “감식”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또 증언자의 표정을 관찰하여 판단하는 등의 테크닉도 요구된다.

한국측 사회자: 예를 들어 한일관계에 관한 문제라면 양국 간에 일어나는 문제가 우호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되도록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배려를 하는 것이 있다. 또 언론인으로서, 언론인 사이에 국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언론인에게 있어서 국경은 무엇인지, 그런 고민을 품고서도 최소한 이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 국가의 주민끼리로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커뮤니티를 좋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점이 이 자리에 있는 언론인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인 학생 1: 이 자리에 모인 언론인 참가자의 이야기와 실제로 보도되고 있는 기사 간에 갭을 느낀다. 한일관계를 다루는 뉴스를 보면 다루는 쪽이 독자의 흥미를 끌고 시청률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경영에 플러스가 된다. 그런 판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떤가?

일본측 참가자: 한국측에서 보면 역사문제라는 매우 큰 문제가 있으며 대립도 첨예하다. 이번 회의 자리에서도 한일관계가 바로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각자 기사를 써가지 않으면 안 된다. 대립이 있다는 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단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멘텀은 이전보다도 확실히 강해지고 있다. 일본측의 미디어에도 입장 차이라는 것이 있고, 한국측에도 다양한 미디어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다. 앞으로는 더욱 서로 그것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인 학생 2: 난징 대학살을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에 출자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그런 한편, 시베리아 억류에 관해서는 일본은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런 일본 정부의 모순을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측 참가자: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는 숫자의 문제나 실태의 자세한 부분을, 제대로 된 증거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논의 단계에 있으며, 중국이 이것을 등록하려고 한다면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측은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일본측은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여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논의하면 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중국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출연금까지 갑자기 거부하는 것은 점잖지 않다. 일본은 전후, 리버럴 데모크래틱 오더의 기수로 임해 왔으므로 국제 공공재라 할 수 있는 그것을 한층 높은 곳에서 지킬 필요가 있다.

한국인 학생 2: 마침 오늘 뉴스에 한국의 검찰이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양국 참가자의 의견을 묻고 싶다.

한국측 참가자: 문제가 된 기사 내용이나 질의 문제와, 그것을 이유로 기소를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기소는 잘못됐다라는 것이 모든 참가자의 일치하는 견해이다. 이런 식으로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제일일 것이다.

일본측 참가자: 이번 건에 관해서는, 실제로는 한국의 진보적인 미디어가 최대의 “이해자” 였다. 그만큼 보도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일 것이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정부의 정책이나 정권에 대해 반대하는 미디어를 정부가 제소하는 일이 계속되어 언론의 탄압이라고 문제시된 경위도 있어, 한국의 진보적 미디어는 “기사 내용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기소에는 반대” 라고 반응했다. 언론의 자유문제임과 동시에 그 배경에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보도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으며, 여러 가지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이번 건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인 학생 2: 이번 건이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결국 한국 미디어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유감이었는데….

한국측 사회자: 그것은 주객전도가 아닐까? 한국 미디어는 기사 내용에는 찬성하지 않아도 기소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하여 반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미디어의 자세보다도 기소로 미디어를 위협하려고 한 한국 검찰의 자세 쪽일 것이다. 또 그에 따라 한국 미디어가 위축됐냐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일본측 사회자: 사회인 선배로서 학생 참가자에게 바라는 것은, 특히 젊을 때는 뉴스를 복수의 매체로부터 받아들였으면 한다는 것이다. “시베리아 억류와 난징 대학살 얘기는 모순되어 있다”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본 신문이나 TV 중에는 모순되지 않다고 하는 입장도 있다. 하나의 잣대는 “진정성” 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시베리아 억류 자료에 대해서는 진정한 것이라는 자신을 갖고 있다. 단 난징에 관해서는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그 잣대로 보면 모순되지 않다는 것이 된다. 복수의 매체를 접하여 다양한 사물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그중에서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비판적인 자세야말로, 강인한 미디어 육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표 자료

세션 1: “국교정상화 50 주년 · 전후 70 년 보도에 대한 평가”

한일 신문 사설은 국교정상화 50 년을 어떻게 평가했나

들어가며

일본과 한국은 올해 6월 22일, 국교를 정상화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부터 50년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은 각자 자국의 수도에서 상대국 대사관이 주최한 기념 행사에 출석하여, 관계 개선을 향한 의사를 어필했다. 양국 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일컬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의 신문 사설은 양국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을 환영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달 말 한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추어 아베 수장과 박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관계 개선을 향한 전향적인 움직임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정상회담이 실현된다 해도, 한일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리라 생각된다.

일본과 한국의 신문은 곤란한 국면에 있는 ‘50년째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를 10년 전과 비교하면서 신문 사설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도쿄 주재의 6개 신문(아사히[朝日], 마이니치[毎日], 요미우리[読売], 닛케이[日経], 산케이[産経], 도쿄[東京]), 한국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중앙지’ 중 8개 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매일경제신문)을 검증 대상으로 했다.

한국 비판을 주저하지 않게 된 일본의 신문들

일본의 각 신문은 올해 6월 22일을 전후하여 한일국교정상화 50년에 관한 사설을 게재했다. 산케이신문을 제외한 신문들은 통상 2개의 사설을 게재하는 공간 모두를 사용한 대형사설을 실어,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설을 2회 게재한 신문 역시 많았던 것은, 최근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련의 사설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 비판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이니치신문은 50주년을 한 달 앞둔 5월 22일의 사설에서, ‘한국에 의한 과잉되고 일방적인 대일 비판은 일본 국내에서 반발을 만들고, 한국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킬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세계유산조약의 정신에 위배되며 국가 간의 불필요한 대립을 초래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대립을 초래한다’는 반발을 일본 측에 생겨나도록 만들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사히신문도 6월 19일의 사설에서, 기념 행사에 맞추어 21일 방일하는 윤병세 외무장관에 대해 ‘외교의 책임자이면서도 스스로 제3국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고자질 외교’를 계속해 왔다. 외무장관 취임 이후 2년 이상 이웃 국가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이상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6월 22일의 사설에서 ‘박 씨가 국내의 반일 여론에 영합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을 강요하는 것이 일본 측의 '협한' 감정을 부추겨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고 지적한다. 요미우리는 나아가 23 일의 사설에서 '박 씨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제 3 국에서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하는 '고자질 외교' 도 전개해 왔다' 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전개했다.

산케이신문 사설 (6 월 16 일) 은 '고자질 외교'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대두와 북한의 핵 / 미사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의 결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역사문제에 얽매어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의 조건으로 삼아 온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논했다.

10 년 전인 2005 년에도, 시마네 (島根) 현에 의한 '다케시마 (竹島) 의 날'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기념일을 맞았다. 이 때에도 도쿄 주재 각 신문 모두가 국교정상화 40 년을 맞이하여 사설을 게재했으나, 직접적인 한국 비판은 보이지 않는다. 아사히신문 사설 (05 년 6 월 21 일) 이 '양국 정상은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여 너무나도 유연함을 결여하고 있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한국 측이 역사인식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싶은 것도 알겠으나, 뒤틀린 관계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접근도 생각할 수는 없을까' 라고 쓴 것이 눈에 띄는 정도이다.

농담 (濃淡) 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많은 신문이 한국 비판을 주저하지 않게 된 배경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에 대한 정면 비판을 피해 온 도쿄신문의 사설 (2015 년 6 월 22 일) 이 언급한 '한국 피로' 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도쿄신문은 '일본은 월드컵 공동개최나 한류 붐을 통해 한국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반복하여 과거사 문제를 끄집어내서 지금은 피로감이 엿보인다' 고 지적했다.

눈에 띄기 시작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지적

50 주년을 맞이한 사설에서는 한일관계가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했다. 도쿄신문 (6 월 22 일) 은 '국민감정의 어긋남은 최근 수 년 동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서로의 변화에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불신감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 한일관계의 냉각화의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요미우리 (6 월 22 일) 는 한 발 나아가서 '한국의 대일 강경 자세의 배경에는 민주화의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반일 내셔널리즘의 고조와, 정부의 대중 영합이 있다' 고 주장했다. 마이니치 (6 월 22 일) 도 한일을 둘러싼 구조적인 변화의 배경에 있는 것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냉전의 종결' 을 들면서, '한일은 이제까지의 50 년 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협력하여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종래의 틀은 기능 부전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서로 '다름' 을 인정한 위에서 협력의 틀을 재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요청했다.

구조적 변화의 요인과 관련하여 '대두하는 중국의 존재도 한일관계에 영향을 준다' (도쿄신문) 는 지적이 있었다. 마이니치도 같은 지적을 했다.

한국 측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보인다. 조선일보의 사설 (6 월 22 일) 은 '하지만 50 년간 세상은 바뀌었다' 고 단언하면서, 한일의 파워 밸런스가 크게 바뀌었음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중국이 부상해 국력에서 일본을 제쳤다. 국교 정상화 당시 30 배에 달했던 한·일 간 GDP 격차도 3.3 배 차로 좁혀졌다. 1 인당 소득 차이는 1.3 배에 불과하다. 우리

대외 무역에서 한·일 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때 40%에서 이제 7%로 줄었다' 고 논했다.

한국일보 사설(6월 23일)도 '그런데 꼭 역사 감정의 충돌이 아니더라도 과거와 같은 뻣뻣한 밀도의 양국 관계는 상정하기 어렵다. 냉전이 붕괴하고, 중국의 부상(浮上)을 보는 전략·정서적 시각이 판이하고, 양국의 수직적 분업이 수평적 분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확인하기 때문이다' 라는 견해를 보인다. 문화일보 사설(6월 22일)도 한일관계 악화의 '보다 근본적 원인은 양국 관계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몸집이 변하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처럼, 양국 관계도 호혜(互惠) 발전을 위해 근본적 재정립을 모색할 때가 됐다' 고 논했다.

2005년 사설에서 이러한 구조 변화에 주목한 논조는 한일 어느 쪽에도 보이지 않는다. 아사히(2005년 6월 22일)가 40년 전의 격렬한 조약 반대 데모를 인용하면서 '다케시마나 야스쿠니(靖国)로 '반일'이 불타오른다 해도, 그 확산이나 심각함은 당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한국 사회에 자신감과 여유를 낳은 것일 테다' 라고 논하고 있는 정도이다.

다만 이 논조는 올해 각지의 사설에서 보이는 '구조 변화에 대한 지적'과는 방향성이 다르다. 한일관계의 구조 변화를 정면에서 바라보려 한 점은, 올해의 논조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기본조약의 불만을 논하는 한국 신문

5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일 양국 간에 큰 차이가 보인 것은,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평가이다.

일본 측에서는 '반 세기 전의 국교정상화는 사실 양국이 마음으로부터 화해하고 실현한 것은 아니다. 삼엄한 냉전 아래에서 미국의 강한 개입과 압력 속에 겨우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아사히 6월 19일)는 점에 유의하면서도,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초가 되어 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닛케이신문이 6월 21일의 사설에서 보인 '5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한일 관계는 긴밀해졌고 상호의존을 강화했다' 는 관점이다.

한국 측에서도 한겨레신문이 6월 23일 사설에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일 수교는 두 나라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한국은 일본이 제공한 경제자금을 잘 활용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도 일본의 기술, 자본, 경영 노하우,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일본 역시 한국과의 무역으로 막대한 흑자를 거뒀다' 고 지적하는 등, 한국의 경제발전이 기여한 점을 인정하는 논조가 있다. 문화일보 사설(6월 22일)도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일본은 한국 덕분에 방위비 분담을 줄이면서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다' 고 논했다.

다만, 이 이상으로 눈에 띄는 것은 기본조약에 대한 불만의 표명이다.

조선일보 사설(6월 22일)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명확한 사죄가 없었던 국교정상화에 반발하는 국민을 힘으로 누른 박정희 정권의 판단을 '불가피했다' 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조약에서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를 명확하게 해두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화근(禍根)으로 남았다' 는 인식을 표명했다. '현격한 국력 차 위에 체결된 국교 정상화 조약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면서 반 세기 전을 돌아보았다.

기본조약의 긍정적 측면을 언급한 앞서의 한겨레 사설에서도, 한편으로는 ‘최근의 한·일 갈등은 1965년 한일협정 체제가 시대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탓이 크다’ 고 주장한다. 동아일보 사설(6월 22일)도 ‘한일 기본조약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고 기술했으며, 경향신문 사설(6월 22일)도 또한 ‘1965년 한·일 간 청구권 협정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당시 권위주의 체제로서 가난한 약소국이었던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과거사 사죄를 받아내지도 못했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보장받지도 못했다’ 고 조약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10년 전에는 한국 신문의 사설에서도 기본조약 자체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겨레 사설(2005년 6월 21일)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배경에 대해 ‘조약의 전문(前文)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언급이나 사죄의 표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나타나듯이,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계속 피해서는 진정한 친선관계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 단언한 정도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수년, 한일 기본조약 체제에 대한 회의(懷疑)적 견해를 듣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에 보인 한국 신문 논조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일의 논조에 공통된 위기감

일본과 한국의 신문 각지의 논조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으며, 현상 인식이나 주장에 다른 부분이 많다. 그러나 아베 정권, 박근혜 정권이 된 뒤에 한 번도 정상회담을 열지 않은 현재 상황을 좋게 보는 의견은 보이지 않는다. 양국에 있어 상대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든 신문이 일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 측은 일본에게만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는 관점이 강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중앙일보 사설(6월 22일)이 ‘한쪽만의 책임이라고 하기 어렵다. 경중(輕重)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양측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지적했으며, 동아일보 사설(6월 22일) 역시 ‘한국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책임도 가볍지 않다’ 는 견해를 보였다.

한국 신문에서는 앞서 본 것처럼 일본의 경제협력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논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신문 논조에 대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공헌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일본에게 강요하고 있다’ 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의 각 신문은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비정규직 고용 증가 등 공통의 과제를 양국이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구조가 비슷한 한일 양국은 기술개발이나 에너지/자재의 공동 조달, 제3국에서의 비즈니스 등 경제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고 규정한 닛케이 사설(6월 21일) 역시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한국 신문의 사설은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중앙일보 6월 23일)는 종래의 주장이 대세이기는 하다. 다만 매일경제신문 사설(6월 22일)이 일본에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측의 관용과 미래지향적 사고’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약간의 변화는 보인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의지해야 하는 길잡이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이성이다’ (조선일보 6월 22일)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 눈을 돌릴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한 단상

1. 들어가며 - ‘반일주의자’ 와 ‘무반성주의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쿄 특파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일, 한 가지만을 꼽으라면 2013년 사이타마 현에 취재갔을 때의 에피소드를 들고 싶다. 매우 특별한 취재거나 일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된 계기라서 인상 깊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한 장면 때문이다. 우리 취재진에 동네 주민이 궁금한 듯 관심을 보이면서 말을 걸어왔는데, 한국에서 온 기자라는 걸 알게 되자, 농반진반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럼 당신도 반일기자인가요?”

어느 순간 일본의 저변에서 보통의 일본인들까지 한국 사람은 일본을 무조건 비판하고 공격하는 반일주의자로 전제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서글픈 느낌이 들었다. 물론 상대에 대한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은 한일관계의 오랜 역사 속에 축적된 결과물이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자면 아베 정권의 등장 이후 이런 불행한 규정이 확고해진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의 정치권을 포함해 일본 전체를 ‘무반성주의자’ 로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본에서도 한국인을 ‘무조건적인 반일주의자’ 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해졌다는 느낌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의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일본인 = 선천적 무반성주의자, 한국인 = 무작정 반일주의자’ 라는 도식이 강화되는 것이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결정적 해악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극복해가기 위해 언론이 얼마나 기여했고, 또 과연 기여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들은 원래 그런 존재’ 라고 기존 인식을 고착시키고 그 위에 올라타 질주하는 게 아닌, ‘그들이 지금 왜 그러는지’ 를 이해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데 이론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한국 언론은 올해 그런 길을 걸어왔을까.

2. 불안한 기대감, 2015년 벽두

최악의 한일관계라는 진단 속에 맞이한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은, 최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더욱 분명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올해는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있어야만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하는 논조가 뚜렷해진 건, 역설적이게도 ‘악화일로’ 의 당연한 귀결로도 보인다.

한국 언론들은 우려보다는 개선과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그런 기대감과 당위성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인데, 새해 첫날 공중파 TV 3사 메인뉴스에서 한일관계를 다루는 아이템을 보면 이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잘 드러난다.

“진정한 반성을 한다면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일 관계는 물론 중일 관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1월 1일 SBS 8시뉴스)

“일본의 역사 왜곡에는 당당히 맞서되, 경제에서만큼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혜가 새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놓여있습니다” (1월 1일 MBC 뉴스 데스크, “양국상호 보완적 협력 성장의 밑거름”)

“경쟁과 협력을 아우르는 상생의 지혜로, 두 나라가 더 큰 파이를 만들고 나누는 새로운 반세기를 열어가야 합니다” (1월 1일 KBS 뉴스 9, “일본 따라잡기 반세기... 경쟁 넘어 상생으로”)

새해 첫날 뉴스는 일종의 덕담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이대로는 안된다’, ‘가장 가까운 이웃과 이렇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등등, 그동안 냉각된 한일관계에 답답함이 쌓일 만큼 쌓여왔다는 반증으로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일보 1월 1일 사설)

“... 새해를 맞은 국가적 다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일 정치관계의 전면적 회복이다. 양국 정상이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어느 모로 보나 비정상이다. 이런 비정상이 길어진 결과 두 나라 국민의 상대국 인식은 부정적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활발했던 양국의 인적, 경제적 교류도 그들이 지기 시작했다. 현재의 비정상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양국에서 나란히 고개를 들게 된 이유다...”

그러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위안부 문제 해결도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두지 말라고 한국정부에 유연한 자세를 완곡히 요청하고 있는 대목이다.

“...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다. 불행히도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 대응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일본 사회의 보수화 흐름과 함께 집권 자민당과 아베 신조 총리의 권력기반은 한결 탄탄해졌다. 양국 지식사회에서 이른바 ‘입구로서의 정상회담’ 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상황변화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 이후 ‘출구’로서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해결 과정에 접어드는 입구로서의 정상회담이라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비단 이 사설 뿐 아니라 한국 언론은 광복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이라는 무게감이 내뿜는 역사적인 사명감이라고 할까, 공감대가 넓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른바 ‘아베정권의 질주’ 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법도 그 교정에서 찾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언론의 주문이 좀 더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도 태도 곳곳에서 파악 가능하다. 아베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넘어서는 ‘그 무엇’ 을 찾아야 한다는 고민은 한국사회에 팽배했고, 언론 역시 그 문제의식의 연장선, 혹은 그 선도에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한일관계에 지친 ‘정서’ 를 대변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좀 ...” 이라는 공감대에 바탕한 방향으로 논조가 형성됐다. 다양한 한일관계 전문가들의 제언도 잇따랐고 그 내용은 꽤 적극적인데 한국 언론들은 활발하게 이 의견들을 전파했다.

(동아일보 1월 9일 강성학 교수 칼럼)

“우리는 지독히 악화된 한일관계의 모든 책임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극우적 망동’ 에 있다고 보고 그가 사라지면 일본의 대한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악화일로의 한일관계에 우리 정부가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지적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인정과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요구했고 이 고결한 도덕적 요구가 모든 한일관계의 전제조건이 돼버렸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 초에 지혜롭게 일본에 타협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국가이익을 위한 외교가 아닐까 생각한다.”

(중앙일보, 1월 9일,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 출간 인터뷰)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선 주변국, 특히 일본과 적절한 여유가 없다. 경제협력 인적 문화적 교류 등을 활성화해 공유하는 인식의 기반 자체를 넓혀야 한다.... 이질성도 존재하지만 다양한 채널의 교류를 통해 올해를 한일 관계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아야한다”

MBC는 제휴사인 후지TV와 한일수교 50년 기념사업으로 자사의 뉴스 아이টে를 서로 상대사에서 방송하는 방안을 협의했고 실제로 실현해냈다. 기자 리포트를 상대사 메인뉴스에 방송한 것인데, 물론 양국과 양사가 입장을 달리하는 논쟁적인 주제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상대를 이해해보자는, 말하자면 ‘선의의 기획’ 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보다는 형식에서 한일 협력의 모델을 보여주는 역할을 언론부터 시작해보자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한다는 문제의식이 수교 50주년, 광복 70주년의 연초, 한국 언론 보도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요컨대, 한국 언론은 전기를 찾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3. 휘쓸려간 기대감 ... 세 차례 다가온 파고

한국 언론이 보여준 변화에 대한 주문은 일단 매우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이다. 하여튼 현 상황은 비정상이고 개선이 필요하니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제로 한국 정부가 줄곧 제시하고 한국 사회에서 공유돼 온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쉽게 철회될 요구가 아니라는 점도 엄연한 현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아베 정권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정한 해결의지를 보여야한다는 전제는 열어질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때문에 갈등구조를 풀어보자는 한국 언론의 제언은 일본의 전향적인 움직임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얻는 구조이고, 역으로 보자면 일본으로부터의 미세한 부정적 움직임에도 희망을 보자는 한국 언론의 외침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토대라는 얘기가 된다.

그런 면에서 연초의 기대감은 확장 가능성이 실은 협소한 ‘불안한 기대감’ 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기대와 긍정적 변화를 모색하는 한국 언론이 이 기조를 더욱 강력하고 튼실하게 유지하기 힘들게 만든, 일본발 태풍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은 세 가지 얼굴로 다가왔다. 1) 아베 담화 발표 2) 중국 전승절 행사 반응 3) 안보법안 통과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이슈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일관계의 기대감을 또 다시 복잡한 소용돌이로 몰고 들어간, 이를테면 ‘집어삼킨’ 이슈가 됐다는 게 필자의 진단이다. 개선과 변화를 외치는 한국 언론의 목소리가 일본발 폭발성 이슈에, 작아지거나 아예 묻혀버리고 대신 ‘일본을 질타하는 논조’ 가 다시 강화되는 현실은 여전히 한일관계의 본질임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 또 다른 외통수, 아베 담화

아베 총리가 새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한국 언론으로서 한일수교 50 주년은 이미 우려를 안고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아베담화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지, ‘전망’ 하고 ‘우려’ 하는 기사는 쉬지 않고 이어졌다. ‘침략’ 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침략, 식민지배, 사죄, 반성 등 이른바 4 개의 키워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등등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미세한 분석들을 들이대는 상황이었다. 어쩌면 아베 담화의 한 구절에 연초의 기대감은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우리 언론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한국 언론의 평가는 비판적이었지만, 우려했던 만큼의 충격과는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과거형의 반성이라든가, 진정성 없는 태도라든가, 직접적인 사과를 피했다든가 등등의 비판은 하나하나 일리가 없진 않지만 지금까지 아베 정권에 대한 한국 언론의 우려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가볍다고 할 정도다. 향후 과급에 대한 가장 담담한 평가는 “아베 담화가 한일관계 선순환에 추진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는 무산된 상태”(연합뉴스 8월 14일) 라는 지적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어쨌든 지금까지 쏟아냈던 아베 담화에 대한 두려움에 비하면 이 정도 비판적 평가는 ‘양호’ 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전과는 또 다른 갈등요인을 담화가 제공한 점을 간과할 수 없고, 한국 언론이 이 지점을 통상적인 비판에 묶어 ‘대충’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담화에 포함된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식민지배 사과 거부와 2 차 대전 사과, 즉 과거사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미국을 분리 대응하려는 게 아베정권의 의도’ 라는 지점에 한국 언론이 주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아베담화의 진정한 후폭풍이라고 본다.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 하에 있는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라는 제목은 한국 언론에 의해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부각될 잠재력이 가장 큰 부분이다.

아베 담화가 이전 담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한국 언론들이 점점 더 ‘심각한’ 평가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베 담화의 폭발성은, 이미 올해 반동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식민지배 사죄 대신 지난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언급할 때부터 일부 한국 언론에 의해 주목돼 왔다.

한겨레 신문 (4월 23일)

“미중 향한 반성, 한국 고립 노림수... 정부 ‘외교 새 고민거리’”

“기무라 간 고베대학 교수는 ” 한국이 원하는 식민지배에 대한 언급을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분리하고 한국을 고립화해 나가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과거사 전반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한국에 대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한국 언론이 점점 더 주목하게 된 것이다. 한국을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사죄와는 카테고리를 달리하려는 게 일본 정부의 속내로 소개하게 됐고, 이것은 아베 정권의 ‘위험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신을 재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한국 언론이 ‘부정적 속보’를 계속 끌어 올릴 우물이, 아베 담화로 마련된 샘이다.

실제로 아베 담화가 발표된 뒤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역사문제 질문 응답 코너가 삭제되자 한국 언론은 ‘식민 지배’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주목했고, “아베 담화는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조직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는 일본 내 심포지엄 발표를 의미있게 소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10월 4일) 또 조선인 징용자와 중국인 등 다른 나라 출신 강제노역을 성격이 다르다는 미즈비시의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한국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식민지 한국에 대해서는 사죄할 일이 아니라는 일본 내 인식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락 프로그램인 MBC의 ‘무한도전’이 징용자의 아픔을 조명하기 위해 나가사키 현 하시마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일본의 인식에 대한 반감이 한국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 저변에 꽤 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베 정권이 식민지배 반성을 거부하는 대신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만을 반성해 결국 한국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만들려 한다, 이런 관점은 한국 언론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새로운 논거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자주 보여왔던 다음과 같은 논리는 대단히 머쓱한 처지가 되는 셈이다.

(서울경제신문 기자 칼럼 6월 10일)

“... 누구나 과거를 되돌아보면 잘못을 저질렀던 경험이 하나쯤은 떠오를 것이다. 그런 과거가 부끄럽게 느껴져 반성하고 또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거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못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전후 70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방위에서 나오고 있다. 명석은 이미 깔렸다. 일본은 이 기회를 살려 과거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사죄의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

일본이 당연히 반성할 것을 전제하고 펼쳤던 이런 방식의 촉구가 얼마나 순진한 건지를 아베 담화는 확실히 보여줬다. 대신 ‘일본과 잘해보자’는 한국 언론의 주문도 그만큼 멈칫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아베 담화는 한국 언론으로 하여금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일본이 과연 식민지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과거사 인식과 관련해 아베담화는 한국 언론을 더욱 세분화된 가치 논쟁으로 끌어들이고 일종의 ‘역사 근원주의’에 집중하게 만든 계기를 제공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서만, 식민지배에 대해서만, 특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추가적인 혐의’는 한국 언론으로 하여금 갈등과 대결 구도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한일관계 개선의 외통수 구도를 겨우 벗어나려는 찰나에 더욱 구체적인 외통수 구도가 막아선 셈이다. 연초에

꿈틀대던 언론의 제언, ‘이제 전기를 마련하자’ 는 주장은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2) 중국 전승절 행사 ... 한일관계 재정립 ?

두 번째의 파고는 중국 전승절 행사다.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한국 언론으로서는 매우 압도적인 주제일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고, 상징적 장면으로 과거 김일성 주석이 차지했던 자리를 한국의 대통령이 서 있는 이 상황을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중대한 과제가 한국 언론에 주어진 형국이다.

능동적 외교라는 긍정적 측면과 한미일 공조의 균열로 읽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 건 당연한 일이다. 하여튼 전자의 유의미함을 잘 이끌어내 확장해 보자는 게, 한국 언론의 대체적인 자연스런 도달점이라 할 수 있다. 한중 접근이 북한 문제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진단이 한국 언론의 1 차적인 평가다. 그런데 이와 함께 한일관계를 푸는 데도 유익한 방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중앙일보 9월 4일 사설)

“꼭 막힌 한·일 관계를 한·중·일 3각 구도의 틀 속에서 풀기 위해서도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동아일보 9월 4일 사설)

“역사 왜곡 문제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도 복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일보 9월 3일 사설)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일정상회의로 이어진다면 한일 중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MBC 9월 3일 메인뉴스)

“일본에는 새로운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한중 접근을 통해 어떻게 한일관계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인가?
매일경제신문의 사설 제목은 아주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중 정상회담, 북한과 일본에 변화를 압박했다”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상징된 한중 접근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일본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 -> 한일관계 개선의 신호탄’ 으로 긍정적으로 보도했지만, 그 행간의 내용적 측면은 한국과 중국의 일본 ‘압박’ 효과라는 측면이 불가피하게 부각된 것이다. 갈등과 역관계, 견인의 측면을 부각한 이런 분석들은 물론 일정한 진실을 담고 있지만, 한일관계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자칫 대립 구도가 과도하게 부각될 소지를 안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전승절 행사에) 시큰둥한 쪽은 일본이다... 항일전쟁 승리를 내세운 행사 자체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SBS 8 시뉴스 9월 3일)

이런 프레임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 기본적으로 그동안 쌓인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전승절을 전후한 시점에 일본으로부터 전해오는 ‘불편한’ 반응이 이런 관점을 확신하게 만들고 증폭시킨 바가 적지 않다.

이러한 스가 관방장관이 9월 2일 정례회견에서 “중전부터 한국이 그런 경향(중국에 접근하는 경향)이라는 생각을 했다, 제 3국의 일이므로 정부로서 발언을 삼가고 싶다” 라는 발언은 한국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냉소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참석에 대해서 “극도의 유감이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라” 는 매우 불쾌해 한 논평도, 한국 언론이 일본에 대해 불신이 깔린 태도를 취하게 만든 배경으로 작용했다.

급기야 ‘한국은 유엔 사무총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 는 하기우다 총재 특보의 발언은 한국 언론이 주요하게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방식도 ‘또 막말을 쏟아냈다(MBC 메인뉴스)’ ‘독설을 퍼부었다, 망언을 했다(SBS 메인뉴스)’ 처럼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하게 만들었다. 일반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일본을, ‘뭔가 잘못된 사고’ 를 지닌 것 아닌가 하는 가치지향적 잣대로 쳐다보게 됐다.

전승절을 둘러싼 한국 언론의 보도 양태는 형식적으로는 정상회담 추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한일관계 ‘개선’ 에 방점을 찍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본이 한국을 불쾌해 한다’, ‘한국은 그런 일본을 중국과 함께 압박하고 견인한다’ 라는 갈등과 대립의 프레임이 강화되는 과정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독자와 시청자들은 한일 관계개선을 얘기하는 마당에서까지 갈등의 실상을 심각하게 느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 연초의 기대감과 당위성은 이렇게 다시 한번 휘청이고 위축되는 진행을 보였다.

3) 안보법안의 한국적 독법

세 번째 파고는 역시 안보법안 통과다. 안보법안이 통과된 뒤 9월 19일 각 일간지의 1면 톱기사와 방송뉴스의 머리 기사는 당연히 이 소식이 차지했다. 가장 심플한 정의,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는 규정과 함께 우려와 경계의 메시지가 대체적인 기사의 핵심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당일 신문들의 사설은 1면의 기사 제목과는 사뭇 다른 너양스를 내보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중앙일보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법안” 새벽까지 진통 (1면)

“집단적 자위권 갖춘 일본, 경계하되 최대한 활용해야” (사설)

동아일보 “일,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전쟁할 수 있게된 일본, 전략적 용일 고민할 때다”

한겨레 ‘침략’ 사죄 않는 일본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로

‘위험한 칼’ 일본의 안보법안, 지혜로운 대응을
 조선 일 안보법안 본회의 통과 강행... 한밤 진동
 정치 폭주에 아무도 제동 못거는 일본을 보는 불안감
 경향 안보법안 막판 진동 ‘전쟁할 수 있는 일본’ 초 읽기
 결국 평화헌법 버리는 아베정권
 한국 끝내 평화 저버린 아베정권
 사실 없음
 서울 아베 불신임 결의안도 부결... 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은 정녕 군국주의로 돌아갈텐가

1면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전쟁할 수 있는, 사죄 없는 일본, 평화 저버린 일본 등의
 강경한 가치 판단적 기사가 우려를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사실에서는 미묘한
 차분함이 발견된다. ‘활용’, ‘용일’, ‘지혜로운 대응’ 등 현 시점을 냉정하게 판단해 우리의
 방향 설정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려와 경계는 물론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달라진 동아시아 안보환경, 한미일 동맹의 본질 직시, 북한 변수에 대한 면밀한 판단 등이
 전제된 ‘우리의 선택’ 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선회에 대한 비판과 우리의 현명한
 선택, 이 두 가지 생각의 교차가 언론을 고민스럽게 한 것이다. 그런 언론의 고민은 다음 글에
 잘 담겨있다.

(서울경제 9월 19일 사설, ‘전쟁할 수 있는 길’ 로 가는 일본)

“... 한미동맹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을 통한 일본 견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국제정세의 현실이다. 물론 북한 핵 억제에 대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경제·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까지 겨냥해야 하는 등 역내 세력 균형이라는 딜레마가
 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이 실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본의 군국화 흐름에 대해
 도덕적·역사적 비판을 넘어 한미일 공동안보체제 등을 통해 집단자위권의 확대해석과 과잉
 군사행동을 억제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한국경제 9월 19일 사설) 하기 위해, 일본의 변화를 우려하고 경계만 할 것이
 아니라 한발 떨어져 현실적이고 냉철하고 담담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보도 양태에서 보듯 현실적으로 이런 제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이라는 강력한 스트레이트에 밀려난 모양새다. 거칠게 말하자면 안보법안 이슈는 ‘반성
 없이 질주하는 일본’이라는 전통적인 프레임이 강화되는 결과만을 낳았다. 안보법안 통과와
 이것이 한국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과정에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는
 한일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 제언들을 위축시킬 정도로 강력했던 것이다.

이런 위축이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연이은 일본 내 반대 시위다. 한국
 언론은 아베정권의 안보법안을 반대하는 일본인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베 정권이 일본
 내에서도 일방 질주하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 놀라고 집중하게 됐다. 요컨대 아베 정권에

대해 ‘옳고 그름’ 이라는 가치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등장한 셈이다. 다수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국민들이, 아베의 전쟁주의에 반대한다는 매우 흡인력 있는 메시지는 한국 언론이 놓칠 수 없는 소재가 됐고, 이를 통한 일본의 대결 구도는 한국 안방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공중파 방송 3사는 9월 15일 경부터 거의 매일 메인뉴스에서 안보법안 통과 여부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MBC의 경우, 16,17,18,19,20일 메인뉴스에, KBS는 15,17,18,19,20,23일 메인뉴스에, SBS는 16,17,18,19,20,21일 메인뉴스에 안보법안 처리 준비 상태와 국회 통과, 그리고 이후 파장을 연이어 다뤘다. 그리고 그 방식은 대부분 반대시위를 주요하게 부각한 보도형태였다.

보도 아이템의 제목을 보면

MBC “일, 안보법 후폭풍 학자 시민 폐지투쟁” “여론무시 일방통행에 강한 역풍”

KBS “도쿄에서 3만명 항의집회” “규탄성명 시위 잇따라 아베지지율 추락”

SBS “안보법 역풍 들끓는 일본” “지지율 추락” 등등이다.

원전 반대보다 더욱 강력한 아베 정권 비판을 보면서, ‘민심을 거스르는 아베정권 對이에 맞서는 일본 시민사회’ 라는 프레임이 강화돼, 한국 언론의 일본 바라보기 중 가치지향적인 관점이 역시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하나의 확신이 심어졌다.

아베 정권, ‘일본의 퇴행적인 정치권력’ 이,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의 근원이라는 지점으로 한국 언론의 문제의식이 되돌아간 느낌이다. 연초에 한일관계와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한국 정부에 현실적인 태도를 요구했던 논조와는 사뭇 달라진, 일본을 ‘질타하는 언론’ 의 모습이 재정비됐다고 할까. 한국 언론은 아베 정권의 이른바 ‘무도함’ 에 더욱 주목하게 됐고, 담담함 속에서 싹틀 수 있는 한일관계의 개선 기대감과 요구는 다시 한번 존재감이 희미해져갔다.

4. 끝내며 - 언론의 역할이란?

다소 부정적으로만 회고한 느낌이지만, 과연 한일관계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 과정을 돌아보며 한번 진솔하게 직면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모든 이슈에 관해 흔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한일관계에서 언론에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

아베 총리는 줄곧 역사문제는 역사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아베 담화를 비롯해 정작 아베 총리 자신이 역사가에 맡기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한국인과 한국 언론은 받고 있다. 아베 담화가 한국 언론의 우려대로 식민지 시기에 대한 총체적 재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과거사 전쟁이 되는 셈인데 그 결과는 어디로 갈 것이며 양국 언론의 역할은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한일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하여튼 최악의 상황을 외형적으로는 탈출하게 되겠지만 50주년에 걸맞는 이해와 소통이 내용적으로

넓어지고 깊어졌는지는,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구조라면, 언론의 역할은 실은 철저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연초의 한일관계 개선 제언들이 일본에서 날아온 세 차례 파고에 허약하게 휩쓸려버렸다고 다소 극단적으로 주장한 이유는, 한일관계에서 언론의 역할과 공간은 이처럼 협소하고 제약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한계만을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올바른 역할도 도출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방법은, 미세해도 긍정적인 서로의 움직임에 포착하고 확장되도록 차근차근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일단 한국 언론은 연초에 그런 역할을 해내려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앞서 일본에서 날아온 폭발성 메시지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의 작은 노력들이 문히게 만드는 그 움직임을 제어하는 역할은 일본 언론을 비롯한 일본 쪽에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본 내 긍정적 기류와 변화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의 환경 조성은 한국 언론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반일 언론’ 과 ‘반일 기자’ 는 골방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으로부터 끊임없는 영향을 받으면서 강화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한다. 한국 언론이 갈등의 원인을 일본에게만 돌리고 일본을 과도하게 비난한다는 지적은, 한국 언론도 겸허하게 되돌아 볼 대목이다. 다만 그 책임과 해법은 한국 언론 혼자서 짊어지고 풀어갈 일일까.

일본에서 날아온 이슈에 연초의 제언이 맥없이 무너졌다고 강조한 이유는, 한국 언론에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은 ‘맥락’ 과 ‘관계’ 에서 형성된 것이고, 따라서 어느 한 쪽만의 문제가 아니며, 결국 한일이 같이 풀어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 언론의 고민과 입장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배려’ 와 ‘절제’ 가 한일 양국 언론의 핵심적 과제 아닐까 싶다.

최악의 한일관계일수록 언론의 역할은 저변의 보통 사람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점을 바라봐야 한다고 믿는다. 배려와 절제 그리고 성찰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며 이를 통해 작지만 긍정적 움직임을 어떻게 소중히 키워갈 수 있을지 고민이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세션 2: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일 관계”

격동의 동북아와 新 한일관계의 모색

< 들어가며 >

앞으로 2 달정도 남은 2015 년 . 후일 역사학자들은 2015 년을 어떤 해로 기록할까 ? 특히 동북아에서 2015 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 최근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 남북이산가족 상봉 ,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 ,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 주년 행사와 북중 관계개선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과 미일관계 증진 ,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와 미중 갈등 심화 , 일본의 안보관련 법안 통과와 주변국들과의 마찰 등이 잇따랐다 . 동북아에 있어 2015 년은 분명 격동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 하지만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하고 갈등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 안보 측면에서는 현상유지 세력과 현상변경 세력이 경쟁하고 있지만 경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와 인도적 지원 , 국제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상호 의존성이 증대하고 있다 . 이 글의 목적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원화되고 있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데 있다 .

<1> 오바마의 리밸런싱 전략과 일본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 우선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를 꼽을 수 있다 .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또는 ‘리밸런싱 (rebalancing)’ 이라 불리는 ‘아시아 중시 정책’ 이 동북아의 외교 , 안보 지형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

오바마 정부는 1 기에 이어 2 기 때도 ‘리밸런싱’ 을 강조하고 있다 . 하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 일본과의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즉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재조정하면서 한 . 미 . 일 3 각 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 부족한 국방예산을 메울 대안으로 미국이 제시한 것이 ‘동맹 역할의 재조정’ 이다 . 미국은 우선 일본을 ‘동맹의 중심축 (underpin)’ 이라고 치켜 세운 뒤 , 일본과 방위지침을 재조정하는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에서도 ‘리밸런싱’ 을 (1) 동맹의 현대화 (2) 제도의 창조 (3)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으로 요약했다 . 특히 미국은 첫 번째 동맹의 현대화에서 미일동맹의 현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일본과의 동맹을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국방부나 국무부뿐만이 아니었다 .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분야 가정교사로 불리는 수잔 라이스 (Susan Elizabeth Rice)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오바마 정부는 결코 ‘아시아 중시 정책’ , 즉 ‘리밸런싱’ 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또 동맹 가운데 가장 먼저 일본을 지목하면서 “15 년 넘게 끌어온 미일 상호방위조약 개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고 선언했다 .

실제로 지난 4 월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패권 국가 미국의 핵심 군사 파트너라는 입지를 확실하게 굳혔다 .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미 오바마 정부는 아베 정권이 원하는 ‘집단 자위권’ 과 ‘보통 국가로서의 발전’ 도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시퀘스터 등으로 국방예산이 삭감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패권이 쇠퇴해가는 상황에서 미국은 ‘리벨런싱’ 을 통해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전략이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집단 자위권’ 그리고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보통 국가’ 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2>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의 한국

지난 16 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과 열병식 참석으로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 는 ‘중국 경사론’ 을 워싱턴 정가에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인 중국과의 ‘전방위 관계 증진’ 과 ‘한미 동맹강화’ 라는 두 축을 절묘하게 넘나들어야 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현실이다.

동북아 안보 정세는 전통적으로 중국 - 러시아 - 북한 대 (對) 한국 - 미국 - 일본의 대립관계였지만 최근에는 중국 - 러시아, 한국 - 중국이 밀착하면서 이러한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다. 한미 동맹을 안보의 축으로 삼아온 우리에게 미중 갈등의 확대 양상은 더 복잡한 방정식에 직면하게 했다.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면서 경제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모양새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풀어야 할 외교 방정식이다.

중국 역시 변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보다 남한을 더 챙길 것이라는 기대는 외교를 모르는 소리다. 실제로.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 북한도 최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 주년 행사를 기점으로 다시 가까워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을 방문한 류원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 국가서열 5 위) 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제 1 비서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중조 (中朝) 전통 우의는 양측 선대 지도자들이 직접 만들고 키운 것으로 양측 공통의 보배이니 우리가 더욱 귀하게 여길 가치가 있다’ 고 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도 “조중 관계는 단순한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피로 맺어진 친선의 전통에 뿌리를 둔 전략적 관계” 라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가운데는 ‘한일 갈등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분열을 일으킨다’ 고 보고 한중 밀착이 한국의 대일 강경자세를 더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또 오바마 정부의 ‘리벨런싱’ 을 통한 ‘동북아 안보협력 강화 역시 한 - 중 밀착으로 차질을 빚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중국 배려’ 와 ‘미 - 중 사이의 등거리 외교’ 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중국에 가까이

다가서는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교차하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본 내 ‘반한 감정’도 이런 이유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5일 미국과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를 타결했다. 안보동맹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동맹까지 갖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TPP 에 가입하지 않았다. 아직도 한국 내에서는 TPP 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지 아닌지를 결정 짓지 못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중국과의 관계개선’ 과 ‘미국과의 동맹강화’ 는 과연 별개의 문제일까? 적어도 북한이라는 외부 위협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내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즉 북한의 갑작스런 도발을 막고 북한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이 아니라 안보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세워져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보완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킨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냉각된 한일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양국 지도자들의 ‘통 큰 정치’ 가 필요하다. 2009 년부터 3 년 동안 도쿄에서 특과원을 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배려하는 ‘통 큰 정치’ 를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왕조 의례 반환’ 이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 지도자의 ‘통 큰 정치’ 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물론 한국 정부 지도자들 역시 과거를 잊어서는 안되겠지만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건설하는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전보장 문제와 한일관계

◎ ‘안전보장 문제와 한일관계’

I. 아시아·태평양의 정세 인식

글로벌 규모의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속에서 아시아·태평양의 안전보장 환경이 변모를 거듭하는 중이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해양진출을 본격화한 중국, 핵개발·미사일의 성능 향상에 따라 군사적 위협을 증폭시키는 북한, 그리고 극동에서의 군사활동을 다시 활발히 하고 있는 러시아. 아베(安倍) 정권은 재균형(rebalance) 정책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중시를 선언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영토와 주권, 경제권의 등을 둘러싸고 완전한 평시도 유사시도 아닌 상황, 즉 그레이 존(grey zone) 사태의 장기화·상시화(常態化)에 대비한 안보법제의 정비 등 차츰 어려워져 가는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박근혜 정권은 한미동맹의 유지와 함께 북한의 위협 대처에서는 한미일의 연계를 꺾으면서도, 거대 국가 중국에 접근하여 독자적인 외교안보 전략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박 대통령이 내세우는 ‘통일’ 정책이 동아시아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일 양국의 안보 정책에서 보이는 이러한 어긋남과 외교전략의 입장 차이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향후 안전보장 분야에서도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아시아태평양의 21세기 질서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미중 양 대국과의 관련성을 짚어보면서, 한일 안보협력을 향한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한일 양국의 안보 정책

1. 아베 정권의 안보외교 전략 = ‘적극적 평화주의’ ‘가치 외교’

이 생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등 안보법제의 정비와 함께,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인 미일동맹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억지력을 향상시킨다.
- ② 미일동맹을 중추로 삼아 미국을 축으로 한 한국, 호주, 인도 등과의 연계, 네트워크화 추진을 지원한다.
- ③ PKO에 대한 참가, 인도적·부흥 지원 등으로 국제 공헌을 확대하고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아베 정권이 실제로 추진해 온 안보 정책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안보 체제의 강화를 꾀하는 초석으로 평가하는 것은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신 가이드라인(지침)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 법제이다.

이것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해양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 핵개발·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북한, 그리고 중동에서부터 인도양, 말라카 해협 등을 거쳐 서태평양에 이르는 시레인(해상수송교통로) 등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일본의 안전보장 체제의 틀이 넓어짐에 따라, 미일 안전보장상의 일본의 책임 부담이 확대된다. 아베 정권으로서는 독자적으로 방위력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민주주의, 자유, 법의 지배, 인권 등의 여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바다의 동맹’ 네트워크화, 3 개국의 안보협력 태세 (북한 문제에서의 한미일 연계, 미국·일본·호주 안보협력, 미국·일본·인도 안보대화) 의 충실화를 목표로 한다. TPP(환태평양 경제연계협정) 의 큰 틀에서의 합의는 중국을 염두에 둔 안전보장 차원의 연계 강화를 보완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상외교의 강화 - ‘지구분을 내려다보는 외교’

국가안전보장국의 창설에 따라, 외교안보의 성청별 분리를 배제하고, 아베 신조 수상의 신뢰가 깊은 야치 쇼타로 (谷内正太郎) 국장이 기반 만들기를 진행하여 전략적인 정상외교를 지탱하고 있다.

3. 박근혜 정권의 안보외교 정책

일본에서 본 박근혜 정권의 안보외교 전략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접근하는 대 미중 균형 외교 (‘미중 양다리 외교’ ‘미중 저울 외교’)

②일본을 뺀 남북 통일 전략

■한미동맹의 유지

박 정권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 억지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의 존재를 중시하는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접근 외교

동시에 박 정권은, 한미동맹과의 양립이 가능하다면서 대중 접근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 정권의 이러한 대중 경사 (傾斜). 직접적인 이유로는 우선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을 들 수 있으나, 근저에는 대중 경사를 촉진하는 두 가지 요인이 얽혀 있다.

① G 2 론

첫 번째 요인 - 한국 내에 침투한 미중 양극 (G2) 론.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쇠퇴하는 미국’ ‘대두하는 강한 중국’ - 이 G2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접근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외교이다.

이러한 속에서 형태를 바꾼 G2 론 -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신형 대국 관계’ 론이 등장한다. 이 개념은 미중에 의한 태평양 분할론 · 공동관리, 핵심적 이익의 상호 존중, 공존공영 · 충돌 회피라는 의미가 담긴 중국판 G2 론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②반도 통일 준비

두 번째 요인 - 남북 통일론. ‘통일은 대박이다’ - 박 대통령은 2014 년 초두의 회견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국민들 중에는 통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통일은 커다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향한 구체적인 준비를 추진할 결의를 표명한 것인데, 계기가 된 것은 북한의 권력구조에 생긴 이번이다. 최고권력자 김정은의 후견인인 장성택의 숙청 (2013 년 12 월) 은 통일

정책의 검토 작업을 가속화했다. ‘북한 붕괴도 있을 수 있다.’ 북의 체제가 흔들리면 미중의 용인을 얻어서 한국 주도로 북을 규합할 기회가 도래한다. 박 대통령은 미일 양국으로부터 우려를 받는 와중에 중국의 항일전승기념 군사 퍼레이드(9월 3일)를 참관했는데, 이것은 항일전쟁의 역사로 한국이 정통성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중국에게 인지시키면서, 이를 내외에 과시하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평화통일’이 현실감을 띠는 때에 불가결한 중국의 지지를 확실히 손에 넣기 위한 대중 배려이기도 했다.

Ⅲ. 한일 양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근원적 과제와 전망

- ① 한미일중은, 미래를 향해 ‘외압’ 보다 ‘내압’ 이 정치를 움직이는 “계절” 을 맞는다. 내압 요인이 증폭되고 정치 동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의 리더는 국내 지향성이 보다 선명해진다.
- ② 한일 관계 악화의 근원에는 역사인식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다케시마(한국명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안전보장과는 별개로 해결에 뛰어들어야 한다. 안보를 놓고 벌이는 논의에 역사 문제가 섞여 들어가면 안보 논의는 변질된다.
- ③ 아베 수상이 주장하는 ‘가치 외교’ 에도 함정이 있다. 민주주의 / 자유 / 인권 / 법의 지배 등의 여러 가치는 근대화 성공한 국가들이 부르짖는 플러스 가치이지만, 예를 들어 ‘인권’ 하나만 보아도 역사문제가 얽히면 그 해석과 정의, 적용 방식도 달라진다. 그리고 출구 없는 상극(相兇)의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Ⅳ. 끝으로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로부터 50주년이다. 현재 양국 간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얽혀 있음을 여기에서 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일 협력을 빼놓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양국은 선인들이 쌓아 온 지혜를 배워서 서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이야말로 어떠한 장애도 극복하고 새로운 반 세기를 향해 한층 더 협력의 차원을 높이기 위한 한 발을 내디뎌야 한다.

세션 3: “경제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한 - 일 관계”

새로운 한일 협력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경제적 측면에서

1. 한일 경제구조의 변화와 관계악화: 아이덴티티 문제

경제를 역사나 그 밖의 것과 분리하려는 기능론은 중일 관계에서는 가능해도, 한일 관계에서는 한국 측에 추격국가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는 한 간단하지 않음. 중일 간에서는 중국이 시장과 노동력, 일본이 기술과 노하우라는 분업이 성립. 일본의 동북아시아 경제에 대한 관점은 인구동태 경험에 기반하여 과도하게 비관적 (미국·동남아시아·인도 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낙관적), 한국은 통일 편향 (bias) 으로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향, 이것도 일치하지 않음.

- 역사·영토문제로부터 경제는 분리할 수 있는가?: 비즈니스는 할 수 있어도 국가로서는 불가능하다 (National identity 로서 남아 있는 ‘쫓기는 일본’ ‘쫓아가서 추월하는 한국’)
←아직 20 세기형의 경제인식 (정치와 미디어): 수출은 이기는 것이고 수입은 지는 것, 외국 자본은 국내시장을 ‘침략’, 국산 농산품만이 안전
←아직 20 세기의 성장 모델: 대기업에 의한 대량생산·대량수출의 시장 점유율 다툼, 개입을 선호하는 정부, 성립하지 않는 경영자 시장, 변동환율제의 공포

●한일 6 고 (高) 의 시소 게임:

- 2008-2012 년 : 일본의 6 고 (엔고·에너지고·노동규제·환경규제·관세고 [FTA 교섭 뒤처짐] →한국 산업의 따라잡기 (점유율 확대), 대일 수입 의존의 감소, 일본을 제외한 FTA →이명박 정권 ‘일본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 2013- : 한국의 6 고 (원고·에너지고 [한국 전력 문제]·법인세고 [세수 부족]·노동개혁 뒤처짐·환경규제·통상교섭 뒤처짐 [TPP 등 메가 FTA 대응 뒤처짐] →일본은 한국과의 경합 기피, 수익 개선 (과거 최고 수익 갱신) → ‘한국경제 붕괴론’

●중국 경제관의 차이: 일본의 탈중국 (FDI 감소·기업 내 무역 감소·ASEAN 으로 전환, TPP>AIB) vs. 한국의 중국 경사 (쌍방향의 FDI 확대, 무역 비중 확대, 한중 FTA>TPP)

- ←서로 다른 지정학, 통일의 열망 (통일대박론), 반일 역사동맹, 신흥국 동맹 (‘법의 지배’ 개념의 차이, 가속하는 G2 론)
- ←일본의 강한 인구동태 비관론 (주류는 다극화론, 밝은 동남아시아·인도 vs. 어두운 동북아시아론)

●성장전략과 미국 경제에 대한 관점의 차이: 일본의 탈제조업 vs. 한국의 제조업 수출

- ←일본의 관심은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IoT) 이며 파트너는 미국, 한국은 신흥시장 수출이 우선?

2. 한일 경제관계의 재구축 : 글로벌리즘에서 지정학으로의 회귀

관계 재구축의 포인트는 20세기형 사고를 버리고 경제 실태를 직시한 이해에 입각하는 것. 일본은 개방 혁신(open innovation)과 직접 투자 수용을 기폭제로 할 수 있을지, 한국은 일본과 다른 성장 모델 구축으로 분업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 중요한 개혁 경쟁, 자원 공유, 리스크 분산의 파트너로서의 자리매김. 개선의 출발점은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분야로부터.

- 글로벌화한 경제 실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 : 기업이나 산업에 국경은 설정할 수 없다, 기술 혁신 능력과 산업 집적을 향한 전환이 필요
- 한일 양국은 모든 면에서 경합하지는 않는다 (수평 분업으로의 이행, 한국 5대 산업=일본 산업), 높은 보완성 (상사[商社]/국제 금융, ODA 조달)
- 전략적 관계 (1): 개혁 경쟁 (시장 개방, 경제특구 활용, 입지 개선, 교육 개선, 여성 활용, 저출산 고령화 정책)
- 전략적 관계 (2): 자원 공유 (벤처·기업가, 에너지·환경, 문화, 관광, 사회 서비스 개선을 향한 빅데이터, 표준, 전문 인재)
- 전략적 관계 (3): 리스크 분산과 공공재 제공 (자연 재해, 전염병 방지, ODA 협력)
- 전략적 관계 (4): 국가가 개재하지 않는 교류 (기업, 지방, 시민단체, 개인 등)

3. 남은 조정 과제

일본은 차츰 구조 조정을 끝내고 재정 재건을 향한 성장이 불가피. 한국은 구 성장모델의 정체에서 구조 조정으로. 일본의 성장전략 전환을 짚은 층 노동 제공, 벤처, 규제 개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관계로. 한국의 TPP 대응은 RCEP, 한중일 쌍방에 영향.

- 한일의 정치경제 사이클에 나타난 엇갈림 :

일본 : 아베노믹스 (Abenomics) 의 지속과 성장전략 강화

디플레 탈출, 신(新) 세대의 화살 (① 성장 전략의 가속 : 노동 투입 증대 [여성·고령층], 이노베이션 촉진·경제통합 가속 [Inbound FDI, 농업개혁] ②사회보장 개혁, ③저출산 대책) → 우선 순위는 성장으로 (일본판 ‘개혁·개방’ 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 의료, 사물 인터넷 [IoT], 로봇, 고도의 교통 시스템 등)

한국 : 난관에 봉착한 정책과 4대 구조개혁 (노동, 교육, 공공부문, 금융) 으로 금융·재정 모두 한계 (가계부채/기업재무 악화, 사회보장비 증가)

→ 우선순위는 개혁으로 (정치 성숙을 점치는 기득권 조정), 새로운 성장 모델은 ??

- 한중일인가, 중일 + 한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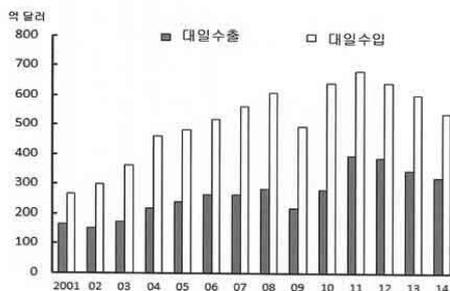
일본 : TPP 합의를 축으로 지역포괄 연대 (RCEP) 추진, 한국이 TPP 교섭에 들어오면 한중일 교섭은 한일 : 고수준 > 한중 : 저수준으로 분열. RCEP 의 수렴 수준, 관세 방식도 한국의 TPP 참가 타이밍이 영향을 줄 것인가.



1. 축소로 향하는 대일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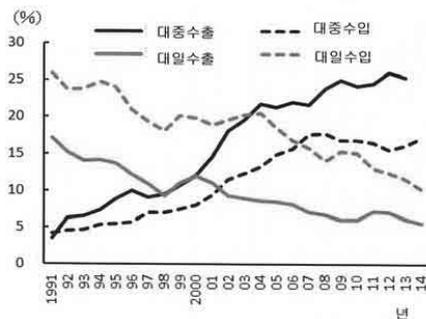
- ▶ 대일무역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1년에 비해 2014년 약 20% 감소
 - 수출 : 396억 달러 → 321억 달러, 18.9% 감소
 - 수입 : 683억 달러 → 537억 달러, 21.3% 감소
 - 대일무역적자는 과거최고치인 2010년에 비해 146억 달러 감소(361억 달러 → 215억 달러, 약 40% 감소)
- ▶ 일본 무역비중 감소, 중국 비중 증가
 - 수출비중은 2000년경부터 중국이 일본을 역전
 - 수입비중도 2007년경부터 일본을 역전

한국의 대일무역 추이



자료 : KOTRA

대중·대일 수출입 의존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 대일수출 감소 원인

① 일본경제 침체 지속과 수입 감소

- GDP성장률 : 2011년 0.4%, 2012년 1.0%, 2013년 2.1%, 2014년 -0.9%
- 일본의 수입 감소(달러) : 2011년 23.4%, 2012년 4.2%, **2013년 -5.6%, 2014년 -2.6%**

② 엔저의 영향 : 주로 산업재

- 일본의 무역환율 : 2011년 11월 1달러=77.27엔 → 2014년 12월 1달러=118.44, 53% 엔 절하
- 주요수출감소품목 : 철강제품 2011년 대비 23.2% 감소, 석유화학제품 10.5% 감소

③ 원유가격 하락

- 수출 1위 품목인 광물성연료 : 2011년 86.7억 달러 → 2014년 65.1억 달러로 25% 감소

④ 혐한류 영향 : 주로 소비재

- 무선전화기 : 2012년 23.4억 달러 → 2014년 10.6억 달러로 50.5% 감소
- 주류 : 2011년 2.9억 달러 → 2.7억 달러로 7.1% 감소

⑤ 일본산업구조 변화 : 해외 생산 증가 → 역수입 감소 추세

- 일본의 해외생산비율 증가
 - ※ 일본국내 전법인 베이스 : 2009년 17.0% → 2013년 22.9%(과거 최고)
 - 해외진출기업 베이스 : 2009년 30.5% → 2013년 35.9%(과거 최고)
- 수송기계(43.7%), 정보통신기계(30.4%), 범용기계(27.6%), 화학제품(20.5%)의 순
- 일본 해외진출기업의 역수입도 감소

3

3. 대일수입 감소 원인

① 한국의 전체수입 감소, 설비투자 부진

- 한국의 수입 감소 : 2011년 23.3%, 2012년 -0.9%, 2013년 -0.8%, 2014년 1.9%
- 설비투자 증가율 : 2011년 4.7%, 2012년 0.1%, 2013년 -0.8%, 2014년 5.8%

②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진전

- 엔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일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진전
- FTA 확대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 진전
- 과거 엔저 시에 대일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는 이번 엔저 시에는 나타나지 않음

③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증가 : 수출에서 → 투자로

- IT 제품의 소재·부품 등 기존에 수입하던 제품을 한국투자 확대로 한국 국내생산으로 대체 진전
- 2012년 이후 주요 수입품목이던 관광 필름, 파라크실렌 등 한국투자 증가

④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 삼성전자의 등 조립메이커의 해외진출로 진출 지에서 소재·부품·장비 등을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입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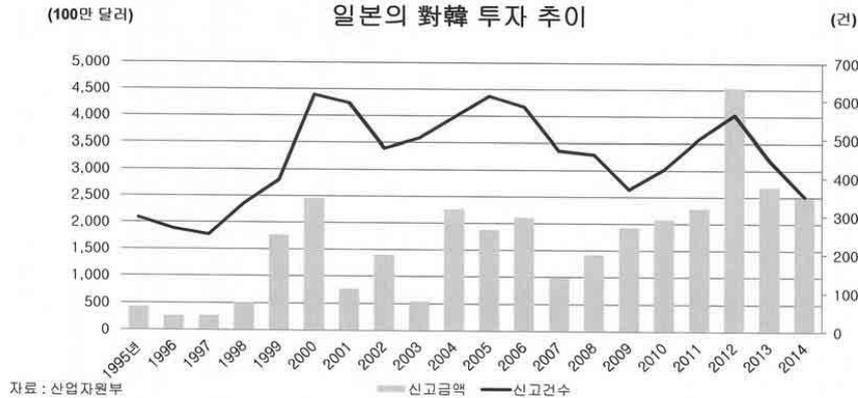
4.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추이

① 일본의 대한투자는 증가 추세

- 약 50%의 엔저에도 불구하고 대한 투자는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음
- 과거 최고치를 기록한 2012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나 트렌드는 증가 추세로 판단(※수출→투자의 영향)
- 한국 제조업의 기술력, 인재력, 조립 대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투자, 내수용 서비스 업종 등

② 향후 대한 직접투자 급증은 기대난

- 제조업은 엔저, '협한류'의 영향이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투자결정의 타임 레그)
- 단지, 서비스업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5

5. 최근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인식

① 기존 한일 경제관계의 패러다임 변화

- 지금까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다량 수입하던 소재·부품·장비 수입 감소 → 대일무역적자 축소
- 한국의 세계 수출이 늘어나도 대일수입이 증가하는 구조 탈피 : 국산화 진전, 수입선 다변화 등
- 일본의 고령화·내수침체로 대일수출 증가도 기대난
- 일본은 향후에도 엔저 트렌드로 엔고로 인한 무역/투자 증대 기대난

② 양국이 협력보다는 경합적으로 보는 시각 팽배

- 양국이 처한 경제 조건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국은 서로를 경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
- 한국의 중국 경사,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시각
- 협한류자들은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를 "한국경제의 붕괴"로 왜곡 평가
- FTA 체결, 원자력발전, 인프라 수출 등을 경합적 시각으로 상대국을 평가

③ 양국 새로운 경제관계 구축을 위한 관심 저하

- 양국 경제관계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기업은 새로운 한일 경제관계 구축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
- 한국은 주로 중국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주로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에 관심
- 협한류/반일감정도 이에 한 몫
- 일본기업의 향후 3년, 해외투자 관심지역 중 한국은 15위에 불과(일본국제협력은행, 2014년 조사)
- ※ 1위 인도, 2위 인도네시아, 3위 중국, 4위 태국, 5위 베트남

6

6. 새로운 협력 Agenda 대두

① 고령화 대응을 위한 협력

- 일본의 고령화 경험은 그대로 한국에 나타날 가능성 : 양국간 정책협력 필요성
- 지속 가능한 고령화 사회 모델을 구축하여 급속하게 고령화하는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제시할 필요
- 의료기기/제약/간병로봇 등 고령화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 코스트 삭감, 시장확대, 표준화 등
- 한국과 일본은 의료기기/제약 산업에서 무역적자국 : 공동 대응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고령화 제품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책정 노력

② 신산업 분야 공동 대응 : IoT, 로봇, 재생의료 등

- 양국 모두 기존 제조업 성장의 한계 : IoT, 로봇, 재생의료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필요
- 신성장 산업의 애로사항 제거 : 규제, 표준화, 해킹 대응
- 또한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 극복도 공동 과제 → 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

③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 기존의 전자·자동차 등 치열하게 경쟁하던 모드에서 상호 협력하는 모드로 전환할 필요
- 현재도 자원개발, 공단개발 등에서 협력
- 향후에는 인프라·제조업·인재육성 등의 분야로 확산할 필요
- 제3국에서 비교우위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
→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한 태국의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의 전자산업 클러스터

④ 무역 → 투자 트렌드

- 최근 일본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 등 주로 수출하던 제품들을 한국 내에서 생산하는 움직임
- 한국 대기업의 수요에 재빨리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
- 한국투자 일본기업의 76.2%가 영업이익률 흑자 기업(JETRO조사) : 아시아태평양 지역 3위 (1위 파키스탄, 2위 대만)

7

7. 새로운 한일FTA 추진, TPP가입

① 새로운 단계의 「한일 FTA」의 추진

- 기존 「한일 FTA」는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취약한 부품/소재 경쟁력, 일본은 농산품 개방의 부담 등으로 인해 좌절
- 그 후 대일 경제관계 변화, 타지역과의 FTA 체결 등으로 한일FTA의 걸림돌이 상당히 완화
- 새롭게 대두되는 Agenda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한일 FTA」를 추진할 필요
- 관세율 수준 등 기존에 중시하던 한일 FTA 협상분야를 변경할 필요
- 서비스 산업 생산성 제고, 신성장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투자, 제도, 지적소유권 등에 중점을 둔 새로운 비즈니스 룰을 정립할 필요
- 메가FTA에서 협상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한일FTA로 선도할 필요

② 한국의 TPP 가입으로 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룰 확립에 기여할 필요

-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국도 TPP 가입 분위기 조성 → TPP 협상 타결로 한국의 참여 가능성 커짐
- 일본은 한국의 TPP 가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룰을 한국과 함께 선도할 필요
- TPP는 관세보다는 제도·투자·지적소유권 등 비즈니스 룰 책정을 더 중시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 세계 경제대국인 중국도 TPP 등으로 끌어들이며 글로벌 비즈니스 룰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
- RCEP, 한중일 FTA 등에서 중국의 개방·글로벌 비즈니스 룰 준수를 유도할 필요
- AID, ABID가 협력하여 아시아 인프라 시장을 육성할 필요

8

세션 4: “양국 정치관계의 미래”

한일 정치관계의 미래

내년 총선에 매몰된 한국 정치

한국에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 20대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인 주도권 다툼에 들어갔다.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진검승부를 펼치기에 앞서 보수와 진보 진영은 지금 각기 내전에 가까운 싸움을 수행 중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선 공천권 장악을 위한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이른바 비주류)의 명운을 건 공방전이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호남을 근거지로 삼는 신당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파괴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당들은 결과적으로 야권분열을 촉발시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줄 가능성이 커보인다. 야권은 내년 총선까지 특유의 이합집산을 계속하면서 한동안 극도의 혼돈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든 야든 내전에서 승리한 쪽은 총선을 거치면서 당내 대주주로 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전리품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는 총선일정이 크고 작은 정치적 사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인구편차를 반영한 선거구 재조정에서부터 총선후보 공천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돼 있다. 당연히 그들의 관심리스트에 ‘한일관계’는 아주 낮은 단계에 밀려나 있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못해왔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한국의 정치권이 앞장서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주는 완충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유감스럽게도 발표자의 진단이다. 오히려 한국의 정치권이 양국관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행이라고 위안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예감은 과히 좋지 않다. 정치가 바다를 건널 때 국내용으로는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일문제’를 정치적 프레임에서 다루려는 유혹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총선 앞두고 한일관계 더 악화 가능성

한국의 내년 총선은 4월 13일에 치러진다. 그때까지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지 못한다면, 한국정부는 선거 한달 여를 앞둔 내년 3.1절에 맞춰 매우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정부차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메시지는 여당의 정서를 대변하는 쪽으로 한국의 유권자들에게는 투영될 것이다. 내년에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권재창출의 디딤돌로 총선승리가 절실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으레 정치권은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며, 일본과의 대외관계에서도 이런 경향성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가을 한일정상회담이 3여년만에 열릴 예정이어서 내년 봄의 한일관계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일본과 대립각이 커지는 것은 선거판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특히 개인적 판단으로는 보수진영의 선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보수정파가 대일관계에서 더 강경해

이런 진단의 근거는 그동안 역대정부의 사례를 되돌아볼 때 보수정파가 진보세력에 비해 일본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유명한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한일관계의 경색을 몰고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년에 독도를 전격 방문했고, 그 동기와 당위성 여부와는 별개로 한일관계 냉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박근혜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냉철한 역사인식이라는 엄격한 원칙을 일본 아베 정부에 촉구했다. 그 주문은 3년이 가까워오는 지금까지 그 강도가 약해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진보진영이 집권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한일관계에서 ‘전향적’으로 기록될만한 장면이 많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 대중문화에 오랫동안 채워졌던 수입금지의 빗장을 풀어줬다. 지금은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재임기간에 이뤄진 일본 방문 때 TBS TV에 출연해 시민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당시 일본내 반응도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국 차기정부 출범때까지 한일관계 ‘흐림’

박근혜정부는 2012년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고, 일본 아베 정부의 극적인 변화가 없는한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공산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로 미뤄봤을 때 정해진 레일을 벗어나는 ‘파격’ 보다는 기왕에 정해놓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데 충실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에서 견지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완고한 원칙론은 대일관계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대일관계에서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180도 태도를 바꾸어 일본을 끌어안는 파격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즉 향후 2년 가까운 기간에 그간 쌓였던 앙금을 상당부분 털어내고 사이좋은 이웃국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박근혜정부 들어 상당히 돈독한 우호관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최근 박대통령이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애증의 관계에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대통령 당선자를 대신해 특사로 중국을 다녀왔고, 본인이 집권여당의 대표로 당선되고 나서는 베이징과 상하이로 방문했다. 이런 행보를 놓고 봤을 때 한일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에는 일본 보다 중국에 가중치를 둔 정치·외교적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차기정부 출범후에도 한일관계 장담못해

한일관계가 적어도 일반적인 나라간에 소통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웃국가관계가 될 수 있을지는 한국에서 차기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할 문제로 여겨질 정도로 현재 상태는 ‘냉동 관계’ 그 자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국의 차기정부는 박근혜정부의 대일관계 원칙론 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박대통령처럼 ‘원칙’을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워 성장해온 정치인은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 중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도 보수정권이 재탄생할 가능성을 발제자는 크게 보기 때문에 다소간의 개선은 있겠지만 획기적인 관계개선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물론 이런 추론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재경험과 관찰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잠시 한국의 2017년 대선환경을 조망하자면, 한국의 유권자 지형은 이미 보수진영에 유리하게 상당히 보수화된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진단된다. 헌법개정이 마지막으로 이뤄졌던 1987년 이래로 한국은 민주화라는 고속도로에 빠르게 진입했고, 이른바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가 해체되어가면서 사회전반이 부지불식간에 보수색채를 강화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도래한 노령화 사회는 보수화된 유권자층을 두텁게 했다. 또한 데모와 시위를 ‘현재진행형’이 아니라 ‘가까운 과거의 역사’로 학습하는 신세대들의 상당수도 ‘모태 보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자는 진단하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집단의사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신세대들의 보수화를 입증하는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 스마트폰에 갇혀 성장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개인화가 극도로 발달한 상태이며, 집단적 행위를 통해 사회변혁 같은 로망을 스스로 폐기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민주적 방법으로 집단의사를 표시하는 투표행위에 있어서도 이런 개인화는 또래집단에서 정서적으로 강요되는 특징이념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발표자는 파악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차기 대선판은 이미 이념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야가 맞붙는 구도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보유권자들에게는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희망고문’, 즉 희망을 강요해서 심적으로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이 될 개연성이 크다.

한일관계는 단기 . 중기적으로 ‘희망’ 낮아

다시 한일관계로 돌아가자. 양국관계는 가깝게는 한국의 내년총선까지, 멀리는 2017년 한국의 대선과 그 이후까지 그다지 밝아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한국내 정치현실과 앞으로 전개될 정치상황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 정치인들이 양자관계를 위해 수행한 일이라고는 고작 매우 의례적인 의원협회간 교류, 반상의 대결로 포장된 단순한 친목수준의 바둑두기, 여자 국회의원까지 가세한 어설픈 축구시합이 고작이다. 극히 낮은 단계의 교류가 진행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공식 외교채널이 뚝뚝 얼어붙어 딱 막힌 양국관계에서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파이프는 실종되어 버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양국의 공식적인 외교전선의 사이드라인에서 굵직한 문제를 통크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정치인이 사라진 탓도 크다.

배상문 - 마쓰야마 히데키 같은 콤비네이션 불가능한가

얼마전 한국에서는 프레지던즈컵 골프대회가 열렸다. 미국대표팀과 인터내셔널 대표팀이 맞붙는 격년제 경기다. 10일 치러진 포볼과 포섬 경기에서 한조를 이룬 배상문과 마쓰야마 히데키. 오전에는 무승부, 오후에는 무려 다섯홀을 남기고 6홀차 승리를 따내는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을 보여줬다. 좋은 성적을 거둔 두 프로골퍼는 팀워크가 생명인 포볼과 포섬 경기에서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파트너를 지켜세우며 우의를 과시했다. 참으로 웃을 일 한번 없던 한일관계에서 그래도 스포츠가 한걸 해줬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진하기 그지없는 질문이지만, 왜 이런 일이 꼭 스포츠에서만 가능해야 할까? 아무리 “개인간에는 우정이 존재하고, 국가 사이에는 오로지 이익만 존재한다” 는 냉엄한 외교. 정치적 현실이 있다고 해도 지금의 한국과 일본은 교차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발표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도쿄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다. 당시 한일관계는 정치. 외교적으로 심한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그래도 “살아있었다”. 도쿄에 특파원으로 부임하자마자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곧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탄생,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문제로 엄청나게 고생했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하지만 나락으로 추락했던 양국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일 월드컵공동개최라는 대형이벤트를 통해 생기를 되찾았다. 한일 월드컵은 배상문과 마쓰야마라는 스타 플레이어의 차원을 넘어 한일 양국의 스포츠계를 비롯해 외교와 정치, 그리고 전국민이 폭넓게 플레이어로 동참하는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복원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이야말로 양국사이에서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일외교관계수립 50주년은 그래서 더할 나위없이 좋은 기회였으나, 안타깝게도 실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올해가 다 가기 전까지 다행히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다. 교착상태에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양국의 경직된 외교채널 보다는 정치권이 맡는 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국 정치관계의 미래는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미뤄볼 때 여전히 밝지 않다. 지금 한국 정치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뜨거워서 한일관계의 외교전선을 바라볼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의 빛 줄기를 찾으라고 한다면? 내년 총선이 끝나고 여의도 국회에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일관계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섞인 기대감은 남아있다. 그 시기마저 놓친다면 한일 정치관계의 미래는 한동안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려날 것이다.

앞으로의 양국 정치관계

1) ‘안보’ 에서 ‘경제’ 로 = 일본 정치의 계절 변화

- 자민당 총재 선거, 내각 개조에 따라 내세운 것은 ‘1억 총 활약 사회’. 새로운 ‘세 개의 화살’ 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 화살은 ‘희망을 낳는 강한 경제’, 두 번째 화살은 ‘꿈을 만들어 내는 육아 지원’, 세 번째 화살은 ‘안심하고 이어지는 사회보장’.
- GDP600 조엔 달성. 희망 출생률 (젊은 세대가 희망하는 대로 아이를 가졌을 경우를 상정한 출생률) 1.8 실현.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 유지. ‘요양간호(介護) 이직제로’ 와 생애 현역 사회.
- 현실은 1997년의 523 조엔을 정점으로,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후인 1993년부터 2014년까지 490~510 조엔 사이를 오가고 있다 (표 1 참고). 합계 특수 출생률은 2005년의 1.26이 최저이며, 2014년에는 1.42(표 2 참고). 인구는 2050년에 9700만명대로 감소 (표 3 참고). 요양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현재 550만명으로, 2025년에 700만명, 요양간호 직원은 현재 130만명으로, 2025년에는 220만명이 필요.
- 뒤로 미루어진 과제의 중요한 부분 (경제 재정, 재정 위기, 저출산 고령화, 사회보장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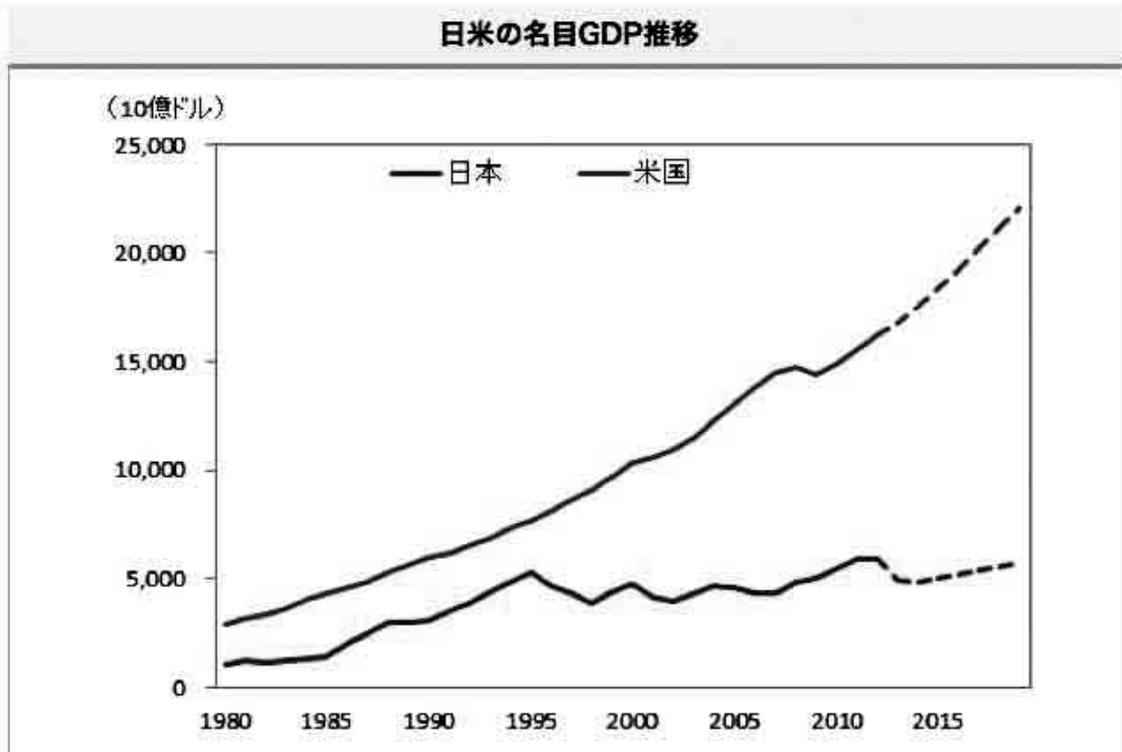
2) 선거 모드 = 2016년 여름에 참의원 (參議院) 선거

- 최근의 국정 선거 결과
 - ☆ 2010년 참의원 선거 = 자민 51, 공명 9, 합계 60(49.5%), 비개선 (非改選) 과의 합계 103 (42.5%)
 - ☆ 2012년 총선거 = 자민 294, 공명 31, 여당 합계 325(67.7%)
 - ☆ 2013년 참의원 선거 = 자민 65, 공명 11, 여당 합계 76(62.8%), 비개선과의 합계 135 (55.7%)
 - ☆ 2014년 총선거 = 자민 291, 공명 35, 여당 합계 326(68.6%)
 - ☆ 2016년 참의원 선거는 자민 · 공명 연립정권의 장기 안정화에 있어 중요
- 여론조사 결과로 보는 국민 반응의 복잡성 (아사히신문 [朝日新聞])

조사 일자	아베내각 지지	아베내각 지지않음	안보법 찬성	안보법 반대	자민 지지	민주 지지
7/11.12	39	42	26	56	32	9
7/18.19	37	46	29	57	31	10
8/22.23	38	41	30	51	35	10
9/12.13	36	42	29	54	36	10
9/19.20	35	45	30	51	3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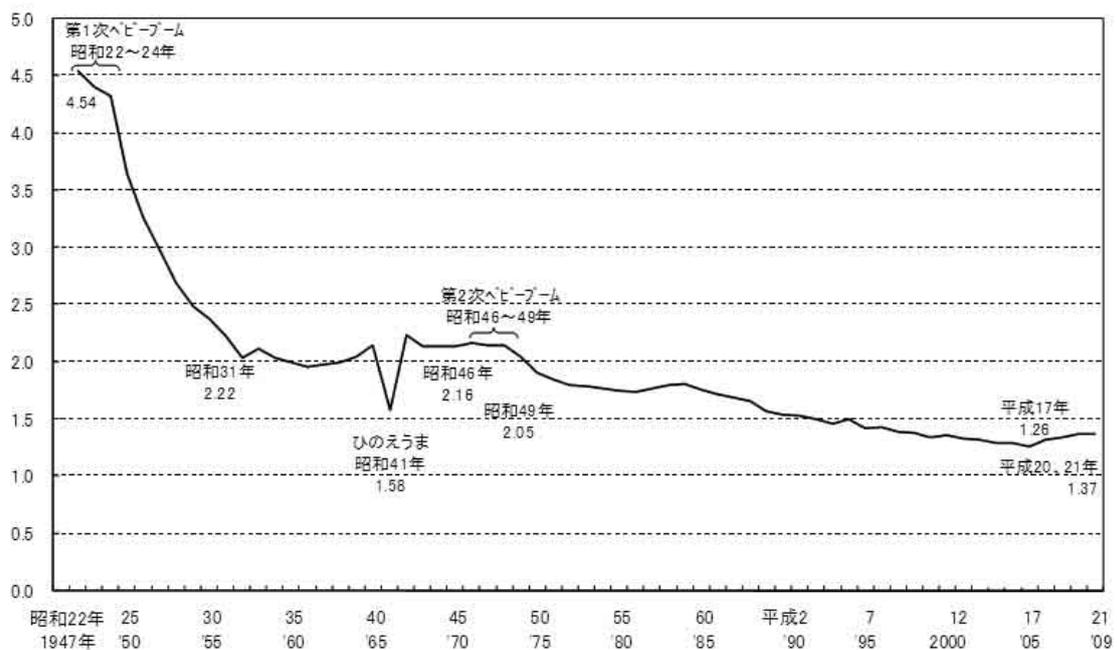
참고 = 안보관련 법제의 중의원 통과는 7월 16일, 성립은 9월 19일

(표 1) 미일 명목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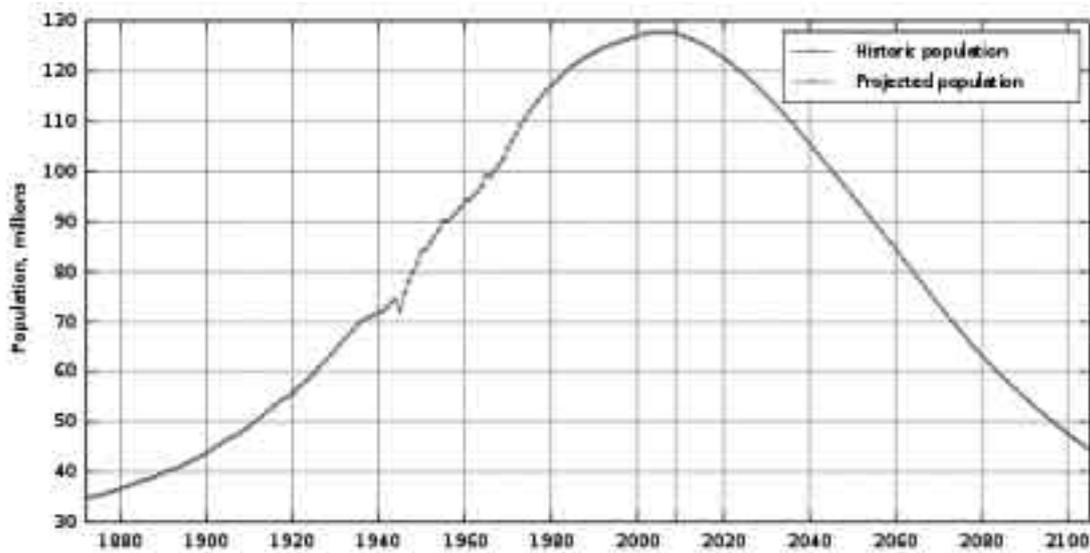


(出所) IMFデータよりマネックス証券作成 2013年以降はIMF予測

(표 2) 합계 특수출생률의 연차 추이 - 1947-2009 년 -



(표 3) 일본의 인구 추이 그래프



3) 이제까지의 한일 정치관계

- 자민당은 매과와 비둘기과의 결합 정당 (공직에서 추방당한 ‘전전(戰前)과’와 ‘요시다(吉田)독트린’). 정당 결성시의 문서인 ‘당의 사명’에서는 미국의 점령정책을 철저하게 비판.
- 80년대 = ‘관용의 시대’. 교과서 문제는 대립문제가 되지 않음. 비둘기과뿐만 아니라 매과가 협조하여 교과서 문제에 대응.
- 90년대 = ‘비둘기과의 시대’. 무라야마(村山)수상이나 하시모토(橋本)수상의 위안부 문제 대응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디어도 비판. 일부 각료의 ‘망언’이 과도하게 문제시된다. 그 결과, 한일 간에 안정적인 관계가 제도화되지 못함.
- 00년대 이후 = ‘매과의 시대’. 게이세이카이(経世会)에서 세이와카이(清和会)로. 자민당은 적극재정, 부의 재분배로부터 매과 이데올로기에 역점을 두는 쪽으로 변화한다. 한일 모두 대중 민주주의와 내셔널리즘, 텔레비전을 의식한 정치(telepolitics), ‘여론조사 정치’의 시대로. 정치가 여론에 컨트롤 당하는 시대에 들어선다.
- 한일 모두 ‘대두하는 중국’이라는 요인에 직면한다 = 미국과의 동맹은 공통되지만, 중국과 마주하는 일본, 중국에 접근하는 한국에서 노선의 차이. ‘한중’대 ‘일본’이라는 구도도 생겨난다. 역사문제에 더해 중국 요인이 한일의 외교 안보 정책에 영향을 준다.

4)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변용

- 고전적 외교공간 = 일부 엘리트나 관료, 유력한 개인이 양국 관계를 규정했다. 외교의 근대화, 투명화에 따라 불가능해졌다.
- 정상외교의 시대 = 정상의 사상, 전략과 전술, 사고방식이 양국 관계를 크게 규정하는 시대. 정상회담과 거기까지 가는 길이 중요.
- ‘외교의 대중화’ = ‘정치’와 ‘여론’ 사이의 힘의 역전. 외교의 콘텐츠를 정치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시대로. 인터넷 공간, 여론조사 결과, 매스미디어가

영향력을 가지며 정치가 이를 따라 간다.

- ‘외교’ 를 권력 유지에 이용하는 사례도 생겨난다. 위정자가 내셔널리즘에 영합하여 합리적 정책결정을 포기한다.
- ‘규탄·비판 저널리즘’ 과 정치 앞에 위축되는 관료와 아카데미즘 (기무라 간 [木村幹] 『한일역사인식문제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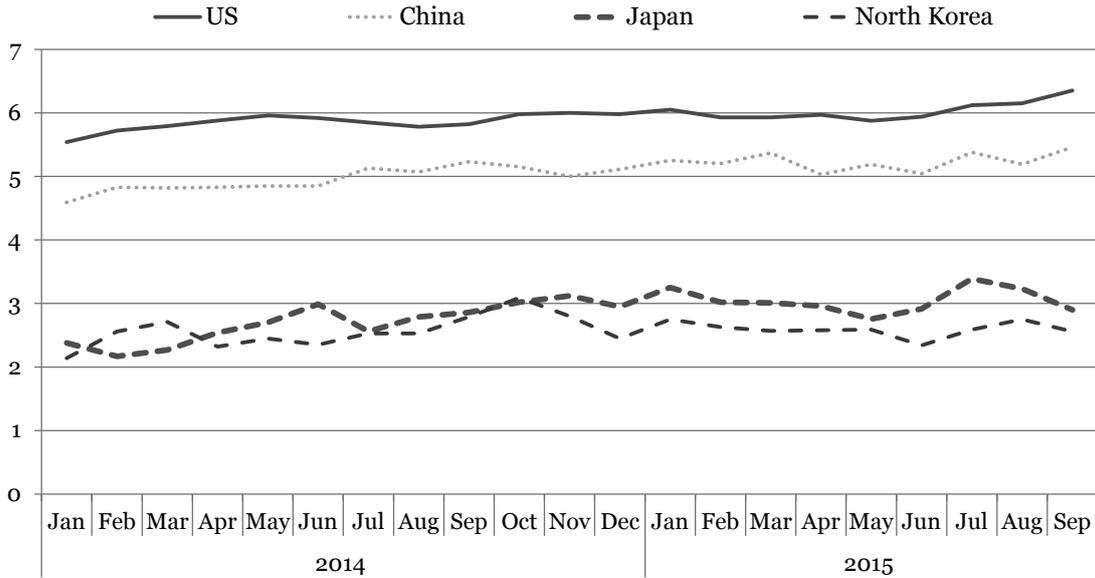
이상

세션 6: “양국 정치관계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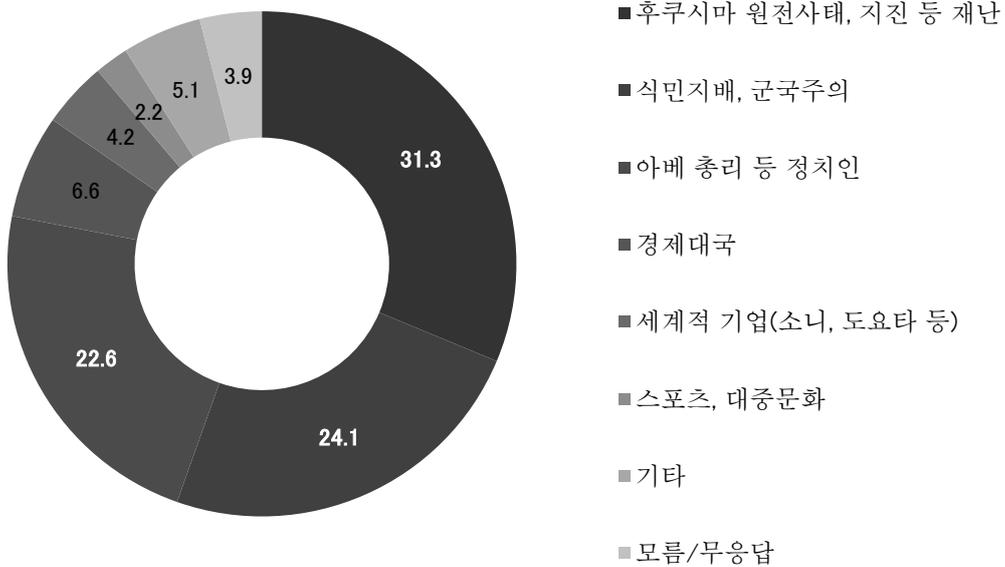
한일관계의 미래

주변국 선호도

전혀 좋아하지 않음= 0, 매우 좋아함=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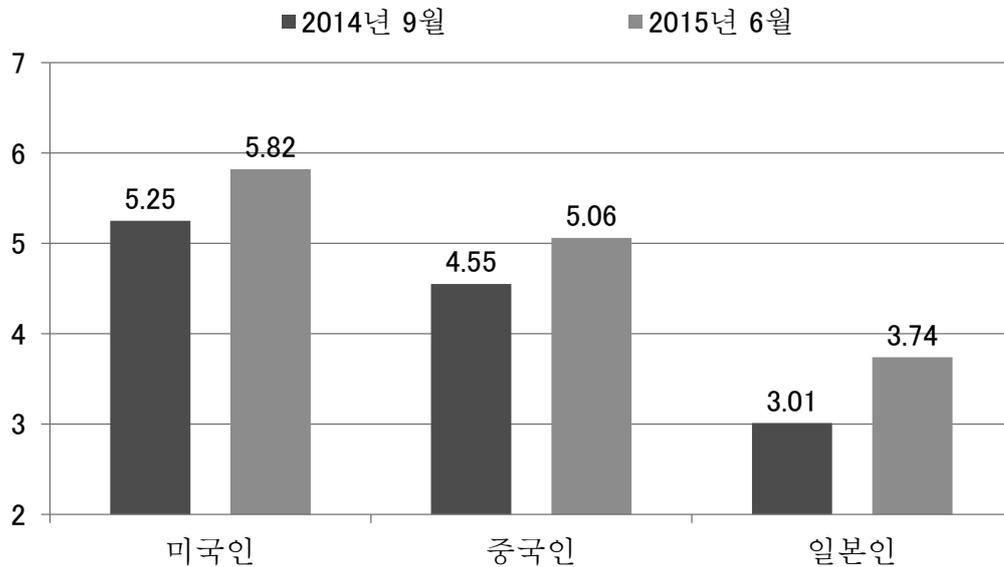
일본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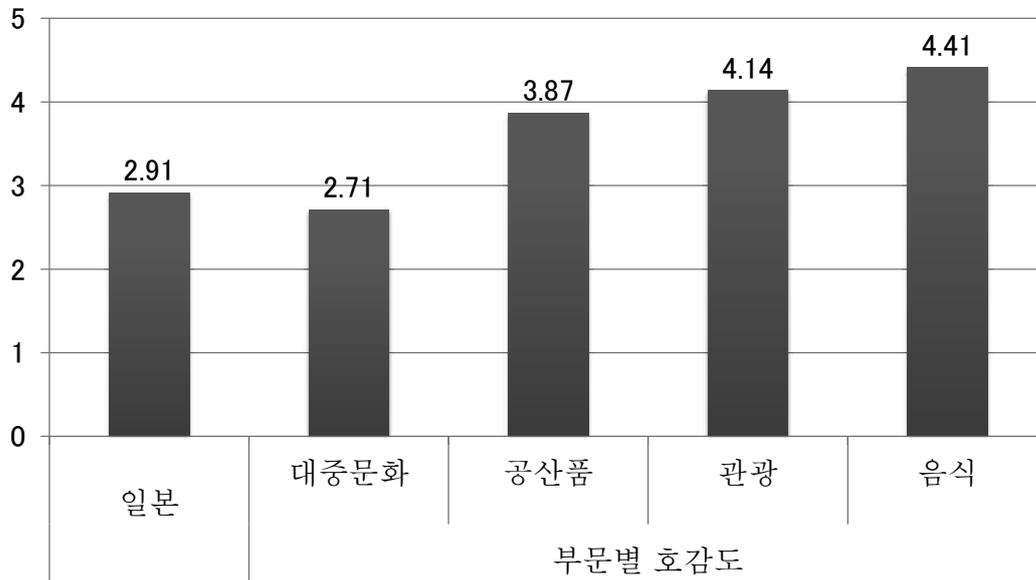
연령별 일본 이미지

	원전사태, 지진 등 재난	식민지배, 군국주의	아베 총리 등 정치인	경제대국	세계적 기업	스포츠, 대중문화
전체	31.3	24.1	22.6	6.6	4.2	2.2
20대	44.9	19.7	10.5	4.8	7.8	4.7
30대	43.5	15.8	21.2	4.8	5.3	3.0
40대	30.4	27.3	26.2	8.6	2.5	0.9
50대	24.6	27.7	28.3	8.1	3.3	0.4
60세 이상	17.2	28.3	25.1	6.3	2.8	2.1

주변국민 호감도



일본에 대한 부문별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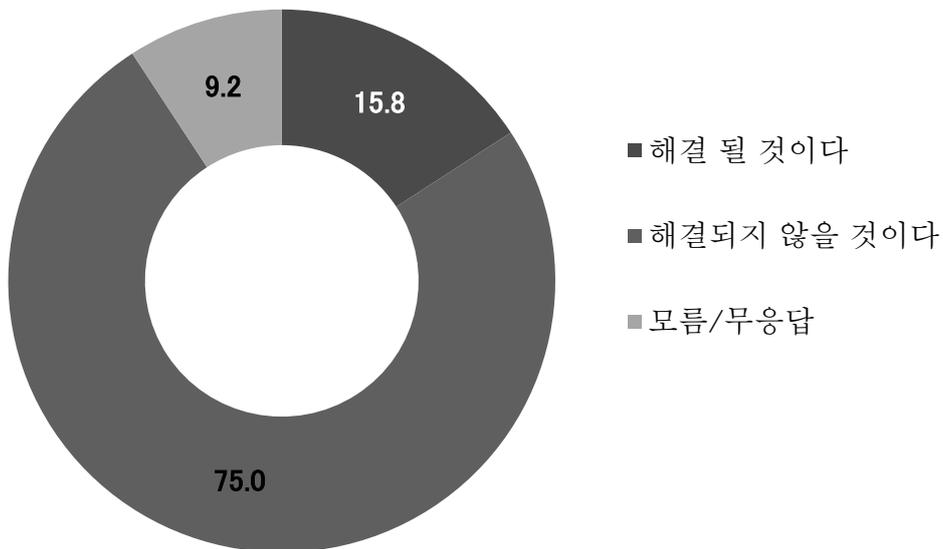
주변국민 호감도: 연령별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전체	3.74	5.82	5.06
20대	5.10	5.73	4.78
30대	4.77	5.30	4.91
40대	3.76	5.53	4.86
50대	3.12	5.96	5.47
60세 이상	2.30	6.51	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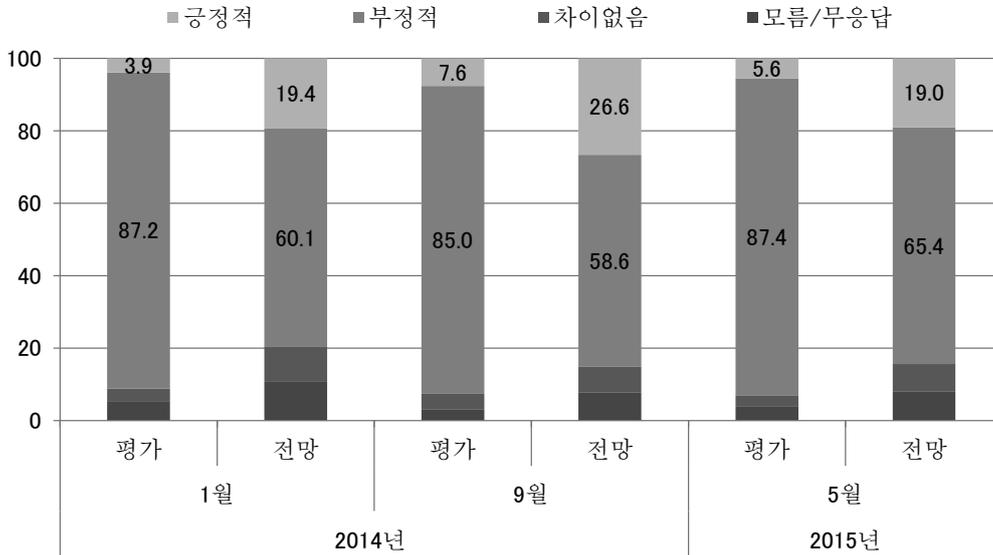
일본에 대한 부문별 호감도: 연령별

	음식	관광	공산품	대중문화
전체	4.41	4.14	3.87	2.71
20대	5.55	4.68	4.75	4.02
30대	4.81	4.53	4.26	3.07
40대	4.27	4.17	3.84	2.29
50대	4.11	4.15	3.57	2.18
60세 이상	3.35	3.27	3.11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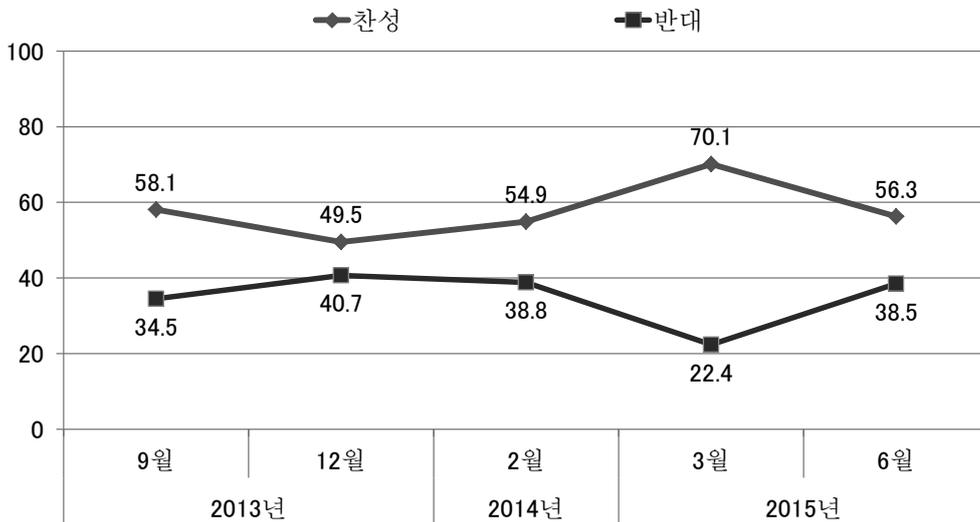
한일관계와 역사 문제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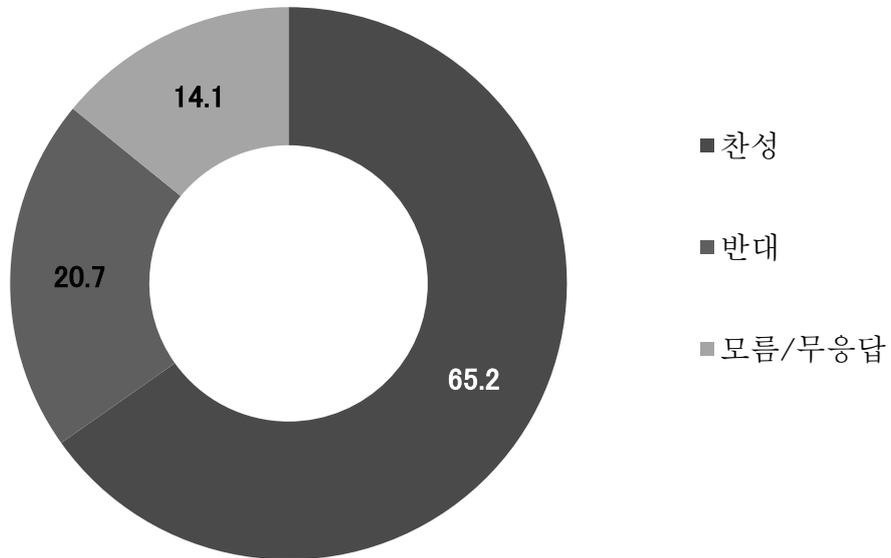
한일관계 평가 및 전망



한일 정상 회담 해야 하는가?



'투 트랙' 대일 외교: 과거사와 한일협력 분리



『역사란 무엇인가』 - 저널리즘의 현장에서 역사문제를 생각한다』

1. ‘살아 있는 과거’

▼ E.H. 카의 역사관에서 배우자! (『역사란 무엇인가』 이와나미신서 1989년 제 39쇄를 참조)

• 카의 명구(名句)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 줄 모르는 대화인 것입니다”(40쪽)

이 명구에 깃들여 있는 카의 역사가로서의 철학이란??

○ 19세기의 ‘사실 존중’ ‘사실 숭배’ 주의에 대한 반론과 도전, 그리고 분단된 역사관 논쟁의 초극 / 사실 숭배 = ‘사실은 그 스스로 말한다’ ‘사실을 사실로서 말하게 한다’

= 역사가는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의심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 “이것 (= 사실이 스스로 말한다) 은 거짓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역사가가 사실에 호소할 때에만 말하는 것입니다.” (8쪽) “역사적 사실이라는 지위는 해석의 문제에 의존하게 되겠지요. 이 해석이라는 요소는 역사상의 모든 사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쪽)

= 역사가가 선택한 ‘기초적 사실’ 위에 역사가의 ‘해석’ 이 더해진다

○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답하려고 할 때, 우리들의 답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들의 시대적인 지위를 반영하며, 또한 그 답은 우리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한층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답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3쪽)

= 역사적 사실과 그 해석이 비추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

○ “역사가들은 한 조각의 철학으로 몸을 가리는 일도 없이, 맨몸인 채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역사라는 신 앞에 서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쪽)

= 19세기에는 볼 수 없었던 ‘역사철학’ 의 중요성. 역사가의 임무는 단순히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

○ “역사상의 사실은 순수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 항상 기록자의 마음을 통해 굴절되어 오는 것” (27쪽)

= 역사가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우선 기록하는 사람을 앞으로써 진리를 꿰뚫어보자!

○ “두 개의 험한 길” ① 역사를 사실의 객관적 편찬이라 생각하고 해석과 비교하여 사실의 무조건적 우월성을 논하는 접근법 (= 역사는 순수한 객관적 산물) ② 역사상의 사실을 분명히 하고 해석의 과정을 통해 그 사실을 정복하는 접근법 (= 역사는 역사가의 마음의 주관적 산물)

= 역사가는 ‘두 개의 험한 길’ 을 위태롭게 항행하고 있다! “역사가는 사실의 조심스러운 노예도 아니며, 그 포박한 주인도 아니다. 역사가와 사실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 (39쪽)

- 베네데토 크로체 (Benedetto Croce 이탈리아의 철학자, 1866-1952) “모든 역사적 판단의 기초에는 실천적 요구가 있으므로, 모든 역사는 ‘현대적’ 이라는 성격을 부여 받는다. 왜냐하면 서술되는 사건이 멀리 떨어진 시대의 것으로 보여도, 사실은 그 역사가 현재의 요구 및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
= 역사가 가지는 현대사적 측면, ‘지금’ 과의 불가분성

2. 저널리즘의 참뜻을 생각한다

▼카의 말을 되새기면서

○ 저널리스트는 역사가의 ‘예비군’

“Journalism is the first rough draft of history,” said Washington Post publisher Philip Graham.

○ 그러나 ‘초고를 초고로 끝내지 않는’ 노력이야말로 불가결

- 저널리스트의 참뜻 ① 권력 감시 ② 건전한 언론공간의 창출 - 에 의한 민주주의 뒷받침
- 일회성의 특종보다도 “turn untouched stones”
- 조사 보도에 의한 권력 감시, 진상규명이야말로 거대 미디어의 본래적 기능

○ ‘보다 나은 정책’ 실현의 견인차 역할로

- 정책순환 (policy cycle) 론 ‘정책은 생물’ ‘정책입안 → 결정 → 집행 → 평가 → 재입안 → 시행 ...’ 부정이나 불합리를 폭로하는 미디어와 공문서 공개의 중요성
- 제퍼슨 미국 대통령의 명언 “신문 없는 정부냐 정부 없는 신문이냐 라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고르겠다”

○ 저널리스트는 역사문제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 역사가와 마찬가지로 저널리스트에게 요구되는 ‘해석’
- ‘사실’ 을 응시하고 그 ‘해석’ 을 뒷받침하는 저널리스트의 철학과 윤리란
→ 나에게 있어서의 격언 “인민의 복지는 최고의 법이다” (존 로크 시민정부론 1722 년 런던 간행 제 7 판의 서문) = 만인이 적어도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미디어는 이것에 불가결한 수단
- 독자도 주의가 필요 =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쓰는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함

○ 저널리스트에게 ‘국적’ 은 있지만 ‘국경’ 은 있는 것인가

3. 마지막으로 - ‘미래지향’ 을 생각하자

○ 이리에 아키라 (入江昭) 하버드대 명예교수 :

“나를 포함한 현대의 많은 역사가들은 대국 중심, 전쟁 중심의 사관을 피하고 가능한 한 지구 전체, 국가를 벗어난 (트랜스 내셔널 [transnational] 이라 부르고 있는) 움직임을 파악하려 해 왔다. 근대 국가가 출현한 18 세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류는 존재했고, 20 세기 후반이 되면 국가의 상대적 권력이 저하하여 국경을 뛰어 넘은 인간관계,

연결이 발전해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른바 **글로벌 사관, 트랜스 내셔널 사관**을 보면, 1945 년이라는 해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략) 그리고 적어도 1970 년대에 들어서 제국주의나 패권주의에 의지하지 않는 국제사회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 의미에서 현대 세계는 국경을 뛰어 넘은 연결이 깊어지며, 동시에 구미(歐米) 지배가 약해지는 70 년 이후에 탄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1970 년 이후의 역사는 글로벌화의 역사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상대적 약화와 인권 의식의 고양이다.** 국가가 아닌 세계, 정치 지배가 아닌 경제적 흐름, 구미 중심이 아닌 인류의 다양성, 혼합성의 존중 등이 현재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략) 이렇게 해서 역사를 ‘바라보면’, 일본이 ‘현대 세계’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도 일반 시민도 타국의 사람들, 특히 중국, 한국인 등과의 연결을 깊이 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들이 ‘바라보는’ 역사도 일국 중심적인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도통신 독자 칼럼 <현론(現論)> 9 월 10 일 ‘지구 전체의 역사관을 바라본다’ 에서 발췌)

○편협한 내셔널리즘에 빠지지 않고, 국익을 뛰어넘은 지역의 이익, 트랜스 내셔널한 이익, 트랜스 리저널(trans-regional) 한 이익, 국제적 이익, 그리고 국적이나 국경을 뛰어넘은 이름 없는 시민들에게 공통된 이익의 실현을 !!